

2005.3

특 집 혁신 선도형 중소기업 육성

|경제정책해설|

- 부품·소재 산업 발전전략 마련
- 지자체 기용재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력화 대책' 추진
-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 개통

|기획기사|

창업,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탐방|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국



인터뷰 최홍건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달의 초점|

외국자본, 그 순기능과 역기능 - 바람직한 대응방안은?

|세계경제의 현장|

- OECD의 지배구조 논의동향
- WTO 무역원활화 협상 논의동향

나라경제

2005. 3 통권 제172호



2005년 2월호

| 탐방 |

04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국
과학기술 혁신을 이끈다 / 위정환



| 특집 | 혁신 선도형 중소기업 육성

- 12 중소기업을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의 중심축으로 육성 / 김진형
- 17 중견기업으로의 도약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주력해야 / 최성호
- 21 중소기업의 혁신 강점 살리는 정책 마인드를 / 최동규
- 25 中企 중심 혁신 주도형 산업구조의 조기 정착을 / 조유현
- 29 중소기업을 '창조·혁신의 모체'로 인식해야 / 신미남

| 이달의 초점 |

외국자본, 그 순기능과 역기능 - 바람직한 대응방안은?

- 34 명암을 동시에 살피는 균형잡힌 시각 필요 / 이철
- 38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서둘러야 / 김정식
- 41 사모펀드 등 국내자본 적극 육성해야 / 최공필



우리 산야에 피는 꽃 산사초

9쪽

45 **생활경제** 연초 금리상승과 대응전략 / 한상언

| 인터뷰 |

47 **최흥건**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 화제의 공무원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국 박우진

52 **지자체 공유지 관리에 경영 마인드 도입** / 이재열

| 경제정책해설 |

56 **부품·소재 산업 발전전략 마련** / 김경중

60 **지자체 가용재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력화 대책' 추진** / 안세경

64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 개통** / 심성근

| 정책담당자 칼럼 |

67 **'2005 유엔 아·태 환경과 개발 장관회의' 서울 개최** / 이민호

| 기획기사 | 창업,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72 **전문가 제언**: 사업 전문지식과 기업가적 능력을 동시에 확보해야 / 정헌배

74 **창업절차와 지원정책들** / 편집실

| 세계경제의 현장 |

86 **OECD의 지배구조 논의동향** / 정택환

91 **WTO 무역원활화 협상 논의동향** / 장성길

95 **세계경제현장 리포트** 미국편: 경기 호조세 보이는 세계 최대 시장 / 김재효

98 **주요 경제지표**

발행 KDI 경제정보센터
편집 경제부처합동편집위원회
발행인 김중수 KDI 원장
편집인 조원동 재정경제부 정책기획관

편집위원

재정경제부 진승호 경제홍보지원과장
외교통상부 이연수 통상기획홍보팀장
과학기술부 강영철 종합기획과장
농림부 심상인 행정법무담당관
산업자원부 조성근 법무담당관
정보통신부 서병조 혁신담당관
보건복지부 권덕철 기획예산담당관
환경부 김학주 정책총괄과장
노동부 최수홍 기획예산담당관
건설교통부 정병윤 기획담당관
해양수산부 김양수 기획예산제도과장
기획예산처 정홍상 예산제도과장
공정거래위원회 김학현 총괄정책과장
금융감독위원회 진웅섭 기획과장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김진형 총괄조정팀장
행정자치부 정현을 재정정책과장
KDI 경제정보센터 김인철 정책홍보실장
편집간사 이재영 재정경제부 경제홍보지원과

편집장 심재학 KDI 경제정보센터
편집기자 이재열, 유성임, 이정미
배포업무 안현희

발행일 2005년 3월 1일(매월 1회 발행) 제16권 제3호(통권 제172호)

등록일 1990년 11월 14일(문화라 04859호)
발행처 KDI 경제정보센터 ISSN 1277-8033 3
주소 (130-012)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207-41
(130-650)서울 청량리우체국 사서함113

전화 02-958-4114
팩스 02-3295-0744
홈페이지 <http://epic.kdi.re.kr>

e-mail nara@kdi.re.kr
기사의문의 02-958-4634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02-958-4318

구독료 권당 2,500원, 연간 25,000원

인쇄 고려문화사 2277-1509

「나라경제」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나라경제」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필자의 소속 기관이나 본지의 공식견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국



앞줄 좌로부터 강영철 종합기획과장, 한승희 과학기술정책국장, 이동진 인력기획조정과장, 뒷줄 좌로부터 오일근 과학기술정보과장, 강갑수 기술혁신제도과장, 오대석 종합기획과 서기관, 안준모 종합기획과 사무관

과학기술정책국은 21세기 지식기반경제시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혁신을 주도하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신설된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주무국이다. 과학기술혁신정책 총괄 조정, 기술혁신 지원과 지방과학기술 진흥, 과학기술 관련 정보의 유통·관리 등의 중요한 과제가 과학기술정책국에 주어져 있는 것이다.



과학기술 혁신을 이끈다

과 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국은 우리나라 과학 기술 혁신을 주도적으로 추진토록 하기 위해 지난해 신설된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주무국이다.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출범한 것은 시대적인 변화를 받아들여 적극 대처하려는 정부의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60년대 초 1인당 국민소득 100달러 미만의 최빈국에서 출발, 불과 30여년 만에 국민소득 1만달러 수준의 경제로 성장했다. 정부의 확고한 주도력과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 外資 도입 등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고속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노동과 자본의 양적투입에 의한 성장이 한계를 보이면서 지난 10년 동안 1만달러대 소득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선진국의 견제와 후발국의 추격 속에 우리나라가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마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과 자본력에 의한 성장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고 대신 과학기술과 지식에 기반을 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과학기술이 국가 경쟁

력의 핵심요소로 부상한 21세기 지식기반경제를 맞이하여 새로운 성장 전략의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국가의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총 집결해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돌파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과학기술행정체제를 개편해 과학기술부를 부총리 부서로 격상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했다.

과학기술행정체제의 개편으로 부총리가 과학기술 정책과 관련 산업·인력·지역혁신 정책을 과학기술혁신본부를 통해 범부처적으로 종합 조정하게 되었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전부처의 연구개발(R&D) 예산을 총괄·조정하는 연구개발조정관실, 과학기술정책을 종합 조정하는 과학기술정책국, R&D 사업을 평가하는 기술혁신평가국으로 구성되었다.

과학기술정책국은 모두 4개 과에 3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혁신본부의 실질적인 주무부서로서 관련 부처의 R&D 정책을 총괄한다는 점에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한다.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종합기획과를 중심으로, 기술혁신과 지방과학기술 진흥을

책임지고 있는 기술혁신제도과, 과학기술지식과 정보를 총괄하는 과학기술정보과,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조율하는 인력기획조정과가 있다.

세계에 유례가 없는 형태로 출범한 과학기술혁신본부는 타 부처 직원들은 물론 외부 민간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해 출범 초기부터 독특한 인적구성으로 주목을 받았다. 과학기술부 출신과 타 부처 출신 그리고 민간 출신을 4:4:2의 비율로 충원했다. 기존 과학기술정책 전문가와 다양한 출신배경과 경험을 가진 외부 전문가들이 힘을 합해 참신한 아이디어와 시각을 통해 혁신적인 국가 연구개발정책을 제대로 추진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

우선 과학기술정책국을 이끌고 있는 수장부터 기존의 과학기술부 출신이 아니다. 한승희(행시 23회)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재정경제부 출신으로 거시경제정책에 잔뼈가 굵은 경제통이다. 오 명 부총리와 임상규 혁신본부장이 최고의 인재로 영입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해 11월 여러 명의 후보 중 혁신본부 주무국장으로 선택받은 인재다.

1980년에 공직에 입문해 주로 경제기획원과 재정경제부에서 근무했다. 미국 버지니아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할 정도로 전문성을 겸비한 것은 물론 프랑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근무한 경험이 있는 등 국제적인 감각도 갖추고 있다. 한국장은 대통령비서실 산업통신비서관, 재정경제부 경제홍보기획단장 등 부처 내·외부 부서의 중요한 직책을 두루 경험하면서 종합적인 시각을 갖췄다는 평이다.

특히 경제홍보기획단장 재직 당시, 일반적으로 어렵게 생각되는 경제정책을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혁신아이디어를 내놓는 등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일처리가 깔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경제정책에 밝은 거시경제정책의 전문가라는 점에서도 과학기술관련 미시경제정책을 다루는 과학기술정책국장에 적임자라는 것이 내외부의 중론이다.

▲종합기획과는 과학기술정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총괄 조정하는 부서다. 책임장관회의와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과학기술 부총리가 부위원장, 각 부처의

장관이 위원으로 참가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운영한다. 또한 대통령에게 과학기술정책에 대해 조언하는 국가과학기술지문회의의 운영을 지원한다. 종합기획과는 이와 함께 혁신주도형 경제구조를 확립하고 과학기술중심사회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국가기술혁신체계(National Innovation System)를 구축하는 업무도 관장하고 있다.

국가기술혁신체계는 주체·요소·성과확산·시스템 기반 등 5개 분야에서 30개 과제를 국정과제로 확정해 범부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뼈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부처의 과학기술관련 정책을 종합하고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업무도 맡고 있다.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외 우수 R&D연구소 유치에 효율적으로 총괄·조정하는 업무도 종합기획과의 주요 업무다. 이 밖에 종합조정지원사업, 정책연구사업, 중장기 정책목표 수립 등 '종합기획'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총괄업무와 기획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과학기술정책과 관련된 각종 현안업무를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기능도 종합기획과의 주요 임무다.

종합기획과를 이끌고 있는 강영철(기시 14회) 과장은 사무관 시절부터 과학기술부에서 근무해 온 과학기술정책 전문가다. 영국 버어밍햄대에서 전자전기공학 박사를 취득한 전문 기술관료로, 기술협력 1과장, 장관 비서관, 연구관리과장, 기술개발지원과장, 조정평가과장, 기술혁신기획팀장 등 과학기술부의 주요 부서를 두루 거친 후 새로 출범한 혁신본부 종합기획과를 이끌게 됐다. 미국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서 근무할 때 뛰어난 대외협상능력을 발휘했고 과학기술부 업무에 대한 이해와 조정능력이 탁월해 주무과장에 적임자라는 평이다.

▲기술혁신제도과는 기술혁신 지원과 관련된 정책과 지역기술혁신정책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며, 새로 신설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새로 신설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여러 부처의 현안을 해결하는 토론의 장으로써, 신기술 인증제



도 통합, 특허청 심사인력 증원 등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부처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또한 기술혁신지원제도 관련 법령 정비, 기술금융제도 개선방안 수립, 국가표준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 기술혁신 지원 업무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 기업 등 산업계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산·학·연 협력을 통해 이를 촉진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그리고 기술혁신이 각 지방에서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국가기술혁신체계와 지역기술혁신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의 가교역할도 하고 있으며, 최근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된 핵심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첨단기술 유출방지과 보호를 위한 법 제정 작업도 관장하고 있다.

기술혁신제도과를 담당하고 있는 강갑수(기시 18회) 과장은 1983년 산업자원부에서 공직에 입문하였고 미 Fairleigh Dickinson University에서 MBA를 취득한 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근무, 정밀화학과장·기술정보신뢰성과장을 거쳐 지난해 11월 기술혁신제도과장으로 부임했다.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산업자원부에서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산업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가 뛰어나다.

▲ 과학기술정보과는 과학기술관련 정책과 정보의 유통·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이다. 기술의 경우 선진국과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특히 과학기술과 관련된 정보는 초를 다룰 만큼 정보의 시의성이 중요하다. 과학기술정보과는 과학기술발전추세 예측의 조사·분석, 국가과학기술표준체계의 수정·보완, 과학기술 통계 및 지표의 체계적 구축, 국가기술지도(NTRM)의 정례적 작성·보완 등 과학기술정책과 관련된 주요 지표들을 생산·관리하고 있다.

또한 국가과학기술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국내외 과학기술혁신정책과 R&D 동향을 분석하는 일종의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종합 포털사이트를 구축하는 업무도 맡고 있다.

과학기술정보과를 맡고 있는 오일근 과장은 민간 출신으로 공모를 통해 영입됐다. 미 버지니아주립대에서 기계공학 박사를 취득한 후 한국전력, 삼성중공업,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근무했다. 다양한 민간 분야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평가다.

▲ 인력기획조정과는 각 부처의 과학기술인력 양성



▲ 2004년 12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정책들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총괄·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최근 이공계 기피현상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미래의 과학기술인력 육성정책을 관장한다.

인력기획조정과는 이공계 기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이공계 공직자 진출 확대방안, 이공계 전공자 채용 목표제, 이공계 석·박사급 우수인력 육성을 위한 장학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검토하고 있다. 또 여성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 등 범부처적으로 관력 시책을 조율하고 있고, 쉽고 재미있는 과학교재 개발사업 등 과학교육 지원도 해 나가고 있다.

과학기술 인력·교육 관련 시책을 조율하는 인력기획과는 이동진(행시 31회) 과장이 이끌고 있다. 이동진 과장은 교육인적자원부 출신으로 교육행정 전문가다. 1987년 공직에 입문한 이래 창원대·부경대·부산대 등 일선 대학교육 현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고 교육인적자원부 대학행정과·고등교육재정과·학술연구지원과를 거쳐 경북대 경리과장, 경상대 기획과장을 지냈다. 또한 미 플로리다주립대에서 교육행정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지난 2000년에는 교육부총리

제 도입을 위한 TF팀에 참여하는 등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교육행정 전문가라는 평을 받고 있다.

과학기술정책국은 경제·과학기술·산업·교육인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새로운 과학기술 행정체제를 꾸려가는 핵심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과학기술정책국이 걸어야 할 길이 탄탄대로인 것은 아니다. 우선 직원들 간의 손발 맞추기가 문제다. 과학기술부, 타 부처, 민간 등 다른 배경을 가진 직원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직원들 간에 손발이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혁신본부 이외 다른 국과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체계도 시급히 구축해야 할 문제다. 게다가 다른 부처와 함께 추진해야 할 업무가 많은 만큼 다른 부처와의 원활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과학기술정책국과 혁신본부가 이 같은 걸림돌을 극복하고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남**

글·위정환 매일경제신문 기자

산자고

(山慈姑, *Tulipa edulis* BAK.)



이른 봄, 산과 들에 봄맞이를 나갔다가 양지바른 곳 잔디 사이에서 별 모양의 아름다운 흰색 꽃을 보신 분이 있을 것이다. 이 꽃이 바로 산자고이다. 산자고는 남쪽에서는 3월부터, 중부 지방에서는 4~5월에 꽃을 볼 수 있다.

노아판(老鴉瓣), 모고(毛姑), 까치무릇, 까추리 등으로도 불리는 백합과의 여러해살이 풀인데, 우리나라 전국 각지

의 산과 들에 많이 자란다. 꽃이 커서 대개는 비스듬히 쓰러져서 피며, 흰색 바탕에 자주색의 맥(脈)이 있고 열매는 둥글고 세모진 모습이다.

예로부터 산자고의 잎과 비늘줄기(鱗莖)를 달래·냉이 등과 함께 봄나물로 즐겨 먹기도 한다.

글·사진 / 김태정 한국야생화연구소장

3 - ?

혹시 자녀의 반도 모르면서 반등수만을 알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성적이 떨어졌다고 혼난 다음날
아이가 두고간 도시락-
혹시 아이의 반을 찾지 못해
당황한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우리 아이에게 중요한 것은
성적이 아니라 학교 생활입니다.

몇반인지 친구와의 관계는 어떤지...
이런 조그만 관심에서 부터
우리의 아이들은 공부 그 이상의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혁신 선도형 중소기업 육성



- 12 중소기업을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의 중심축으로 육성 / 김진형
- 17 중견기업으로의 도약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주력해야 / 최성호
- 21 중소기업의 혁신 강점 살리는 정책 마인드를 / 최동규
- 25 中企 중심 혁신 주도형 산업구조의 조기 정착을 / 조유현
- 29 중소기업을 '창조·혁신의 모체'로 인식해야 / 신미남

정부는 지난 1월에 중소기업의 성장 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혁신 12개 과제’를 확정·발표하였다. 정부의
정책혁신 과제를 자세히 알아보고, 전문가들로부터 혁신
선도형 중소기업 육성 방안을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중소기업을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의 중심축으로 육성



김진형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총괄조정팀장

정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혁신형 중소기업 3만개를 선도그룹으로 육성하여 여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동반성장을 주도하는 전략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벤처기업 활성화, 부품·소재 기업 육성 등 중소기업 정책혁신 12개 과제를 확정하였다.

2005년 우리 경제의 화두는 조속한 경기회복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재창출하여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 진입을 위한 토대를 견고히 구축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경제 생산비중(2002년) 50.8%, 고용비중 76.9%, 수출비중 42.2%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활력회복이 시급하다.

중소기업의 활력회복 시급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지난해말 중소기업 1만개에 대한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 1월 17일 중소기업특별위원회 확대회의를 개최하여 범부처적인 중소기업 정책혁신을 위한 12개 과제와 대책을 확정하였다.

중소기업 지원업무는 중소기업청을 비롯한 거의 모든 부처가 직·간접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를 감

안하여 각 부처의 중소기업관련 정책을 통합·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중소기업특별위원회에서 각 부처와 공동으로 중소기업 혁신과제 및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지난해 중소기업 1만개에 대한 심층 실태조사 결과 우리 중소기업은 경쟁력 약화, 판로·자금·기술 인력 확보 애로, 구조조정 지연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단기처방 위주의 대책이 아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절실한 시점으로 판단하여 정책혁신 과제를 마련하게 되었다.

우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혁신형 중소기업 3만개를 선도그룹으로 육성하여 여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동반성장을 주도하는 전략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총 295만개에 이르는 중소기업의 업종·성장단계·규모 등에 따라 기업유형별로 차별화된 대책을 마련하였다. 정책의 기본방향도 보호·육

성 위주에서 자율·경쟁 촉진으로, 직접지원 위주에서 인프라 등 생태계 조성으로, 공급자 주도형에서 수요자 맞춤형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또한 중소기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37개 행정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관련기관들이 총력지원체제를 확립하여 찾아가는 정책 실현, 중소기업 현장지원 등을 통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중소기업 정책혁신 12개 과제 확정

중소기업 정책혁신 12개 과제는 현재 중소기업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을 총망라한 것이다. 기업유형별 정책혁신 과제(6개)로 벤처기업 활성화, 부품·소재 기업 육성, 유통 등 서비스 분야 육성,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원활한 구조조정 및 대기업·중소기업 간 협력강화를, 경영활동의 인프라에 해당하는 정책혁신 과제(4개)로 금융지원시스템 재정비,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인력 지원강화, 중소기업 제품의 시장창출, 중소기업 지원시책 정비, 경쟁여건 조성 과제(2개)로 규제혁신, FTA 추진에 따른 대책을 선정하였다.

금융지원시스템 재정비

정부는 매년 약 5조원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융자)을 지원하고 있으나, 정책적 차별성보다는 저금리로 지원되어 담보력 등 채무상태가 좋은 중소기업 위주로 수혜를 받아 왔다. 또한 기업의 신용수준과 무관하게 획일적인 정책금리를 적용함에 따라 기술력과 성장성이 높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정책자금을 이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아울러 연간 42조원에 이르는 공적 신용보증(통상 85%) 공급이 금융기관의 자율적 신용평가 능력을 제고하기보다는 공적 신용보증에 대한 과다수요 유발과 민간 보증시장에 대한 구축(驅逐)효과를 초래하는 역효과를 야기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정책자금(융자)과 보증이라는 대표적인 정책금융지원시스템을 재정비하여 필요한 곳에 물이 스며들 듯 중소기업에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틀을 변화시킬 계획이다.

정책자금은 창업·기술사업화, 시설투자 등 민간 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분야에 집중 지원하되, 취약계층(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단순 운전자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방식도 성장가능성 등 업체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자금공급을 강화하고, 사업성 및 신용도를 평가하여 지원금리를 차등화하며,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우대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보증공급도 일반보증은 상업적인 베이스로 전환하여 업체별 신용도를 고려하고 보증수수료를 차등화하여 수지균형을 도모할 것이다. 기술보증 및 소기업보증 등 정책목적의 특별보증은 재정에서 손실보전하도록 하고 지역혁신체제(RIS) 참여기업에 기술평가를 통한 특례보증도 지원하기로 하였다.

나아가 정책자금 및 보증 지원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 위하여 민간은행을 통한 대리대출 방식에서 직접대출 방식으로 연차적(중진공 직접대출 비중 2003년 26%→2005년 50%→2007년 70%)으로 전환하고, 중진공·보증기관·은행 간 금융거래의 단일 절차화(one-process)를 통한 공급체계를 적극 구축할 예정이다.

부품·소재 산업 분야 300개 중핵기업 육성

우리나라 부품·소재의 기술수준은 현재 선진국 대비 80%에 불과한 실정으로 원천기술이 포함된 첨단 부품·소재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첨단 부품·소재의 기술력 취약으로 對日 무역수지 적자는 지속되고 있다.

기업특성별 혁신역량을 확충하기 위하여 소재대기업과 부품모듈 중핵기업이 부품·소재 산업 공급체인에서의 기술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부품모듈 중핵기업에 전략적 기술개발을 집중시켜 2010년 300개의 중핵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 중소·벤처 부품기업에는 부품·소재통합연구단을 통해 19개 연구기관의 박사급 기술인력 300여명을 1년간 파견하여 현장기술애로를 해결하고, 개발된 부품·소

정책자금이 창업·기술사업화 등
 민간 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분야에 집중 지원되도록 금융지원시스템을
 재정비하는 한편, 부품·소재 산업 분야 300개
 중핵기업 육성을 위해 부품모듈 중핵기업에
 전략적 기술개발을 집중할 계획이다.

제에 대한 수요를 이끌어내기 위해 OLED·바이오
 칩 등 42개 분야별로 대·중소기업 공동의 '부품·소
 재기술혁신연구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전략적 부품·소재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2010년 세계시장 선도 품목 100개 확보'를 목표로,
 품목별 기술 개발·확보 전략을 차별화하여 중핵
 기업에 집중 지원하고자 부품·소재를 품목별 특성
 에 따라 4개 유형, 즉 미래원천형, 시장수요형, 경쟁
 력 열위형, 구조적 열위형으로 구분하여 차별화된
 기술개발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범부처적
 인 부품·소재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차세대
 성장동력산업'과 부품·소재 기술개발을 연계하기
 위한 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공동의
 추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개발된 부품·소재의 사업화를 원활히 지원하고
 자 사업화·생산설비 투자를 위한 산업은행의 '차세
 대 부품·소재 산업 육성자금'(1조5천억원)과 '중소
 기업창업 및 산업기반기금'(1,100억원)으로 기술
 개발에 성공한 부품·소재 기업의 시제품 제작 및 설
 비 구입에 우선 지원하고, '부품·소재전문투자조
 합'(2005년 민·관합동 100억원)도 사업화 자금으
 로 적극 활용하기로 하였다.

부품·소재 혁신클러스터 확산을 위하여 반월·시
 화 단지에 업종별(고밀도 PCB, 초정밀광학, 나노소
 재 등) 미니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지역별 특화산업
 을 중심으로 경남·창원, 울산 등 6개 지역에 연차적
 으로 부품·소재 클러스터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인력 지원 강화

연간 기술인력 공급규모는 24만명 수준(중소제
 조업 근무인력의 28%)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인
 력 공급자원은 풍부하나, 중소기업의 33%는 기
 술인력 부족에 직면(부족률 6.4%, 5만8천명)해 있
 다. 이는 기술인력들이 근무조건 열악, 대기업·서비
 스업 선호 등으로 중소기업의 근무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고 및 산업대학교·공과대학을 지역 내
 기술인력 공급의 산실로 육성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산학협력'을 통해 기술 및 인력 공급의 선
 순환구조(공고 졸업→중소기업→대학 진학→중
 소기업 복귀)를 확립하여, 5년 내에 총 3만명의 기
 술인력을 양성(공고생 2만명, 대학생 1만명)하는
 등 기술인력의 부족문제를 50% 수준까지 해소할
 계획이다.

공고를 통한 기능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졸업 후 동시에 중소기업 근무가 가능하도록 학부
 모·학교 및 기업 간 '취업협약' 체결 및 맞춤형 기
 업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공고생(3학년)에게는 학
 자금 규모의 직업훈련비를 지급하고 중소기업 2년
 근무기간에 대한 병역을 연기하며, 학교에는 교재
 개발비 및 실습기자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상반
 기 중 지역별 실태조사 후 전국 16개 공고를 시범
 운영하고 2006년부터 전국 공고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산학협력에 의한 기술인력 지원체계를 구축
 하기 위하여 대학의 교수연구실·실습실을 특화된
 전문기술인력 양성의 산실(산학협력실)로 활용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교수 및 재학생이 1~2년간 기
 술개발을 공동수행하고, 연간 5천만원 내외(2005
 년 200개)의 기술개발자금을 산학협력실에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산업대학교(18개) 및 산학협력중
 심대학교(13개)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나아가 재교육 등을 통한 기존인력 활용을 확대
 하기 위하여 지역별 '인력구조 고도화 기획단'을 구
 성하여 사업장을 찾아가서 교육하는 '이동식 직업

훈련서비스'를 실시하며 온라인 기술교육 확대 및 개인별 교육훈련 자가진단시스템을 보급할 것이다. 재직근로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비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사업주가 자녀보육비를 지원하는 경우 일부를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내수침체 및 유통구조 변화로 영세사업자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대형 할인점 증가에 따라 재래시장 상권위축이 가속화되어 왔으나, 262만개에 이르는 소상공인은 업종이 다양하고 업종별 특성 및 애로가 다양하여 원활한 정책지원에 한계가 노정되어 왔다.

정부는 컨설팅·교육·정보제공을 통한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권정보체제(지역별·업종별)를 구축하고 소상공인 밀집도 지수를 개발(2005년 6월)하여 과잉진입을 사전 예방하고, 창업교육(실무 2개월+현장 1개월)과 자금지원(5천만원 한도)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면밀한 준비과정을 거쳐 창업하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또한 1만개 유망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을 실시(2005년 3월)하도록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5천억원을 지원하며,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시·군 단위의 '종합컨설팅 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정보화 촉진(2004년말 현재 40만개 → 2007년 100만개 목표)으로 비용절감·경영효율화를 도모(네트워크 활용)하고, 영세 자영업자의 자생력 확보가 가능한 업종으로의 전환 촉진과 상권 분석 정보의 활용, 전직교육 및 컨설팅 지원을 강화(연 2만명)할 것이다.

또한 잠재능력을 갖춘 저소득층의 경제활동을 지원(2005년 5월)하고자 은행 및 정책자금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저리도 점포대여(2천억원)를 실시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입차 점포 제공 및 업종선정, 경영지원 등 조기자활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체계적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상권 활성화 가능성에 따라 시장 특성별로 육성하고, 지역특화시장 및 도심권 등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시장의 시설개선과 경영현대화를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대형 할인점 등과 경쟁이 곤란한 시장의 용도전환 및 재개발도 추진하고, 재래시장 종합지원을 위한 경영지원센터를 설립(2005년 3월)하여 온라인점포 연 8천개 분양 및 신용카드단말기 보급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제품의 시장수요 창출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신뢰성 부족과 보수적 구매관행에 따른 신기술제품 구매 기피 등으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구매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연간 약 52조원(2004년)에 달하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확대하고 내실화하기 위하여 구매목표비율제도를 도입하고, 직접생산제품 판정기준을 제정하며, 2억원 이하 소액구매시 중소기업 간 경쟁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신기술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도 강화하기 위하여 신기술제품 구매의무 대상기관을 지자체 등 151개 기관으로 늘리고, 공공기관 대상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을 확대(2005년 100억원)하며, '신기술 제품성능 보험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나아가 중소기업 제품의 시장 진입 및 창출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장정보 제공, 소상공인 경영교육, 판로개척 등을 위한 민간 주도의 중소기업 전용 CATV 설립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외진출 지원체제 강화로 수출개미군단을 양성하고자 해외유통시장·국제조달시장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지원 강화, 수출인큐베이터(9개)·해외지원센터(38개)를 통한 현지 지원, 전문업종을 중심으로 한 해외전시회 참여와 시장개척단 파견(2005년 2천개 업체)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브릭스(BRICs) 등 신흥 틈새해외시장 무역전문가 양성과정을 대학 내에 설치·운영하여 해외마케팅

팅 지역전문가를 양성하고, 사이버 수출상담 활성화로 창업초기 기업의 수출시장 개척을 지원할 방침이다.

대·중소기업 간 협력 강화

현행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관행은, 대기업의 단기성과 위주, 납품단가 인하요구 빈발 및 중소기업 기술수준에 대한 신뢰부족,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미흡 및 중소기업 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협력파트너로서 지위 약화, 거래관계의 측면에서 대·중소기업 간 교섭력의 차이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서비스업종(8개 분야)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제정 보급하고, 기존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보완 개선하여 사업상 영업비밀 요구행위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는 등 법·제도를 보완 개선하여 표준화도급 계약서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또한 거래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자입찰·경쟁입찰 제도 활용 우수기업에 실태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하도급 거래 서면실태조사를 현재 4만개에서 2007년까지 7만개 수준으로 확대(일본 11만개)하고, 부당한 납품단가 결정, 발주 취소, 반품, 감액 등 중소기업이 많이 겪고 있는 실제 애로분야 조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을 설립·운영하여 대·중소기업 협력모델을 발굴하고 협력사업을 알선·지원하며,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대기업 임원을 중심으로 '지역 대·중소기업 협력단'을 구성(대한상의)하고 지방중소기업의 컨설팅·교육을 지원할 것이다.

생태분석을 통한 서비스 분야 특화 지원


선진국 대비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지연되어 고용 창출 및 성장기여도가 저조하고, IT기술 활용 지식

기반 서비스산업이 미약하여 서비스업 중 비즈니스 부문 비중이 6%에 불과하며, 특히 고부가가치 비즈니스 서비스 시장은 외국계 기업이 과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아웃소싱 분야 등의 업태에 대한 표준산업분류 정비 및 서비스 분야 표준화사업을 확대하고, 서비스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무역금융 및 수출신용보증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제조기업과 관련 서비스기업군을 하나로 묶는 통합적 연계생산체제(ICMS : Integrated Contract Manufacturing Service)를 구축하고 핵심역량에 집중, 비핵심 분야는 협력 조달하는 협업화 경영을 통해 관련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디자인, 문화콘텐츠, IT기반 컨설팅 등 전문 비즈니스 서비스업을 육성하고자 비즈니스 서비스업 대형화를 위해 중소기업 범위를 상향조정(현행 「중소기업기본법」상 범위 50인 미만, 매출액 50억원 미만)하고, 문화콘텐츠수출정보시스템(CEIS) 운영을 활성화하며, 유통·문화·건설·IT 등 업종별 생태분석을 통해 중소기업의 핵심역량을 특화 지원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 각 부처와 공동으로 마련한 중소기업 정책혁신 12개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하여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과제별 이행계획을 각 부처로부터 사전에 제출받아 매분기별로 이행상황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점검 확인해 나갈 것이다. 이렇듯 정책과제의 순차적 이행완료로 활력을 되찾게 되면 2005년도는 중소기업이 경제성장 및 고용 창출의 중심축으로 우리 경제의 선두에 서서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 진입을 위한 기반을 닦는 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중견기업으로의 도약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주력해야



최성호 경기대학교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 교수
(finechoi@kyonggi.ac.kr)

중소·벤처 기업의 창업촉진이라는 양적 측면보다 이들 기업의 중견기업 도약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는 질적 측면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을 초래하는 직접지원 방식은 지양하고 인프라 중심의 간접지원을 위주로 하되, 시장원리에 의하여 지원대상을 선별하는 금융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이번 중소기업 종합대책은, 대통령이 연두기자 회견에서 올해는 경제에 올인할 것이며 중소기업을 경제정책의 중심에 두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데 이어 발표된 것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 경제계의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우리 경제가 혁신 주도의 선진국형 성장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는 창의적 기술의 사업화와 위험 부담을 특징으로 하는 중소·벤처 기업의 내실 있는 성장은 필수적이다.

또한 최근 부각되고 있는 경기양극화는 글로벌화와 경쟁이 심화되면서 혁신기업과 정체기업의 차이가 벌어진 데 기인한 부분도 있지만, 상당부분은 대기업의 수요독점 지위에 따른 중소기업과의 협상력 차이 등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이다. 경쟁·노

동·금융·세제 등 분야에서의 중소기업 정책을 통해 경제구조를 보완하는 것은 중차대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양적 목표의 설정보다 내실 있는 집행이 중요

정부가 제시한 정책방안은 몇 가지 돋보이는 특징을 담아내고 있다. 무엇보다 정책입안의 기본시각을 보호·육성보다 경쟁촉진에 중점을 두고 자생력을 가진 기업을 중점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은 평가할 만하다. 1만개 중소기업에 대한 실태 조사를 거쳐 정책과제를 도출했다는 사실은 정부가 수요자인 중소기업계의 구체적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대기업과의 상생협력이 절실한데, 그 핵심적 연결고리를 부품·소재 발전전략에서 찾고 있다는 점은

◇이 글은 필자의 개인의견으로서, KDI의 공식견해나 「나라경제」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책의 포지셔닝이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기업의 규모·성장단계·인프라 등 다수 전략요소를 축으로 하는 매트릭스 구조를 전제로 12개 정책과제를 도출했다는 점도 정책수립 과정의 치밀함을 엿보이게 하는 측면이라고 하겠다.

이같이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이번 대책이 구두선이나 탁상공문에 그치지 않고 의도한 정책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긴요한 정책혁신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중소·벤처 기업의 창업촉진이라는 양적 측면보다 이들 기업의 중견기업 도약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는 질적 측면에 주력하여야 한다. 이번 대책이 3만개 혁신형 기업이니, 300개 중핵기업이니, 1만개 유망 소상공인이니 하는 숫자를 거론하는 것은 2000년 전후 벤처 거품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수치 목표의 설정보다는 유망기업을 가려내어 집중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가동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을 초래하는 벤처기업 인증식의 직접지원 방식은 지양하고 인프라 중심의 간접지원을 위주로 하되, 시장원리에 의하여 지원대상을 선별하는 금융 인프라 확충이 선결과제가 될 것이다.

금융 지원과 경영 감독을 연계하는 거버넌스(governance)의 정립이 필요하며, 벤처캐피탈의 전문성을 확충해야 한다. 저금리 여건의 투자부진 현상을 고려하면 단순한 정책금융의 금리인하는 뚜렷한 투자진작을 가져오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을 가려내어 지원하도록 권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이러한 점에서 중소·벤처 기업 전문 신용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기술가치 평가인프라를 확충하며 기술가치 평가보증보험제도를 조속히 정착시키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 지원의 최우선순위는 역시 기술력 확보와 사업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두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기술정책 연구·평가 체계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에 적합한 중장기 기술개발 로드맵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차세대 성장산업을 대기업의 몫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미래산업에서 중소·벤처 기업이 수행할 만한 프로젝트를 발굴·제시해야 한다. 이를 참고로 각 기업이 적합한 기술을 선택하여 사업화하도록 하고 대기업이 투자에 참여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한편, 이공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대학연구실에 대한 재정지원을 심사함에 있어 중소기업 기술지원과 사업화 성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클러스터 단위의 지원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지역혁신클러스터 형성을 촉진하는 정책지원은 효과적인 간접지원의 핵심수단이다. 각 지역의 대학과 연구기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해 제품 개발부터 마케팅과 수출에 이르는 제품 사이클을 공동 수행하는 경우에 중소기업이 담당하는 비즈니스 부분을 우선 지원한다면 정책성고가 가시화될 것이다.

대기업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

중소·벤처 기업과 대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포함하여 성공한 벤처클러스터들은 중소·벤처 기업과 대기업 간의 협력관계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부품·소재 산업만이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쳐 대기업과 중소·벤처 기업의 효과적인 협력모형을 개발·보급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계적 추세인 기술개발의 아웃소싱과 대기업의 기술혁신 벤처기업 합병, 벤처기업 투자, 기업펀드 조성·운영, 대기업의 분사를 촉진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과 정보 제공, 세계 유인 등 적극적인 지원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기반 조성을 위하여 출자총액제한·기업결합규제 등 구조규제는 과감히 완화하고, 협력과정에서 기술노출 요구와 탈취, 비용공개 요구와 한계마진 적용 등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행위규제를 강화하는



▲ 중소기업특위는 지난 1월 17일 범부처적인 중소기업정책 혁신을 위한 12개 과제와 대책을 확정하였다.

방향으로의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이 해외로 이전하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의 하나인 인력난을 완화하는 노력도 절실하다. 중소기업이 당면한 인력문제는 기술인력이 공고 출신이든, 공대 출신이든 양적으로 부족한 게 아니라 질적으로 미흡한 것이 핵심이다. 그러므로 공고 졸업생 3만명을 공급하고 이들이 이공계 대학에 진학하면 등록금을 지원하는 식의 정책은 지극히 평면적이다.

무엇보다 비용 지원과 전문가 인력교류 등을 통하여 산·학·연 협력을 지원하여 교육 단계부터 산업계의 수요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력 재교육을 위하여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훈련 기관을 확충하여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기술인력의 중소기업 근무의욕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업원 지주제를 탄력적으로 확대하거나 중소기업이 집적된 산업공단에 근로자들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복지·문화 시설을 건립·제공하고 대중교통수단이나 임대주택을 확충하는 노력이 긴요하

다. 인력난은 근로자뿐 아니라 기업이 측면에서도 문제될 소지가 있으므로 일정규모 이하의 제조업을 세대간에 계승하는 경우 상속세나 증여세를 감면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만하다.

또한 중소·벤처 기업의 국제화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내수시장에서 어느 정도 평가를 받은 중소기업들이 해외시장의 수요동향과 특수성을 파악하여 수출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지원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시장개척단·전시회 참가로부터 수출시행과 판매 후 서비스, 시장점유율 확대 등 해외시장 진출 단계별로 적절한 정보·자금·인력 등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해외 진출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해외진출 중소기업을 산업공동화의 주범인 양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이는 적절치 못하다. 산업의 글로벌 소싱(sourcing)은 국경의 범위에 국한되지 않는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세계적 추세이다. 노동집약 공정을 가진 산업의 경우 일부 기능의 해외이전은 불

중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 정책의 수립 및 평가체제를 개선해야 한다. 정책집행 과정에서 지원대상의 적절성·지원성과를 점검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면서 정책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피하다. 오히려 해외이전 생산기지가 성공적인 현지화 정착을 통하여 국내의 디자인, 기술개발, 핵심 부품·소재 생산, 금융, 마케팅 등 고부가가치 기능과의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 기업이 성공적인 해외경영을 이룬 후 자동화 등 생산기술 변화에 따라 국내로 유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베트남·동남아 등 투자유망 지역에 중소기업 전용공단을 조성하여 인프라비용 절감을 지원하고 현지에 중소기업 지원기관 사무소를 설치하여 적절한 시책을 제공하거나 현지 정부나 지역사회 협조관계를 지원하는 것은 우리 산업의 글로벌 생태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중소정책평가체제 개선해야

중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 정책의 수립·평가 체제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경제정책은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로서의 경제를 대상으로 전개되는 것이어서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집행 과정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한 미세조정(fine tuning)이 필요하다. 정책 결정 및 집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정책평가 부분에 적절한 재원·인력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집행 과정에서 지원대상의 적절성과 지원성과를 점검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면서 정책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중소기업 관련 시책을 여러 부처에서 나누어 시행하고 있어 정책 간의 시너지 확보가 어렵고 유사·중복 정책수단이 병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산업·기술·지역 등 지원정책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행정개혁방안이 꾸준히 논의되고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중요하다. 개각 때마다 기관장의 입장에서 정책을 새롭게 포장하기 위하여 정책에 변화를 주는 것은 우리 행정의 고질적 문제이다. 중소기업은 정부의 정책발표를 감안하여 경영계획을 수립·조정하는데 일정기간 후 시행되던 프로그램이 폐지되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되어 지원의 대상이나 요건이 변경된다면 정책불신만 증폭시킬 뿐 효과는 반감될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정책 평가에 있어 새로운 정책의 수립보다 기존 정책의 지속적 추진에 의하여 구체적 성과를 거두는 측면을 강조하는 정책평가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술융합현상에 따라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통신·환경 등 정책수요가 많은 미래산업을 여러 부처가 분장함으로써 자원배분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점이 바람직하지도 중장기적인 행정개혁과 정책혁신의 관점에서 되짚어 볼 일이다.

결론적으로, 글로벌 경제의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하면서 기업가와 근로자를 포함한 경제주체들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정책기조가 정착될 때, 우리 중소기업이 한국경제에서 혁신의 주체로서 견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

중소기업의 혁신 강점 살리는 정책 마인드를



최동규 강원발전연구원장
(choidk@gdri.re.kr)

정부는 혁신형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법·제도·규제 등을 국내외 업무최적화 방법을 통해 최적의 생태계 환경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부도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투자위험회수시장을 선진화해야 하며,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혁신형 중소기업을 보다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OECD 국가들의 과거 20년 동안에 이루어진 주요 기술혁신의 50%가 중소기업의 기업에서 나왔는가 하면, 주요 산업기술 혁신 역시 중소기업이 주도했다는 실증분석 결과는 중소기업이 산업발전 과정에서 많은 혁신적 역할을 해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1990년대 이후에도 EU의 경우 첨단 분야 특허의 99%가 중소기업에서 출원되었고, 고용비중만도 47.6%에 달하고 있다. 1996~2000년 중 미국 특허의 41%가 중소기업에서 나왔으며, 바이오기술·의약·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특허가 70% 내외에 이르고 있어 신경제의 기술혁신을 중소기업이 여전히 주도해 왔다.

◇이 글은 필자의 개인의견으로서, KDI의 공식견해나 「나라경제」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최근 OECD·미·일 등 주요 선진국의 하이테크서비스 분야는 중소기업이 주도하며 고용창출과 산업생산성 향상을 실현해 오고 있으며, 일본경제의 회복조짐도 요소·부품 기술혁신을 중소기업이 꾸준히 주도해 온 데서 비롯되고 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정책 필요

한국경제는 그동안 대기업 중심의 압축성장 과정을 경험하면서 중소기업이 과연 주요 기술혁신을 주도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선진경제의 특성인 혁신 주도형 경제체제로의 이행에 내용이나 속도 모두 아쉬움이 크다.

그동안 대기업 중심의 기술혁신 성과는 선진기술의 습득을 통한 모방학습형(Imitative Learning)의 결과로서 압축성장을 이끄는 데는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신성장동력으로 예상되어지는 새로운,

급변하는, 보다 복잡한 기술환경 변화에 선응하기 위해서는 선진경제에서 보여준 실증 이상으로 작은 규모의 혁신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새로운 정책 마인드와 접근이 필요하다. 즉, 중소기업이 주요 기술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는 혁신형 중소기업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3만개 내외의 혁신형 중소기업을 선도그룹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벤처기업 8,700여개 업체와 이노비즈(Inno-Biz) 2,600여 업체 중에 일부 중복을 고려하여 1만개 내외가 혁신형 중소기업이라고 본다면 세 배 정도를 정책대상화하는 것으로, 전산업 중소기업체수 기준으로 볼 때는 약 1% 수준에 해당된다. 정책대상을 어느 정도로 하는 게 바람직한지는 산업발전 단계·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선진국 수준 등을 고려해 보고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혁신형 중소기업 비중이 제조업 부문에서 10% 내외, 기타 지식 기반서비스업 분야까지를 고려한다면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혁신형 중소기업은 5만개 내외까지 목표로 해도 좋지 않을까 싶다. 벤처기업 활성화는 제2 벤처붐이라는 새로운 인식이 접목되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재원 확충, 코스닥시장 활성화, 패자부활 제도 등이 지난해말 발표된 바 있다.

혁신에 대한 설명은 다양하나, 우선 과학적 지식의 변화라는 공통점으로 이해되는 것이 필요하다.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또는 제품·공정·경영 등 여러 분야에 관련된 과학적 지식들이 크게 또는 작게, 많이 또는 적게 변화되는 것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폭넓게 이해하고, 혁신을 추구하는 레벨·환경·주체 등에 따라 혁신의 대상과 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편적이고 주어진 조건하에서만 혁신을 정의하고 접근하면 혁신세계의 본질에 충실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거니와 주체 간에 접근방식조차 이해가 상충되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정책대상으로서 혁신형 중소기업(Innovative SMEs)은 다음과 같은 범위로 우선 출발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혁신적 활동에 적극적이고 혁신문화 형성을 소중히 하는 기업으로 혁신형 중소기업의 범위를 정하고, 혁신적 활동은 제품 및 공정 혁신 중심의 하드웨어 혁신과 경영, 서비스, 문화·의식 등 소프트웨어 혁신을 주로 하되, 해외시장 개척과 선진국 틈새시장 공략 등 마케팅 혁신을 포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업종은 굳이 제한할 필요는 없으나 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고 선진국 경험, 주요 혁신성과에 관한 인류의 경험에서 시사되는 중소기업 조직의 강점·특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R&D 활동, R&D 집약도, 혁신성과뿐만 아니라 CEO의 혁신마인드, 그리고 특히 관료병리현상 정도가 낮은 조직구조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술혁신관련 지표로는 상당한 수준으로 평가되더라도 의사결정단계가 너무 길고, 집권화·공식화되어 있으며, CEO의 혁신에 대한 이해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 기업의 혁신활동 성과는 지속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벤처기업, 이노비즈를 포함하고, 경영혁신 등 혁신대상을 넓히되 기존의 제도적 개념에서 점차 시장친화적 개념으로 접근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혁신형 중소기업은 한국경제의 신성장동력

요소투입 주도형 경제에서 혁신 주도형 경제로의 패러다임 변화는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패에서 그 타당성을 찾아야 한다.

혁신관련 재원, 창조적 인력, 정보, 인프라 구축 등이 혁신형 중소기업에 효과적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규모편견으로부터 벗어나고, 대기업집단은 혁신세계에 관한 한 실효적인 공정경쟁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혁신형 중소기업 CEO, 주요 혁신관련 인력, 노사의 혁신마인드를 움직이고 그들의 행태변



▲ 지난 1월 27일 경남 김해에서 개최된 '2005 벤처·중소 기업 신기술 창업박람회'

화를 통해 혁신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방향과 수단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성공적 혁신에 관한 문헌연구 결과를 보면 자유·자율 가치가 보다 향유되고 보장·활용되어지는 곳에서 성공적인 혁신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 민주·경쟁의 가치도 혁신을 자극하고 촉진해 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자유, 자율, 그리고 민주와 경쟁의 가치는 거대조직문화나 독과점적 시장 속에서는 제약이 많을 뿐더러 무엇보다도 구성원들의 혁신활동이 마음껏 발휘되기가 쉽지 않다. 작은 규모의 조직문화일수록, 그리고 공정한 경쟁시장일수록 보다 획기적인 기술혁신 성과가 많이 실현되었던 인류의 경험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런 점에서 혁신형 중소기업은 자유, 자율, 그리고 민주, 경쟁의 원천으로서 혁신 주도형 한국경제에 신성장동력이라는 확신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지금쯤 사라지긴 했지만 과거 초등학교 3학년 사회과목에는 이런 예제가 있었다. 우리 고장에서 가장 큰 집, 큰 나무, 큰 길을 찾아 적어 보자는 것이었다. 꼬불꼬불하긴 하지만 아름다운 작은 길, 오래

된 낡고 작은 집이지만 마을의 전통·역사가 깃든 자랑하고 싶은 집, 아름다운 작은 나무도 찾아 적어 보자고 교육을 했다면 “큰 게 좋는가 보다”라는 오늘과 같은 규모의 편견은 상당히 줄어들지 않았을까 싶다.

대졸 신규 노동진입시장에서 지나친 거대기업 쏠림, 취업재수생으로 인적자원 유통시장에 거대한 유수지가 형성되어 있는 현실은 혁신형 중소기업에 필요한 경영자원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왜곡시킬 수 있음을 보여 준다. 필요한 인적 자원, 자금, 정보, 기술 등 경영자원들이 큰 규모, 작은 규모에 관계없이 필요한 곳으로 균형 있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할 뿐 아니라 선진경제, 성공적인 혁신환경일수록 규모에 대한 편견이 지극히 적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 이후에 이르기까지 규모편견을 조장하거나 방치할 수 있는 부분은 고치고, 작은 규모와 기업활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도록 인적 자원 개발정책 틀이 다시 짜여져야 한다. 그 밖에도 中活(중소기업 현장체험활

재원·인력·정보 등이 혁신형
 중소기업에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규모의
 편견으로부터 벗어나고, 대기업집단과는 공정
 경쟁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규제와 애로를
 제로로 하는 자유·자율 보장프로그램 특례라도
 우선 들여와서 혁신활동에 꼭 필요한 단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

동) 확대, 샌드위치 프로그램을 통한 산학연계, 학
 제개편 같은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혁신친화적 기업생애주기 연관 시스템 구축을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 정부는
 아이디어 창출에서부터 선정, R&D, 기술적 성공,
 시제품, 테스트마켓, PLC(Product Life Cycle) 각
 단계에 이르기까지 넓은 의미의 혁신형 중소기업
 생애주기에 따라 각 단계마다 최적의 혁신친화적
 생태계가 형성되도록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관련
 되는 법·제도·규제·문화·관행 등을 국내외 업무최
 적화 방법(best-practice)을 통하여 최적의 혁신형
 중소기업 생태계 환경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실
 폐를 두려워하지 않고 재도전이 가능하도록 부도관
 련 제도를 정비하고, 투자위험회수시장을 선진화해
 야 하며, 기술외적 경기변동요인으로 일시적 어려
 움에 처한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보다 유연한 대
 응지원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혁신형 중소기업 성과가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
 느냐 여부는 전적으로 기업에만 달려 있다고 접근
 해서는 곤란하다. 선진경제에서도 혁신형 중소기업
 의 혁신 성과에 대한 우선 구매 (preference
 procurement) 개념이 확대되고 있고 창조적 고급
 인력 확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예도 있다. 이는 보
 다 획기적인 제품기술 혁신은 거대기업의 조직관성
 에서는 한계가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우리의 경우는 대기업집단의 행태가 선진경제에

서와 달리 산업기술혁신체계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대기업집단과 혁신형 중소기업 간의 거래행태 역시
 산업기술혁신의 정도와 속도에 영향을 주고 있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볼 때, 혁신형 중소기
 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직·간접적인 역할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정부부처에 대한 우선구매 개념은 활
 용되고 있으나 단체수의계약 방식으로 정부조달시
 장이 협동조합주의와 오래 연관되어 와 혁신형 중
 소기업과는 직접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협동조합주의와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과를 연계
 시키는 정부조달시장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고,
 공공기관과 정부정책 연계가 깊은 대기업 사업부문
 에까지도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과수요연계정책이
 필요하다. 물론 이 과정에는 혁신성과에 대한 이해
 와 공정한 평가·관리 시스템이 보장되어야만 한다.
 협소한 국내시장 극복을 위해 선진시장·중국·동구
 권·기타시장 등으로 차별화된 특별한 정책고려가
 필요하고, 혁신성과의 채택에 대한 평가와 보상시
 스템도 혁신형 중소기업의 혁신활동과 성과가 수요
 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보강할 필요가 있다.

혁신세계에서 노사의 역할과 특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고, 혁신활동에 소중한 자
 유·자율을 확대·활용하기 위한 노사의 새로운 역할
 과 신뢰기반의 새로운 모델이 있어야 한다. 혁신성
 과가 노사에게 공정하게 배분되고 순환됨으로써 혁
 신성과 창출이 확대·지속될 수 있도록 기업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최적의 생애주기별 생태계 연관 정책 틀과 관련
 해서도 규제와 애로를 제로로 하는 자유·자율 보장
 프로그램 특례라도 우선 들여와서 혁신형 중소기업
 의 혁신활동에 꼭 필요한 단계, 꼭 필요한 시기에 어
 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 혁신의 세계, 특히 복잡화
 되어 가는 기술혁신 환경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도
 않을 뿐더러 그 세계의 본질을 이해하고 충실하려
 는 이들에게 기회가 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
 기 때문이다.

中企 중심 혁신 주도형 산업구조의 조기 정착을



조유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홍보실장
(clove@kfsb.or.kr)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지원 등을 통한 구조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사업전환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통해 사업전환 전용자금 조성, 각종 지원제도 마련, 사업전환정보 DB 구축 등 인프라와 지원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다. 또한 부도·도산한 중소기업의 사업 재개를 위한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법'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최 근 우리 경제는 지난 2~3년간 침체에서 벗어나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2월 들어 중소기업의 부도는 줄고 창업이 늘어나고 있으며, 고사 직전에 내몰렸던 재래시장도 지난 설에는 모처럼 활기가 돌았다.

이참에 내수가 살아나는 것 아닌가 하는 기대심리가 사회 전반에 커져가고 있는 듯하다. 적어도 그간 오랜 경기부진으로 기업을 그만 접어야겠다고 마음먹었던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새로운 사업의 기회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다. 지난해 12월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1천명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05년도 경

기전망을 물었을 때 34.4%가 2005년 하반기에 가셔야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응답하였고, 경기가 불투명하다는 응답도 30.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올해도 지난해와 별반 다를 바 없이 극심한 내수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그렇다면 짧은 기간 내에 어떻게 분위기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을까? 이는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확고한 육성 의지가 크게 작용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부의 강력한 中企 육성 의지 긍정적

정부는 지난 1월 17일 '중소기업정책 혁신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으로만 본다면 3만 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육성, 부품·소재 산업의 지원 등 새로운 것은 별로 없다. 종전에 나온 정책들을 다시 한번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과 절차에 있어서 매우

◇ 이 글은 필자의 개인의견으로서, KDI의 공식견해나 「나라경제」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중소기업 대책이라면 중소기업청장이 발표하는 게 상례다. 그런데 이 날은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을 뿐 아니라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부처장관들과 경제 4단체장도 참석하였다.

이는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시 중소기업에 대한 강력한 육성지지를 밝힌 데 이어 취해진 조치로서 중소기업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었다고 본다. 비로소 중소기업의 문제가 어느 한 부처의 일이 아니라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 할 국정 과제로 인식하고 육성해 나가겠다는 선언적인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대다수 중소기업에게 있어서 기업 여건이 달라진 것은 별로 없다. 여전히 사람이 구하기가 어렵고 돈을 끌어다 대고 물건을 팔기 힘든 것은 마찬가지다.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에 따르면, 2005년 2월에 중소기업의 52.3%는 현재의 경영상태가 나쁘다고 호소하고 있다. 더욱이 대부분의 대기업이 사상 초유의 수익을 올렸다고 하지만 일방적인 납품단가의 결정이나 환차손과 같은 경영비용을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관례는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한 금융권이 경기가 좋을 때는 자금세일을 나섰다가도 조금만 경기가 어려워지면 바로 자금을 회수하거나 신규 대출을 허용치 않아 오히려 자금 회전을 곤란하게 만든다고 아우성이다. 특히 환율과 유가, 복핵 문제는 올 한해 우리 경제에 큰 짐이 될 전망이다. 이런 환경에서 중소기업인의 사기는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게 사실이다.

정부의 중소기업 혁신대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외환위기 이후 내수부진으로 인한 최악의 경제침체에서 중소기업이 벗어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경영여건을 과감하게 개선하고 중소기업인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것이 급선무다.

사업전환 관련 법 제정 시급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은 기업규모, 업종 및 발전 단계별로 차별화하여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중소기업들의 경영환경은 언제나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다. 이런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기업 가치를 높여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기술력 향상과 윤리경영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경제의 글로벌화로 재무와 환경 등 경영과 관련한 모든 분야에서 국제규범을 따를 것을 요구받고 있다. 예를 들어 회계의 투명성은 규모에 관계없이 의무화되고 있다. 중소기업이 국제규범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따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우리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은 중국보다는 우위에 있지만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는 크게 뒤쳐지고 있다. 일본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80.6%이고, 세계 최고수준을 대비했을 때는 73.6% 수준에 불과하다.

기술개발 성공률은 70% 수준을 상회하고 있으나 사업화율은 35%대에 그치고 있다. 기술개발을 할 전문인력이나 자금·기술정보의 부족이 애로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술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고 신기술을 통한 제품개발 이후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여 사업화를 활성화시키는 지원책이 필요하다.

수요연계형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참여를 R&D 사업 관련 전부처와 정부산하 20개 주요 공기업, 협력대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신기술제품 개발 사전협약을 체결하여 개발완료 후 일정기간 동안 우선 구매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안정적 판로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가칭) '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정보·세계·인력·금융 등 기술혁신 지원프로그램을 윈스톱 서비스로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원활한 기술개발 및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 기술개발 인력의 원활한 공급 차원에서 교포 및 유학생 등 해외진출 고급기술인력의 적극적인 국내 유입대책을 검토하는 것도 유용할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사업전환과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산업의 구조고도화가 저부가가치 업종에서 기술·자본 집약적 산업으로 진전되

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경영·기술 등 정보의 부재와 제도적 장치의 미흡으로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다.

현재 사업전환 지원제도는 개별 법에 명시되어 지원체계가 산만하고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농공단지 우선 입주 지원 등에 국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일본은 ‘중소기업경영혁신지원법’을 통해 기업 및 업종이 처한 상황과 필요성에 따라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지원 등

을 통한 구조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사업전환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통해 사업전환 전용기금 조성, 사업전환시 창업에 준하는 각종 지원제도 마련, 사업전환정보 DB 구축 등 인프라와 지원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다.

또한 부득이한 외부적 충격에 의해 부도 또는 도산한 중소기업의 사업 재개를 위해 납부한 세액만큼 환급해주는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법’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세액 공제 등 투자촉진 여건조성 필요

청년실업(약 38만명) 등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약 10만여명의 고용창출 여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투자 활성화가 시급하나,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계획이 있는 기업체 중 66.9%가 유지보수투자에 치중할 계획이고 증설투자는 18.1%, 신규투자는 6.1%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시급하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연구·인력 개발 및 설비투자 관련 세액 공제 및 감면



의 중복도 허용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대체투자만 인정되고 있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중소기업 투자의 경우 신규·증설의 경우에도 투자세액 공제를 실시해야 한다. 5인 이상 중소기업의 경우 56.8%(약 6만개)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을 현행 10%에서 5%로 대폭 인하할 필요가 있다. 법인세의 경우도 현행 1억원 이하는 15%, 1억원 이상은 27%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과표구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다.

OECD 주요 선진국과 대만 등 주요 경쟁국들이 경쟁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이므로 1억원 이하의 경우는 3년간 한시적으로 법인세를 면제하고 세율도 1~2억원은 13%, 2억원 초과는 20%로 대폭 낮춰야 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자금여력 확충을 통해 경영안정과 투자촉진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 우선 정부재정 중 현행 1.2%인 중소기업 지원예산 비중을 2%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중소기업 지원예산이 4%대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음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연구·인력 개발 및 설비투자 관련
세액 공제 및 감면의 중복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대체투자만 인정되고 있는
수도권 중소기업 투자의 경우 신규·증설의
경우에도 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해야 한다.

또한 담보대출 위주의 관행을 탈피, 기술성 및 성장가능성을 바탕으로 한 신용대출 관행이 정착되도록 해야 하고 순수신용대출 비율도 현재 17% 수준에서 3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시중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채권 여력 확충을 위해 현재 9조6천억원인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전시공간 부족도 개선돼야 할 과제이다. 여의도 중소기업전시장 부지가 2003년 12월 서울시로 반환됨에 따라 수도권 유일의 중소기업 전용 전시공간이 폐쇄되었기 때문이다. 그간 여의도 중소기업전시장은 1996년 개장 이래 전시박람회 320여회, 출품업체 3만3천여개, 내방객 1,100만명으로 중소기업의 판로지원과 수출확대에 큰 기여를 했다.

전시컨벤션 시설은 국제비즈니스 산업인프라로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지대하기에 EU·미국·일본 등 선진국들은 지방 및 중앙 정부가 건립부지를 제공하고 건립비를 지원하는 등 국제적 수준의 전시장 건립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부도 이젠 중소기업의 경영관련 정보를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동센터는 국제적 규모의 중소기업 전용 컨벤션센터를 포함하여 원스톱 서비스, 기술 혁신 등 중소기업 경영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다. 따

라서 정부는 건립부지를 조성원가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비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중소기업 인식개선·사기진작 나서야

중소기업은 국민경제의 중추로서 생산과 고용, 부가가치 창출에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업체수 기준으로 99.8%(295만개), 종업원수 기준 86.7%를 담당한다. 중소기업 제조업 역시 사업체수는 99.4%, 고용 76.9%, 생산 50.8%, 부가가치 51.7%로서 고용창출과 생산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향후 2008년에는 이와 같은 중소기업의 위상은 더욱 강화되어 생산은 53.0%, 수출 50.0%, 고용 87.0%를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규모에 대한 편견으로 인한 인력난, 과도한 담보요구 등 차별적 금융관행 및 상거래 등으로 중소기업은 사업 외적으로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과 경제회복, 균형발전 등의 핵심주체는 중소기업이므로 이젠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전환과 함께 중소기업의 기 살리기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 재원 마련, 초·중·고 교사대상 경제교육 실시, 중소기업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 공익광고 및 중소기업 성공사례 다규 제작 및 홍보 등 중소기업의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와 여당은 각종 규제 및 준조세 완화, 공정경쟁질서 확립 등 중소기업인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열어가는 활력 있는 다수로서 창의와 혁신, 경쟁과 자율을 바탕으로 균형발전을 선도하며 모두가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핵심주체이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도 중소기업을 당당한 국가경제 발전의 핵심주체로 인식하고, 혁신을 통한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자생력을 배양하는 데 적극 노력해 나가야 한다. ■

중소기업을 ‘창조·혁신의 모체’로 인식해야



신미남 (주)퓨얼셀파워 대표
(mshinn@fuelcellpower.co.kr)

중소기업을 ‘다수의 약자’에서 ‘활력 있고 기민한 다수’ 또는 ‘창조·혁신의 모체’로 인식, 활용하려는 국가적·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는 ‘시장경제원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기술혁신에 대한 중소기업의 동기요인을 강화할 수 있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입안·수행해야 한다.

지난 40여년간 우리나라는 시대별로 성장주도 산업을 집중 육성하면서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해 왔다. 1960년대에는 섬유·합판·가발 등의 경공업, 1970년대는 철강·기계·화학 등의 중화학공업을, 1980년대는 가전·조선·자동차 등의 조립가공산업을, 1990년대는 반도체·컴퓨터·통신기기 등의 IT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

이러한 성장에는 대기업들의 노력과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지난 8년간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대에 머물러 있고, 중국의 급부상 등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양극화의 심화에 따라 신규고용 창출이 미흡하여 고용불안이 야기되고 사회적 불균형

이 초래되는 등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양극화를 해결하고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기술을 지닌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임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보호 위주의 지원정책으로 경쟁력 강화 어려워

과거 정부는 여러 가지의 재정·비재정 지원 사업, 조세지원제도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실시하여 왔으나, 중소기업의 당면 문제 및 양극화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으나, 과거의 정책들이 자체 기술혁신 능력을 갖춘 혁신 선도형 기술중소기업을 육성하기보다는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중소기업들이 자생적 경쟁력을 강화하지 못했던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 생각된다.

이제 우리는 규모가 작은 기업을 중소기업이라

◇ 이 글은 필자의 개인의견으로서, KDI의 공식견해나 「나라경제」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하고 보호하는 입장보다는 중소기업을 '다수의 약자'에서 '활력 있고 기민한 다수' 또는 '창조·혁신의 모체'로 인식, 활용하려는 국가적·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일본이나 독일이 기계·전기·자동차·화학 등 각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숨은 공로자, 즉 다수의 혁신 선도형 기술중소기업을 활용해 사회적으로 높은 생산비용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건실한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규모는 크지 않지만 기술력만은 세계적 수준인 다수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해서 자꾸 높아져 가는 사회적 생산비용을 감당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기술혁신의 주체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중소기업이 기술혁신형으로 변신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자신이 자체 기술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 뼈를 깎는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실효를 거둘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과거에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우리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것처럼, 적절하면서도 효율적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정책이 적시에 수행된다면 더 빠른 시간 내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육성되어 고용을 창출하고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의 실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시장경제원리'를 최대한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 자신이 기술혁신을 하고 싶고 또 해야만 되는 동기요인이 강해질 수 있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동기 강화 요인은 기술혁신을 실행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금융정책, 기업가정신의 고양, 혁신을 주도할 우수한 인력의 영입, 혁신기술로 만든 제품의 공정한 판매 및 시장 확대, 국가연구개발 지원사업의 유동성 등이다.



기술보증 확대 등 금융지원의 현실성 높여야

기술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개발이 수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연구개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현재 창업자금 지원에 주로 집중되어 있는 벤처캐피탈의 조합펀드는 회수기간이 3년, 길어야 5년으로, 회수기간이 짧은 단기투자에게 주로 집중되는 것이 현실이다.

조합을 결성하여 적절한 투자처를 발굴하는 데 소요되는 1~2년을 제하고 나면 실제 기업이 투자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은 2~3년 정도가 최대인데,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기술개발에 약 2~3년이 걸리고, 제품의 신뢰성 확보 및 시장에서 인정되어 납품될 때까지 4~5년 이상이 걸릴 수 있으므로 단기투자로는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판매를 하기 위하여 생산라인을 구축해야 하는 시점에서는 자금이 더욱 필요한데, 이 시점에서 벤처캐피탈은 투자를 회수해야 하는 것이 현 상황이다. 금융권에서도 기술혁신 기업에 대한 자금용자시 기술보다는 현물담보를 요구하여 혁신형 기업이 기술혁신 개발 자금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혁신형 중소기업들이 실제

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금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미국의 중소기업투자공사가 기술혁신형 기업에는 자본금의 세 배까지 기술보증을 해주는 것처럼, 혁신기술 중심의 기술신용보증 금융 지원 및 장기·저리 융자 지원제도를 확대하고, 현재 미국의 혁신중소기업 육성프로그램인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Programme)을 원용해서 수행 중인 공공기관의 R&D예산 중 일부를 중소기업에 배정하고 있는 제도를 현재의 '권장'에서 '의무화'로 전환해 실효성을 높이되, 기술혁신형 기업에 우선 배정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현재 수익성을 위주로 하는 코스닥 등록기준 등을 잠재성장성이 높은 분야의 경우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혁신형 기업들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되 퇴출요건을 강화하여 코스닥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금융활성화 대책도 필요하다.

기술혁신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리스크를 감당하며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가정신을 지닌 우수인력이다. 그러나 선진국이 리스크 공유를 통한 기업가정신을 고양하는 것과는 반대로 우리는 리스크를 기업가에게 전가하여 기업가정신을 잠식하고 있다. 정부는 기술성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신용보증기관 및 기술신용보증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현실적으로는 집행기관인 금융권 혹은 리스크를 함께 감당해야 할 벤처캐피탈에서조차도 기업은 물론 기업가 개인까지도 입보(立保)를 서게 하여 리스크를 기업가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기업의 경영성과를 기업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함은 타당하나, 성장성이 매우 높으면서 리스크 또한 매우 높은 혁신형 기술개발을 주로 하는 고부가가치형의 사업에서는 기업가가 성실경영을 하였음에도 연구개발이 실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주식회사에서 리스크를 개인에게 책임지어 기업가 자신은 물론 가족까지도 회생이 어렵게 만드는 이러한 제도는 기업이 어려워지더라도 초기에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제한시키는 비합리성과 비도덕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으며, 극히 일부 부도

기술보증 확대 등 금융지원의 현실성을 제고하고, 리스크와 성과를 투자자와 기업가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가정신을 고양하며, 지역혁신클러스터 우선 참여 등으로 우수인력 활용 및 영입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공정거래법 등 법·제도 개선으로 대기업과의 상생을 도모해야 한다.

덕한 경영진을 감시하기 위한 제도는 더욱더 강화됨으로써 창업하려는 기업가의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다.

선진국이 실패를 소중한 학습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것처럼 미래의 창업자들 및 현재의 혁신형 기업가가 개인적·일방적으로 리스크를 떠맡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와 성과를 투자자와 기업가가 공유하고, 성실한 실패에 대해서는 사회적 패자부활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대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제도 개선 필요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기업가정신을 지닌 기업가만이 아니라 우수 기술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게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지역혁신클러스터 및 인적 네트워크 내에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우수한 인력 풀(pool)에 접근하고 활용할 기회를 확대해 주어야 한다.

또한 영국이 중소기업 신규인력 채용시 고용보조금 지원이나 저리융자금 확대, 의료보험의 회사부담 경감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처럼, 현재의 인턴십이나 병역특례에 부가하여 기술혁신 기업이 박사 등 고급인력 채용시 기업의 고임금 지불능력을 강화하여 우수 인력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한다면 기술혁신 성공 가능성은 크게 높아질 것이다.

기술혁신형 기업들은 많은 경우 대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다. 자유시장경제하에서 대기업에게 강제로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라고 하는 것은 시장경제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경쟁력 없는 중소기업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보호하라는 것으로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러나 대기업과의 하도급거래 관계에 따른 비효율성, 대기업이 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따른 원가절감을 대기업의 가격인하로 연결시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의지를 좌절시키는 등 공정하지 못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중소 혁신기업과 거대 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산업 분야별 전문가를 두고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있는 것처럼, 정부 차원에서 하도급거래의 공정거래를 위해 공정거래법을 개선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 강화 등을 통해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기업과 기술혁신형 기업이 기술개발 단계부터 상호 협력하고 성과도 투자한 부분만큼 공유할 수 있는 인센티브 방안이 실행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도 국내외의 틈새시장 공략이나 유리한 자신만의 비교우위 영역을 찾아 기술개발비를 집중하고 전문화하여 고부가가치 기업이 됨으로써 대기업의 가격인하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업종별·부품별·소재별 기술 요구 및 필요역량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과 차세대 성장동력 등 향후 우리의 먹거리 혹은 우위가 될 부분의 관련 산업 진흥법을 임시로 제정하여 국가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여야 한다.

나아가서 기술혁신형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입하여 시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기술개발 이후 해외진출까지를 포함하는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우수 기술혁신 기업들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국가연구개발 사업은 혁신형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정책이다. 그러나 정부가 중소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

하려 해도 대기업의 안전성, 사업비의 매칭 및 향후 기술료 때문에 국가출연연구소·학교, 심지어 심사위원들도 대기업을 선호하여 현실적으로 대기업이 우선 지원되고 있다.

일반적인 컨소시엄 형태의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경우, 주관기업과 참여기업 및 연구소·학교 등의 위탁기관으로 구성되는데, 이 경우 참여기업인 중소기업도 민간매칭 부분의 연구비 및 기술료를 정액 납부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의 표준계약서는 참여기업이 출원한 특허의 소유권이 주관기업에 귀속되게 하고 있다. 대개의 경우 주관은 대기업, 참여는 중소기업의 형태로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의 지적소유권이 대기업에게 귀속되고 있어 국가연구개발 사업 수행시 참여기업인 중소기업의 특허출원 의지가 상실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술개발 지적자산 소유에 공정한 물을 도입하여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표준계약서를 수정, 주관기관이 개발한 지적자산은 주관기업 소유로, 참여기업이 개발한 지적재산권은 참여기업 소유로, 공동개발한 것은 공동소유로, 위탁기관이 개발한 것은 위탁·주관 기업 공동소유로 함으로써 동반성장의 공정원리를 실현하고 중소기업이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지적자산을 창출할 동인을 제공하여야 한다.

위에서 제안한 내용들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문제는, 과연 기술혁신형 기업 혹은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누가 어떻게 가려내고 지속적 우위를 유지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쉽지는 않더라도 이 일을 잘 해내도록 지혜를 모으고 정책을 실행하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둘 것을 제안한다. ■



외국자본, 그 순기능과 역기능 - 바람직한 대응방안은?

최근 외국자본의 국내 유입이 늘어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외국자본의 영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외국자본의
순기능과 역기능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역기능 최소화 방안
등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주>

명암을 동시에 살피는 균형잡힌 시각 필요

최 근 외국자본의 국내 유입이 늘어 나면서 그 역할에 대해서 상반되는 의견과 함께 국민들 사이에 역기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표적 기업인 삼성전자·포항제철 및 현대자동차의 주식 다수가 외국인 소유로 들어가고 소비린이란 외국자본에 의해 국내 유수의 재벌 그룹인 SK의 경영권이 위협받는 한편, 제일은행을 인수한 외국자본이 막대한 차익을 남기고 매각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민들과 정책결정자 사이에 외국자본의 역할에 대한 우려와 국내경제가 외국인 손에 좌지우지되지 않는가 하는 기우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국자본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국내시장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개방의 폭과 속도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긍정과 부정이 동시에 존재하는 '동전의 양면'

먼저,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자본 특히 외국인투자의 현황과 실태를 알아보자.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1990년대 중반까지는 저조한 수준을 면치 못하였다. 그러던 중 1997년 말에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이 철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chollee@sogang.ac.kr)

외환확보 차원에서 직접투자 유치에 발 벗고 나서게 되었다. 그 결과, 1998년부터 5년 동안 300억달러 이상의 대규모 직접투자가 유입되었다. 이 5년 동안에 유입된 직접투자는 외환위기 직전까지의 합계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규모만으로 평가할 때 획기적인 성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 정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하고, 금융·M&A·토지 및 일반 행정규제 등 경제 전분야에 걸쳐 대대적인 개방과 자유화를 추진하였으며,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하여 '팔 수 있는 것은 모두 판다'는 각오로 생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내하면서 투자유치를 통한 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한 국가 전체의 필사적인 노력은 당시 직접투자의 붐을 이루고 있던 호조건의 세계경제 환경 속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0년을 고비로 외국인투자는 100억달러 수준에서 30억달러 수준으로 대폭 감소한 후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일견 외환위기 이전으로 회귀하는 듯한 양상을 보였지만 2004년에 다시 활발한 투자유입이 이루어지면서 외환위기 이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004년의 외국인투자는 전년 대비 두 배 증가하였다. 2004년 한 해 동안 외국인 직접투자

◇ 이 글은 필자의 개인의견으로서, KDI의 공식견해나 「나라경제」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는 2003년(64억7천만달러) 대비 97.4% 증가한 127억7천만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연도별로 세 번째로 높은 실적으로 1999년 이후의 하락세에서 처음으로 증가세로 반전된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살펴볼 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유입 추이는 1990년대 후반을 전환점으로 해서 외국인 직접투자가 확대되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04년 외국인 직접투자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62억1천만달러로 전년 동기(17억 달러) 대비 265.9% 증가하였고, 서비스업이 61억3천만달러로 전년동기(41억3천만달러) 대비 48.2% 증가하였으며, 비중은 제조업이 48.6%, 서비스업이 48.0%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업종별로는 금융·보험(32억1천만달러), 전기·전자(29억4천만달러), 화공(13억8천만달러), 도소매 유통(11억3천만달러), 운송용 기계(9억달러) 순이다. 지역별로는 미국·유럽·일본으로부터의 투자가 고르게 증가했으며, 중국·인도 등으로 다변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투자가 우리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외국인투자가 우리 경제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 또는 부정적이라는 한마디로 단정지를 수 없다. 마치 이 문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서 외국인투자가 우리에게 미치는 어떤 효과이든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관점하에 외국인투자가 우리나라 국민경제 및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순기능 및 역기능을 크게 몇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자원이전, 성장 및 고용 효과
외국인투자가 우리나라의 경제개발을 위하여 수행

하는 순기능 중의 하나로 자본·기술 및 경영기법 등 경제개발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자원을 우리나라에 이전시킴으로써 경제성장은 물론이고 국내의 고용증진에도 도움을 준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는 국내 경제·사회에 긍정적·부정적 양 측면으로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이러한 동전의 양면을 지니고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이성적 그리고 합리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외국인 투자는 최초의 투자 및 추가적인 자본투자로 현지국내의 부족한 투자자본을 공급할 수 있으며, 보다 매력적인 투자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외국인투자의 역기능을 강조하는 시각에 의하면, 비록 외국인투자의 자본이전 기능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 하여도 그들의 자본수익률이 국제자본시

장의 장기평균이자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매우 비싼 자본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둘째, 외국인투자는 자본 이외에도 서구의 기업가 정신이나 현대적인 경영기법 등을 우리나라에 이전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병목요인의 하나인 경영관리능력의 부족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순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영기법의 이전효과에 관해서도 일부 비판적 시각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최고 경영진이나 고급전문직종의 대부분이 본사출신에 의하여 독점되어 있을 뿐 아니라, 외국인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현대적 경영기법도 개인적인 인간관계에 의존하여 비교적 단순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중소기업들에게는 별로 관련이 없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특히 선진 외국기업이 본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노사정책을 국내에서 그대로 적용한다든지 혹은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고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지나친 사내 복지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내 기업을 이질화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셋째, 외국인투자의 자원이전 효과 중 국내 경제개발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으로 기술이전 기능을

들 수 있다. 기술은 자본과 더불어 경제개발에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외국기업은 이러한 기술을 생산하고 또한 이전시킴으로써 국내 경제개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자본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반대되는 주장을 펴고 있다. 즉, 외국기업이 국내에 도입하는 기술은 첨단 기술이 아니라 이미 본국에서 사양기에 접어들어 수종의 것들이며, 또한 외국기업들은 국내에서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기보다는 이미 개발된 제품의 단순한 조립생산을 주로 한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국제수지 효과

외국자본이 국제수지상에 미치는 효과는 국제수지의 구성요소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출입을 통한 무역수지상의 효과와 자본유출입 효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국제수지 순효과 = 수입대체 효과 + 수출증대 효과 + 자본유입 순효과”

여기서 수입대체 효과는 외국기업의 직접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순수입감소 효과를 나타낸다. 반면 수출증대 효과란 국내진출 외국기업이 수출활동을 함으로써 추가적으로 발생한 순수출증가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입대체 효과와 수출증대 효과는 결국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의 무역수지상에 미치는 순효과를 측정하게 된다. 한편 자본유입 순효과는 외국기업에 의한 최초 및 추후의 투자자본유입의 크기와 투자이익의 송금 및 기술료 지급 등과 같은 무역외수지상의 자본유출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외국기업은 이전가격의 조정으로 인한 음성적인 자금이전의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자금유출의 형태도 비단 배당금이나 기술료 이외의 이자·수수료, 부품·원료의 판매이익 등 다양한 방식의 수익회수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외국기업에 의한 순자본유입 효과를 정확히 추정하기는 방법론상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경쟁 효과

일반적으로 외국기업은 국내기업에 비하여 자본·기술·마케팅 면에서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기업이 국내에 진출할 경우 경쟁구조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외국자본의 역기능을 우려하는 사람은 외국기업에 경쟁할 만한 국내기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자본의 진출은 국내시장의 독점화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외국기업은 고비용 유발과 높은 수익률로 국내경제의 비효율성을 가속화시키게 될 것이다.

반면 외국자본의 순기능을 주장하는 사람은 외국기업의 진출로 기존의 독과점적인 국내 시장구조가 오히려 붕괴될 수 있으며, 이 결과 경쟁이 치열하게 되어 경제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주장한다.

이상과 같이 국내시장의 경쟁구조에 미치는 외국기업의 영향은 일률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우며, 정부의 반독점금지 정책의 강도 및 산업구조조정 정책의 여하에 따라서도 경쟁구조에 미치는 효과는 다를 수 있다.

정책적·정치적 효과

외국자본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의 하나는 외국기업이 정부의 각종 경제정책을 무력화시킬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의 정책과의 충돌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외국자본의 역기능을 우려하는 사람은 이처럼 외국기업이 정부 정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외국기업은 소위 이전가격의 조작으로 정부의 조세 등의 재정정책을 회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내기업들과는 달리 필요자본을 해외의 모기업이나 자회사로부터 쉽게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긴축통화정책 등도 쉽게 무력화시킬 수 있다.

또한 외국기업은 자신의 기업목적만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나머지 불공정 내지 부도덕한 영업행위를 하거나 혹은 각국 간의 법률규정상의 차이를 교묘히 이

용해 결과적으로 비윤리적이거나 비도덕적인 영업활동을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즉, 일부 외국기업들은 자신의 권익보호를 위해 본국정부의 비호하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정부관리나 정치인에게 뇌물을 공여함으로써 관료적 부패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회·문화적 효과

외국기업이 국내의 사회·문화에 끼치는 영향도 순기능과 역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 순기능으로는 외국기업이 국내에 들어오으로써 보다 합리적 가치관이 유입되어 우리 사회의 비효율적·비합리적 측면을 개선하고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 사회발전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즉, 외국기업이 우리 사회의 변화의 동인, 즉 ‘change agent’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외국자본의 역기능을 주장하는 사람은 외국기업이 유입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치관이 파괴되고 계층간의 갈등 심화 등 우리 사회의 이중구조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문제와 관련하여 외국기업들은 서민생활에 필수적인 생활용품 대신 최첨단의 하이테크 제품이나 혹은 고가의 소비제품만을 이전함으로써 국내에 불필요한 과소비 내지 불건전 소비풍조를 야기시킨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효과 극대화’·‘비용 최소화’ 하는 정책 개발을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외국인투자는 국내 경제 및 사회에 긍정적·부정적 양 측면으로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이러한 동전의 양면을 지니고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보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과거와 달리 우리는 현재 국가 간의 교역에 있어서 점점 더 장벽이 없어지고 하나의 시장으로 향하는 글

로벌 시대에 살고 있다. 외국인자본을 감정적으로 또한 국수적으로 대하여 우리나라로 향하는 외국인투자의 유입을 막는다면, 우리나라는 외국인투자로 얻을 수 있는 여러 많은 혜택을 잃게 될 것이고 또한 국제사회에서 성숙한 국가로 대접받지 못할 것이며, 우리나라의 많은 해외투자도 지장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해외시장에 활발히 진출하여 현지에서 기업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외국기업들에 대하여 동등한 대우를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작금의 WTO 시대에서 요구되는 상호호혜의 원칙이다.

외국인투자의 긍정적·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순효과가 큰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되, 일단 유입된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긍정적 효과가 보다 확대되도록 인센티브를 늘리고, 부정적 측면은 감소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반면 외국인투자의 매력에 빠져 긍정적 측면만 보고 이에 대한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와 사회가 외국인투자의 나쁜 면만 받아들여지게 되어 외국인투자가 들어오지 않은 것만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대처 방식은, 객관적으로 외국인투자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긍정적 효과에서 부정적 효과를 차감한 순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냉정하게 따져 보아 순효과가 큰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되, 일단 유입된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긍정적 효과가 보다 확대되도록 인센티브를 늘리고, 반면 부정적 측면은 되도록 감소 되도록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각 영역별로 외국인투자가 미칠 수 있는 긍정적 효과(편익)와 부정적 효과(비용)의 가능성을 파악하여 긍정적인 효과는 극대화하되 부정적인 효과는 가능한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정책 개발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외국인투자의 유입을 적극 유도하면서 동시에 우리나라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한정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서둘러야

외 환위기 이후 우리 금융산업은 그동안의 구조조정과 은행의 겸업화 추세로 큰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다. 은행은 대형화되면서 금융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증권·보험사는 그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 또 다른 변화는 은행을 비롯한 보험·증권 등 모든 금융산업에서 외국자본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2004년 외국계 은행의 총자산은 약 270조원으로 국내 전체 은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2%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증권에서 25%, 보험에서 비중도 15%를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비중은 외환위기 전 4~6%에 비하면 크게 높아진 것으로 앞으로 매각예정인 금융기관까지 고려하면 외국계 금융기관의 비중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구조조정 촉진 등의 계기 제공

이렇게 외국자본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한 데에도 그 원인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동안 우리 산업자본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kimjs@yonsei.ac.kr)

이 금융산업으로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유지분 상한을 4%로 규제한 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 즉, 국내자본과의 큰 경쟁 없이 외국금융회사나 투자회사들은 경쟁력이 떨어져 영업수익을 내지 못하는 우리 금융산업을 쉽게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외국자본에 의한 우리 금융산업의 소유는 한편으로는 그동안 낙후된

우리 금융산업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그동안 정부의 보호 아래 경쟁 없이 영업하던 우리 금융산업은 이제 외국계 금융기관과 경쟁하게 되면서 이익창출을 위해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실제 은행의 경우에는 과도한 창구의 영업인력을 줄이는 등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낙후된 우리 금융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겨지고도 있다. 그동안 금융시장은 개방되었지만 우리의 금융기관들은 과거의 타성에 젖어 가장 중요한 새로운 금융기술을 습득하지 못했다. 은행은 과거와 같이 담보 위주의 대출심사나 예금과 대출을 통해서만 영업을 해왔다. 외국 금융기관과 같이 새로운 자금조달 및 운용방법을 개발하고 새로운 금융기술을 배우지 않았던 것이다. 외국 금융기관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면서 앞으로는 우리 금융기관들도 새로운 금융기술을 배우게 될 것이다.

◇ 이 글은 필자의 개인의견으로서, KDI의 공식견해나 「나라경제」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소비자금융 치중 등 부작용도 노정

이러한 순기능 외에도 외국 금융기관이 진출하면서 많은 부작용 또한 나타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외국계 금융기관의 주된 영업 분야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성장하고 있는 나라에서 금융기관은 소비자나 가계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는 소비자금융에서도 역할을 하지만 그보다도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는 기업금융에서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여유자금을 모아서 기업에게 연결해 주는 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의 역할이 투자를 증대시켜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계 은행들의 대부분은 소비자금융에 집중하여 높은 금리의 가계대출을 통하여 영업수익을 늘리고 있다. 즉, 기업금융을 하지 않고 손쉬운 소비자금융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로 영업이 계속되는 경우, 그리고 앞으로 외국계 은행이 더욱 늘어나는 경우 우리의 기업투자는 점점 줄어들게 되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될 수도 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외국계 금융기관들이 장기적 영업이익보다는 단기적 영업이익이나 주주의 배당에 더 관심을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단기적으로 이익을 취하여 기업가치를 높인 후 이를 다른 기업에 높은 가격에 매각하기 위해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경영행태는 외국자본이 고유의 금융업종에 기반을 둔 자본이 아니고 투기자본이거나 펀드형태의 자본인 경우에 더 심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경우 선진 금융기술을 전수하거나 혹은 장기적인 기업투자나 대출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수익이 높은 단기대출이나 부동산투자 등에 경영이 치중되어 결국 우리 경제에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 외에도 외국 금융기관의 비중이 높아져서 우리 금융산업이 외국자본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 결국 우리 실물산업까지도 외국자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을 문제로 들 수 있다.

주식시장이 개방되면서 많은 우리 기업들이 외국자본에 의해 소유되고 있다. 물론 세계화시대에 이는 어쩔 수 없는 추세이지만, 외국자본에 의해 과도하게 우리 실물과 금융산업이 영향을 받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외부충격에 너무 과도하게 노출되게 된다. 이 경우 외부충격이 있을 때 경제가 쉽게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자본의 금융산업 소유규제를 완화하고, 투기자본·펀드가 금융기관을 소유하는 것을 규제하는 한편, 건전한 외국의 금융산업이 우리 금융기관에 투자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고급 금융인력의 양성과 선진 금융기술의 습득도 중요하다.

투기자본 여부에 대한 선별력 높여야

이러한 부작용들을 고려할 때 우리는 외국자본 비중 증대에 대한 대책을 하루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먼저, 현재 우리 산업자본이 금융산업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좀더 넓혀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 4%로 제한되어 있는 우리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지분율을 어느 정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소유규제도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 실물자본의 과도한 집중을 고려할 때 실물자본의 금융기관 소유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으나, 최근까지 수출이 늘어나면서 우리 기업들의 재무구조도 건전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철저한 금융감독을 통해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소유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필요한 경우 우리도 다양한 펀드를 통해서 우리 금융기관을 소유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결국 국내자본의 진출 없이는 외국 금융기관의 비중이 더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좀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본시장이 자유화된 지금 외국 금융기관이 우리 금융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으나 진출하려는 외국 금융기관을 우리가 선별할 필요는 있다. 즉, 투기 자본·펀드가 금융기관을 소유하는 것을 규제하고 건전한 외국의 금융산업이 우리 금융기관에 투자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아울러 영업 분야에 있어서도 지금과 같이 소비자 금융 등 소매금융 위주 금융기관의 진출을 허용하기 보다는 기업금융이나 투자은행 부문의 금융기관이 들어올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하고 규제해야 한다. 이는 소비자금융 부문뿐 아니라 기업금융이나 투자은행 부문에서 우리 금융기관의 금융기술이 절대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진출한 외국 금융기관이 단기적 대출이나 영업이익에 치중하지 않고 금융기관의 공공성 역시 고려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 예를 들면, 금융감독원이 실시하는 것과 같이 외국 금융기관의 이사 구성에서 내국인의 비중을 늘리는 등의 규제와 감독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고급 금융인력 양성과 금융기술 습득도 중요

이러한 제도적 그리고 감독정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실제로 금융과 같은 서비스업은 비교역제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외국 금융산업의 국내시장 진출은 다른 산업에서보다는 쉽지 않다. 그러나 그 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경우 외국 금융기관의 진출은 가능하게 된다. 우리 금융기관 역시 너무 낙후된 금융기술 때문에 영업손실이 늘어나면서 결국 매각을 통해 외국 금융기관의 비중이 늘어났던 것이다.

실제로 금융산업에서의 기술은 실물에서보다 더 중요하다. 인적 자본이 가장 중요한 금융산업에서는 금융기술에 의해서만이 부가가치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1970년대 무역시장을 개방하면서 무

역기술을 배우기 위해 대학에 무역학과를 만들어 무역시장 개방에 대응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면서 우리는 금융시장을 개방하기 시작했는데 이에 대한 금융기술과 전문인력을 준비하지 못했다. 그 결과 외환위기를 겪었고 우리 금융산업은 외국자본의 손에 점점 더 장악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금융인력의 양성과 금융기술의 습득은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금융산업은 금융기술의 습득이나 교육투자에 너무 인색하다.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수수료수익이나 가계대출 등으로 손쉽게 단기영업이익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선진 금융기술을 배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않고 있다. 새로운 전문인력의 영입에도 큰 관심을 쏟지 않고 있다.

하루속히 자금의 모집에서 운용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선진기술을 익히도록 해야 한다. 금융자산가격의 예측기법이나 기업대출심사기법 그리고 파생금융상품 투자와 투자은행기법 등에서 외국의 금융기술을 외국 금융기관을 통해서 배우든지 혹은 교육예산을 늘려서 국내 교육기관을 통해서 배우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제도나 정책적 대응을 통해서 외국 금융기관의 진입을 막으려 해도 결국 우리 금융산업은 외국자본의 손에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사모펀드 등 국내자본 적극 육성해야

외 환위기 이후 구제금융을 받았던 금융기관과 위크아웃 기업들이 올해부터 M&A(인수합병) 시장에 매물로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며 따라 이와 관련한 외국자본 기능·역할 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외국자본의 순기능과 역기능은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바람직한 대응방안을 알아본다.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gpchoi@kif.re.kr)

경제시스템 전반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기폭제' 역할

첫째, 외국자본은 우리 금융시스템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외국자본의 역할이 증시되는 현실은 어쩌면 우리 금융체제의 한계와 문제점을 대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M&A와 관련된 외국자본의 두드러진 역할은 국내자본의 낙후된 상황을 반증하고 있다. 소위 '투자은행' (investment bank)에서 주로 취급하는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필요한 시점에서 우리 금융시스템은 '원죄적' 한계 또는 역량 부족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공백(gap)을 메워 주는 것이 외국자본이다. 외국자본은 한국경제의 회생과 구조조정을 가능케 하

고 시장개혁에 저항하는 이해관계자 집단의 이해상충관계를 극복하면서 '주주 위주의 경영'이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착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둘째, 외국자본의 진출은 경쟁구도를 강화시켜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경쟁에 제한적으로만 노출되었던 취약한 국내금융시스템은 여러 군데서 포착되는 공백을 외국자본의 역할로 메

워가면서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각종 묵시적·명시적 보증이나 개입으로 위험산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시장여건, 과도한 위험산정의 결과로 자금흐름이 단절된 금융 양극화, 그리고 정치적 고려로 인해 시장기능에 의존하기 어려운 복잡다단한 사안에 대해 외국자본은 최대한 시장원칙에 의거하여 비교적 신속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부실처리 측면에서의 역할은 단연 돋보인다. 개방경쟁 환경하에서 비교적 빠른 시일내에 우리 금융권에 필요한 변화방향을 제시하고 있음도 인정해야 한다. 즉, 외국자본은 낙후된 대출관행이나 방만한 지배구조가 더 이상 허용되지 못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일조하고 있다. 더욱이 외국자본으로 인한 국내 기업의 경영 투명성과 지배구조 개선 효과, 주가 상승에 따른 기업의 자본조달비용 감소 효과, 법·제도 선진화 효과, 대외개방으로 인한 규제완화 효과 같은 것은 잘 보이지는 않지만 간과할 수 없는 효과이다.

◇ 이 글은 필자의 개인의견으로서, KDI의 공식견해나 『나라경제』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셋째, 자본시장 발전에 촉매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의 증가는 은행 중심으로 운영되는 국내금융시스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균형추' 역할을 하고 있다. 해외자본은 주식시장 교란요인으로 과도하게 부각되는 측면과는 달리 국내 주가의 상승 및 주가 변동성에 비교적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로, 주식수익률은 증권시장 개방시점인 1992년부터 증가하였으며, 개별 우량주식의 경우 외국인 투자지분의 증가에 따라 주식수익률의 분산은 감소하였다. 또한 외국인투자를 통해 보다 광범위한 차원의 정보가 국내 주식시장에 원활하게 전달됨으로써 주식시장의 유동성·효율성이 증대된 것으로 파악된다.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편입 정도가 높아짐에 따라 자본시장 접근기회를 통한 안정적 신용흐름의 확보로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고 리스크 관리 강화와 선진 금융기법을 전수한다는 점에서 국내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 심화시킬 수도

그러나 우리의 자체적 시장여건이 구비되지 않은 여건하에서 외국자본은 칼날의 양면같이 정반대의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위험을 동시에 안고 있다.

첫째, 우리의 시장여건상 질 좋은 외국자본보다는 단기투기 위주의 자본들이 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우리의 구조적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하면서 국가 단위의 결속력을 저하시키게 된다. '세계적 기준'의 적용은 경쟁력 있는 부문과 그러하지 못한 부문 간의 차이를 확대시킬 수밖에 없다. 상당한 규모의 생산성이 낙후된 부문을 안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러한 잣대의 적용을 받는 것이 기회인 동시에 심각한 도전일 수밖에 없다. 사실 투기

적 자본이 판을 치는 현실은 단기적 투기목적 위주의 자본을 제외하고는 장기적으로 자본이 머물 수 없는 우리의 원천적 여건상 제약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투기자본의 피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의 여건과 관련 없이 자본흐름의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지켜나가는 그리 쉽지 않아 개방 초기에 관찰되는 자본계정의 변동성은 금융안정의 축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오히려 불안을 안고 가는 기이한 현상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체로 은행 등 금융기관의 신용공급은 기본적으로 경기순응적(procyclical)인 성격을 지니지만

외국자본의 경우 이러한 특징이 더욱 두드러져 글로벌 금융기관의 자산배분전략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 및 경제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둘째, 외국자본은 양극화와 같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악화시키기 쉽다. 자본배분의 성격상 위험에 따른 차별화는 불가피하며 국내의 다양한 위험요인에 대한 국제적 평가는 우리가 완화시켜야 하는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순수한 시장원리로 작동하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제고될 수 있으나 국가적 차원에서의 효율성은 오히려 저하될 수 있다. 국경 없는 환경에서의 자원배분 효율성이 국가라는 테두리 안에서의 효율성 추구와 종종 상충관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예로, 중소기업 부문에 대한 안정적 신용흐름은 낙후된 부문의 성장과 균형적 산업기반 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자원배분은 건전성과 수익성이 중시되는 외국자본의 비중이 높아지는 여건하에서 기대하기 어렵다.

최근 은행부문에서는 외국자본의 영향력 확대로 중소기업금융 및 서민금융이 위축되고 금융의 산업지원이라는 공공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대기업은 외국자본의 적대적 M&A 위협에 시달리는 가운데 신규투자

외국자본은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동시에 낼 수밖에 없는 만큼 한쪽에 치우친 시각을 갖기보다는 균형적 시각으로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의 과제는 발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외국자본을 활용할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보다는 고배당과 유상감자, 자사주 매입 등 외국 대주주의 요구에 부응하는 데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생산적 투자에 사용해야 할 경영자원과 자금이 경영권 방어 및 단기적 수익개선 및 배당에 집중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경기회복을 지연시키고 나아가 국가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셋째, 자원배분의 증추적 기능을 외국자본에 의존할 경우 우리의 산업기반은 공동화(hollowing out)되거나 예측될 수밖에 없다. 해외자본의 성격에 대한 분석도 없이 거의 무방비 상태로 우리 산업의 목줄을 해외에 맡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산업자본에 의한 국제투기펀드의 직접투자는 국부유출과 장기적인 산업 황폐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개발도상국에 있는 소개방 경제가 대규모 경제로 예측되는 추세는 불가피한 현실이다.

이를 종합하면 외국자본은 우리 금융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시장압력을 증대시키고 우리에게 결여된 금융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으나,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심화시키고 경제를 해외요인에 지나치게 예측시키는 폐단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명한 사실은 해외자본의 활용 없이 우리 경제가 지속적 성장을 통해 선진경제로 발돋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의 과제는 외국자본을 우리 발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가는 것이다. 초기 투기자본이 판친다고 하더라도 결국 우리의 시장역량이 갖추어지면서 해외자본도 점차 안정적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듯 외국자본은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동시에 낼 수밖에 없는 만큼 한쪽에 치우친 시각을 갖기보다는 균형적인 시각으로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부존자원이 부족해 대외무역을 통해 글로벌 경제의 혜택을 보며 성장을 도모해야 하는 경우 외국자본의 순기능을 극대화하면서 세계시장에 진출하려는 전략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다만 그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정체성이 불분명하고 투자차액

만 노리는 외국의 사모펀드 등이 국내 자본시장에서 횡행하지 못하도록 자본시장 관련 제도나 법규를 보완하고 그 집행을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위 국내자본과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결국 선별적 대응전략만이 외국자본 진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질 좋은 자본이 장기적으로 머물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함을 일깨워준다.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국내 사모펀드 육성 필요

우리가 처해 있는 개방환경은 우리가 단기에 감당하기에는 벽찰 정도로 다양한 방면의 요구를 강요하고 있다. 소유권이라든지 법·제도라든지 기초적 자본시장 작동에 필요한 요소들을 충족시켜 가면서 금융시스템의 선진화를 기대하기에는 기존 지배구조상의 상당부분을 포기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지배구조상의 변화 없이 시장여건의 본질적 변화를 추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제 논점은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어떻게 공정한 법규를 만들어 국내기업과 외국자본 간 역차별 논쟁을 해소하고, 사법적 판단을 선진화하며, 엄격히 법규를 집행하느냐 하는 본질적 문제로 옮겨가야 한다.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지배권 취득목적인 경우 경영참여 여부, 경영진 변경 계획, 지배구조와 관련된 정관 변경 계획, 자본 추가취득 또는 처분 계획을 상세히 밝히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했고, 「증권거래법」도 개정돼 투자목적에서 경영권 행사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지분소유자의 상세한 정보를 밝혀야 하며 목적 변경시 5일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냉각기간이 적용되는 등 제도보완이 이뤄지고 있다. M&A를 시도하는 외국자본에 대해서는 인수 부담을 늘리고 국내기업에 대해서는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연내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나 이것만으로는 국내기업들이 M&A 위협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차제에 다양한 대응책 개발이 계속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 스스로가 M&A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키워가야 한다.

특히 국내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이 필수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국내 재벌 총수들은 아직도 평균 2%도 안 되는 지분으로 수십 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자산 5조원 이상 재벌그룹 14개의 대부분이 계열사 간 순환출자관계를 통해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다. 왜곡된 기업 소유지배구조가 M&A 위협을 불렀다는 점은 이미 SK㈜에 대한 소버린의 공세 등에서 충분히 확인된 바 있다. 투명경영과 더불어 복잡한 소유지배구조를 단순화·투명화함으로써 외국자본의 M&A 위협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마땅하다.

한편 M&A 시장에 참여할 국내자본도 적극 육성해야 할 것이다. 사모투자펀드(PEF)의 육성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뉴브리지·론스타 등 미국계 사모펀드들이 한국에서 운용하는 자산 규모만 2~3조원에 달한다. 이에 비해 한국에서는 지난해 12월 관련법이 처음으로 만들어져 국내 사모펀드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다. 자산운용 규모도 1천억원대에 불과하다. 국내자본들이 해외자본에 맞설 수 있도록 하려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줘야 하고, 연기금들의 자산운용 규제를 좀더 풀어줄 필요가 있으며, 올 연말 도입 예정인 기업연금의 활용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대규모 공적자금 등이 투입돼 희생한 주력산업의 우량기업들이 외국계 자본에 넘어갈 경우 국부는 급속하게 유출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기업들이 배제된 가운데 외국계 자본만 M&A에 참여하면 제값을 받지 못하는 '헐값 매각'이 될 수도 있다. 외국자본의 국내 M&A 시장 독식을 방지하려면 국내 자본에 대한 역차별을 없애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능력 있는 기업들이 필요한 워크아웃 기업들을 M&A 시장에서 직접 사가는 것이다. 그러나 종종 우리 기업

들은 신규 사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적어도 공정경쟁의 토대하에서 M&A 시장 참여기업들에 대한 국적상 차별을 없앨 필요가 있다. 국내자본과 기업들의 손발을 묶은 상태에서 워크아웃 기업들을 매각하면 지배구조가 우리보다 열악한 외국자본이 휩쓸어갈 위험이 있는 것이다. 국내자본이 성숙할 때까지 우량기업의 매각속도를 조절하면서 사모펀드시장의 육성을 통해 국내자본을 축적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국계 사모펀드와 공정한 기업인수경쟁을 할 수 있는 국내 대형 사모펀드의 탄생과 이를 운영할 능력 있는 민간부문의 인재양성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기업의 유능한 경영진이 적대적 M&A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독소조항'(poison pill)과 같은 효율적 방어수단을 법규상 도입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독소조항, 유럽은 차등의결권주·피라미드출자 등을 통해 적대적 M&A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으며, 일본은 상호출자와 금융기관 안정주식 보유로 경영권 위협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참고로 좁은 국토와 부족한 자원을 가진 우리나라가 동북아시아대를 맞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네덜란드·아일랜드·스위스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의 법규와 제도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외국자본에 대해 글로벌 기준에 따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고 증시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한 감시활동을 펼치는 등 금융주권 확립을 위한 노력을 적극 전개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해외자본의 역할은 유입되는 자본의 성격 외에도 대내외 시장신뢰 구축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시장체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

사모투자펀드(PEF) 등 M&A
시장에 참여할 국내자본도 적극
육성해야 할 것이다. 국내자본이
해외자본에 맞설 수 있도록 하려면
이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줘야 하고, 연기금들의 자산운용
규제도 풀어줄 필요가 있다.

연초 금리상승과 대응전략

연 초부터 시중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표금리인 3년물 국고채 금리는 지난해말 3.28%이던 것이 불과 한 달 남짓 지난 2월 11일 현재 4.46%로 무려 1.18%p, 비율로는 36%가 수직 상승하였으며, 10년물 국고채나 회사채 등도 비슷한 폭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수치상으로만 보자면 수년째 지루하게 이어져 온 초저금리 기조에서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이다.

최근의 채권금리 상승이 저금리 시대를 마감하고 금리상승세로 대세가 돌아섰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그 원인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다. 채권금리는 여러 요인에 의해 움직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수급과 경기에 의해 좌우되는 면이 크다. 채권에 대한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는 경기가 상승할 때 채권금리는 상승세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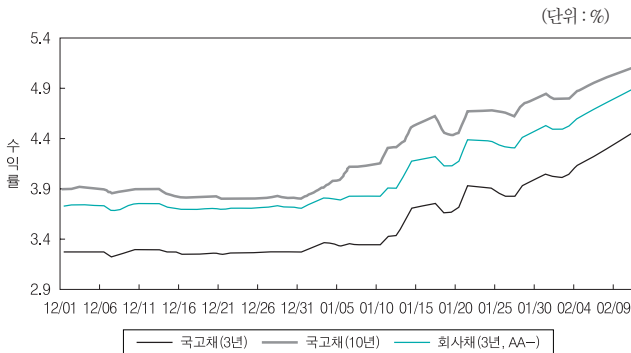
이런 측면에서 보면 최근의 금리상승은 이러한 수

요와 공급에 의한 측면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새해 들어 예상 수준을 상회하는 국고채 발행계획, 장기채 비중확대, 금융통화위원회의 콜금리 동결 및 한국은행 총재의 금리인하에 대한 부정적 발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채권금리가 급등하는 모습을 연출하였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조짐이 있어 하반기에는 경기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최근의 금리상승이 하반기 경기회복을 선반영한 중장기적인 추세전환과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를 바탕으로 전망해 본다면 최근의 금리급등세는 당국의 채권물량 조절 등으로 인해 찾아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동안 금리의 절대수준이 낮았었다는 인식과 금리급등에 따른 투자심리 냉각으로 인해 어느 정도는 금리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향후 경기회복에 대한 가능성이 보다 가시화된다면 다시 상승세로의 추세반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아직 금리가 상승세로 대세 반전했다고 보기는 어렵더라도 향후 하락보다는 상승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채테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해 보이는 대목이다.

금리상승기에는 아무래도 수익률이 불안해질 수 있는 채권쪽 투자보다는 주식 등 다른 쪽의 투자비중을 늘리는 것이 유리하다. 채권금리 상승은 채권가치의 하락을 의미하기 때문에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금리가

〈그림〉시중금리 상승 추이(2004. 12~2005. 2)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수익률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커진다. 하지만 금리상승기를 이용하여 고수익의 안정적인 채권투자가 가능한 방법도 있다. 바로 금리가 높을 때(채권가격이 쌀 때) 채권에 투자해 이를 만기까지 보유하는 전략이다. 가령, 일시적인 금리 급등기를 이용하여 예금이자율보다 유리한 조건의 채권을 매입해 만기까지 보유한다면 사실상 이후의 시중금리 변동과는 관계없이 확정수익을 얻을 수 있다.

정기예금 등의 확정금리 예금상품을 선호하는 투자자의 경우는 최근의 채권금리 상승이 곧바로 예금금리 상승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시중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예금금리도 오를 가능성이 커지지만 채권금리가 오른 것만큼 예금금리가 따라서 움직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예금금리는 정부 정책에 의해 결정되는 콜금리 목표치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다. 그렇지만 현재 콜금리에 대한 전망을 보면 경기회복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당장 콜금리 목표치를 시중금리에 맞춰 끌어올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정기예금 등에 가입한다면 금리상승을 감안해 무조건 단기로 가입하기보다는 장·단기 금리차와

향후 전망 등을 고려해 가입기간을 정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한편, 대출사용자의 경우엔 오르는 금리가 결코 달가울 리 없는 일이다. 특히 사용하고 있는 대출이 변동금리 조건이라면 금리상승은 곧 대출이자의 추가 부담을 의미한다. 앞서 언급했지만 지금의 금리상승세가 속도는 다소 둔화될 수 있지만 하락보다는 상승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대출이자 증가를 염두에 둔 자금계획이 필요하며, 변동금리대출을 고정금리나 금리변동주기가 긴 대출로 갈아타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고정금리대출로 갈아타기 위해선 대출금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와 고정금리대출 프리미엄 등의 비용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대출을 사용할 기간과 지출비용 등을 감안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새로 대출을 받는다면 고정금리 조건이나 변동금리라도 금리변동주기를 길게 가져가는 것이 금리상승기에 효과적인 대응방법이다. ■

한상인 신한은행 PB사업부 재테크팀장
(hans03@shinhan.com)

최흥건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대담 이재영(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



일시 2005년 2월 15일

장소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집무실



“

정부는 2008년까지 혁신형 중소기업 3만개를 육성하기 위해 벤처기업 활성화, 부품·소재 산업 육성, 금융지원시스템 재정비 등 12개 정책혁신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최근 위원장님이 취임하신 후 중소기업특별위원회에서 중소기업정책의 기본방향 및 육성시책 등 핵심 정책을 발표하는 등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간략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여타 위원회와는 달리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정부조직법」(1998년)에 근거하여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장인 저와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된 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중소기업청 등 13개 관계부처 차관 및 민간전문가 등 25명으로 구성되어 중소기업 시책의 수립, 관계부처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확인 및 평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이 부여하는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 2일부터는 대통령께서 참석하여 범부처적인 중소기업 정책방향 및 구체적 분야에 관한 관련부처의 대책을 보고받고 이행현황을 직접 챙기는 중소기업특별위원회 확대회의를 매분기별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7일 열린 중소기업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중소기업 정책혁신 과제와 대책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중소기업의 경영애로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중소기업의 정책 체감도가 낮다는 인식이 강해, 지난해말 현장의 중소기업 1만개를 대상으로 경제양극화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얻은 결과와 대통령께서 올해 연두기자회견에서 밝힌 경제정책의 중심을 중소기업에 두고 지원방식을 바꾸어 나가겠다는 내용을 반영하여 중소기업 정책혁신 12개 추진과제를 확정하여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 ‘중소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고 하는데, 현재 중소기업은 매출부진, 자금조달 곤란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으며, 무엇보다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 저하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1만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하셨는데, 우리 중소기업의 현주소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으며 근본적 처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중소기업 실태에 관한 심층조사 결과, 우리 중소기업은 경쟁력 약화, 판로·자금·기술인력 확보 애로,

“

‘중소기업이 살아야경제가 산다’고 하는데,
현재 중소기업은 매출 부진, 자금조달 곤란 등 경영
애로를 겪고 있으며,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



구조조정 지연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어, 단기 처방 위주의 대책이 아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진단되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의 경쟁력 실태를 보면, 대다수 기업(63%)은 주력상품이 이미 축소되고 있는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어 지속성장에 한계성을 보인 반면 혁신형 중소기업의 대다수(84.6%)는 차기 상품을 준비하고 있는 등 어려운 경영여건하에서도 시장변화에 적기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혁신형 중소기업 구조로의 이행을 촉진하는 전략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촉진전략으로 우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혁신형 중소기업 3만개를 선도그룹으로 육성하여 여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동반성장을 주도하는 전략을 추진키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업종·성장단계·규모 등에 따라 기업유형별로 차별화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정책의 기본방향도 보호·육성 위주에서 자율·경쟁 촉진으로, 직접지원 위주에서 인프라 등 생태계 조성으로, 공급자 주도형에서 수요자 맞춤형으로 전환키로 하고, 중소기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37개 행정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관련기관들이 총력지원체제를 확립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으로서 혁신형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는 추진전략은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규모나 업종에 따라 정책수요가 다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12개 정책 혁신 과제는 어떻게 선정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앞서 간략히 말씀드렸듯이 12개 정책혁신 과제는 1만개 중소기업을 업종·규모·성장단계에 따라 기업유형별로 조사 분석한 결과와 기업의 성장단계별·업종별·규모별 애로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맞춤형 대책입니다.

성장단계별 애로의 특성을 살펴보면, 창업·벤처단계에서는 신제품 판로개척의 어려움으로 매출부진(37.1%) 및 자금조달 애로(25.7%)에, 성장단계에서는 기술인력 확보 애로(42.4%)에, 구조조정단계에서는 주력상품의 시장위축(78.5%)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업종별로는 통신, 오락·문화 및 사업서비스업의 매출·이익이 증가한 반면 음식·숙박업 등 생계형 업종의 매출·이익은 감소하여 내수의존도가 높고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내수 침체로 경영애로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선도 중소기업군으로서 꾸준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만개 혁신형 중소기업 발굴 육성 의지가 천명된 현 시점에서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향후 어떤 방식으로 육성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따라서 기업유형별 정책혁신 과제(6개)로 벤처기업 활성화, 부품·소재기업 육성, 유통 등 서비스 분야 육성,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원활한 구조조정 및 대기업·중소기업 간 협력강화를, 경영활동의 인프라에 해당하는 정책혁신 과제(4개)로 금융지원시스템 재정비,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인력 지원 강화, 중소기업 제품의 시장창출, 중소기업 지원정책 정비를, 경쟁여건 조성 과제(2개)로 규제혁신, FTA 추진에 따른 대책 등 모두 12개 정책혁신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노비즈(INNO-BIZ) 기업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정부의 3만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크게 고무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이노비즈는 매출에 있어서 지난해 평균 82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22%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고, 고용창출에 있어서도 기업당 평균 44명으로서 청년실업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비율도 매출액 대비 56%로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는 등 힘겨운 여건에서도 혁

– 혁신형 중소기업이란 일반적으로 첨단·고도 기술을 가진 제조업체와 산업연관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체로서 새로운 사업 분야를 개척하며 미래의 성장과 고용창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기업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탄탄한 기술력을 가진 이노비즈기업과 도전정신이 강한 벤처기업 등이 대표적인 혁신형 중소기업이라 할 수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혁신형 중소기업의 수는 1만개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8년까지 3만개의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제하에 자금·기술·판로 및 인력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벤처기업 활성화, 금융지원시스템 재정비 등 12개 정책혁신 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혁신형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08년까지 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투자 모태펀드를 조성하여 투자하는 한편, 올해 안에 구조개선자금으로 책정된 1조3천억원 중 5,500억원을 혁신형 중소기업에 우선 배정할 것입

니다. 또한 기존 담보 위주의 금융관행에서 탈피하여 기술력과 미래가치 위주로 평가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기술을 근거로 한 금융지원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발표되어도 업계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낮아서 정책이 발표된 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불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12개 정책혁신 과제는 관련부처가 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중소기업청 등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과제가 당초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어떻게 추진할 생각이십니까?

- 대통령께서도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연두 업무보고시 별도로 반영하고, 세부과제별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중소기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점검·관리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우선, 12개 정책혁신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부처별 연두 업무보고시 반영토록 조치하였으며, 해당부처는 세부과제의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세부과제별로 코드화하여 분기별 이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확인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부처 간 협의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고 이행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는 등 정책과제 이행의 품질관리를 철저히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취임한 지 7개월이 경과하였는데 그간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정부 내 위상을 제고하고 기능과 역할을 신장하여 부처 간 중소기업정책의 효율적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

지는 등 중소기업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 중소기업계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며, 향후에도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기대되는데 위원장으로서 앞으로의 포부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은 규모별로는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업종별로는 제조업·서비스업 등으로 업태가 복잡 다양하고, 분야별로는 자금·기술·인력·판로 등을 포괄하고 있어서 관련부처도 중소기업청을 비롯한 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등 거의 모든 부처가 직·간접적으로 중소기업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부처 간 효율적 정책조율이 무엇보다 긴요하다는 인식하에 대통령께서 올해 연두기자회견에서도 말씀한 바와 같이 중소기업정책이 경제정책의 중심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정책혁신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또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추가 보완토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활력회복은 물론 올해가 선진한국의 원년이 되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자체 공유지 관리에 경영 마인드 도입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국 박우진 주사 -

지난 2004년 말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국의 '올해의 혁신인'으로 선정된 경영지원과 소속 박우진 주사를 만나보았다.

“저 보다 더 혁신적이고 전문적인 직원이 많은데 제가 뽐혀서 영광입니다. 우리 국 직원들이 저를 이렇게 생각해주고 계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지난해 12월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국(국장 배국환)의 '올해의 혁신인'으로 선정된 경영지원과 소속 박우진 주사(36세)의 수상소감이다. 2년 3개월째 지자체의 공유재산 업무를 담당해온 그는 그동안 '수동적 유지·관리'에 머물렀던 지자체의 공유지 관리에 '경영 마인드'를 도입한 장본인이다.

“2003년 말 기준으로 공유재산 대장가액이 143조원 정도 됩니다.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200억원 정도는 될 것입니다. 이런 방대한 양의 자산을 가지고도 연간 임대수입이 1,645억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물론 실제 임대가 가능한 잠종재산은 14% 정도인 20조여 원이고 그중 토지와 건물은 14조원 정도인데도 임대수입률은 겨우 1%에 그치고 있는 것이지요. 만약, 일반 기업체가 이렇게 자산관리를 했다면 벌써 무너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박 주사는 '공유지는 공짜', '공유지는 먼저 보는 사람이 임차'라는 인식이 팽배한 현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공유재산을 단순히 가지고 있기만 해서는 안됩니다. 가진 자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자산 가치를 증대시켜 지자체가 풍족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그는 먼저 임대비용 및 매각대금을 현실화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 공유지의 임대료는 공시지가의 5% 수준에 불과해서 시중 임대료의 절반 내지는 3분의 1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

그는 또한 예산성과금 지급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공유재산을 잘 관리해서 수입이 늘었다면 그중 일부를 담당공무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면 임대수입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

으로 노력하게 될 것이고, 지자체도 그만큼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 주사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그동안 숙원이었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안)을 만들었다. 전체 99개 조문인 이 법안은 보존 위주의 공유재산을 활용 위주로 전환한 혁신적인 제도라는 안팎의 평가이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관련 학설과 판례를 틈틈이 정리한 「법 제정 조문해

설립)도 동료직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공유재산은 민원인들과 이해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질의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화문의까지 합치면 1년에 약 4천건 정도 접하게 됩니다. 관련된 법률이 130여개에 이르는 등 굉장히 복잡합니다. 업무가 과중하고 민원이 많기에 자연스럽게 지자체 직원들이 기피하게 되고 담당이 수시로 바뀌어 전문성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 제정의 취지와 관련 법률·학설·판례에 대해 세부적인 설명을 덧붙인 것입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은 재판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한치의 틈도 없이 면밀하게 검토하여 관계 법조문을 뒤져서 바른 해석을 찾아내야만 한다. 때로는 해석이 자기 구미에 맞지 않는다고 찾아와서 폭행을 하려 들거나 폭언을 하는 민원인들도 있다. 지난해 봄에는 어느 상습적인 민원인의 행패를 파출소까지 가서 해결한 적도 있었다. 업무에 임하는 원칙과 자세가 투철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공유재산이 주인도 없이 무관심 속에 방치되는 현실을 개선하고, 담당자들이 ‘만약 내 땅, 내 재산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우진 주사의 말이다.

참여정부가 출범 이후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 혁신에 대해서도 그는 “옛날의 ‘공복’ 개념에서 벗어나 ‘샐러리맨’이라는 의식을 공무원에게 심어 주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책임과 의무만 따지는 수동적인 공무원이 아니라, 자기가 받는 봉급 이상으로 회사에 이익을 남겨주는 전문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행정자치부 배국환 지방재정국장은 이런 그를 두고 “一局 내의 굶은 일에도 앞장서면서 자기 일에 열정과 자부심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라고 자랑스러워한다.

“일단 공유재산 관리에 경영 마인드를 도입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올해 중 완료하려 합니다. 향후에는 지



속적인 제도개선과 더불어 지자체에 자산관리 마인드를 심어주는 데 노력할 예정입니다. 개인적인 희망으로는 앞으로도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여 우리나라 최고의 공유재산 관리·운영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작은 힘이나마 지자체의 자주재원 확충에 도움이 되었다는 자부심을 가져도 부끄럼이 없도록 하고 싶습니다.”

한편,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국에서는 매년 그 해 가장 혁신적인 일을 수행한 공무원을 한 명씩 선정하여 연말에 푸짐한 상품으로 격려하고 국장실에 그 해의 혁신인물 보드(‘영광의 이노베이터들’)에 올려 직원들의 귀감이 되도록 하고 있다. ☞

글·이재열 나라경제 기자



책 속에는 지식의 나이트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밀려오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많은 지식을 직접 습득하기는 어렵습니다.

세월을 간직한 나무의 나이트처럼 많은 지식을 담고 있는 책을 읽음으로써

내 지식의 나이트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한국방송광고공사



경제정책해설

56 >> 부품·소재 산업 발전전략 마련 / 김경중

60 >> 지자체 기용재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 안세경

64 >>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 개통 / 심성근

부품·소재 산업 발전전략 마련



김경종
산업자원부 자본재산업총괄과장

지난해 우리 경제는 2,540억달러에 달하는 기록적인 수출을 달성하였으나, 국내적으로는 내수 및 설비투자 부진과 함께 경제양극화 현상으로 경제 전체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대외 여건도 한·일 FTA의 체결 추진과 함께 중국경제의 급성장 등으로 우리에게 기회와 위기의 원천이 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우리 경제의 각종 장애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핵심 산업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 산업이 부품·소재 산업이다.

부품·소재는 최근 세계적으로 완제품의 조립생산 능력이 평균화되면서 그 중요성이 새삼 부각되고 있다. 특히 주요 선진국의 거대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핵심 부품·소재에 대한 공급독점현상이 심화되면서 후발 개도국은 경쟁력 제고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를 들어, 컴퓨터 CPU(Central Processing Unit, 명령을 해독하고 산술논리연산이나 데이터 처리를 실행하는 장치)의 경우 미국의 인텔사에서 개발한 칩이 세계 컴퓨터의 80%를 점유하고 있으며, 디젤엔진 연료분

사장치의 경우 미국의 보쉬·델파이 등 세계 기업이 세계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품·소재 산업은 경쟁력 강화의 핵심요소

이렇게 급변하는 대내외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야만 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경쟁력 강화의 핵심요소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부품·소재 산업이다. 그러나 부품·소재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는 있지만 그 이면에는 국내 부품·소재 산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첫째, 부품·소재 산업은 대일 무역적자의 주범이자 만성적인 적자산업이라는 인식이다. 물론 부품·소재가 대일적자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지난해의 경우 부품·소재 부문에서 발생한 대일적자는 총 171억달러에 달하며 그 추세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경쟁력 취약에만 그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니다. 즉, 한·중·일 3국의 국제적인 분업구조하에서 물류비용 및 가격경쟁력을 감안한 전략적인 시장전환에도 그 요인이 있는 것이다. 범용 완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중국에 한국은 경쟁력을 보유한 범용 부품·소재를 주로 수출하는 반면, 기술력이 취약한 첨단 부품·소재는 주로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對중국 부품·소재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지난해의 경우 흑자폭이 163억달러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부품·소재 산

부품·소재와 관련된 대내외의 여건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월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부품·소재 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하였다. 동 전략은 그간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에 대한 평가, 동 산업의 국내역량 진단, 일본에서 수입되는 부품에 대한 분석 등에 기반하여 수립된 것이다.

업은 이미 1997년부터 8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흑자폭이 150억달러 내외까지 확대되었다.

둘째, 부품·소재의 수입의존도가 커 우리나라 제품의 국산화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인식이다. 그러나 최근 첨단제품의 수명주기가 단축되면서 국산화율 분석에는 조사품목과 함께 조사시기도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신제품 출시 직후 국산화율이 낮더라도 부품·소재 개발이 진행될수록 국산화율은 상승한다. 예를 들어, 휴대폰의 경우 최초로 신제품이 출시된 1996년 32%에 불과했던 국산화율이 현재 많은 부품의 개발을 통해 76%까지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가 원천기술을 보유한 MP3 플레이어(83%), PDP-TV(81.8%) 등 일부 첨단품목은 높은 국산화율을 보유하고 있다.

셋째, 최근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한·일 FTA의 추진은 국내 부품·소재 산업의 기반을 붕괴시킬 것이라는 인식이다. 그러나 적절한 보완대책을 병행한다면 한·일 FTA의 체결은 우리에게 기회로 활용이 가능하다. 실제 과거 수입선다변화가 해제되었을 때 일본의 코끼리밥술 때문에 국내 전기밥솥시장이 붕괴될 것이라는 인식으로 대부분의 대기업이 시장에서 철수하였으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경쟁력을 높인 결과, 현재 국내시장에서 일본제품은 찾아보기 힘들며 지난해에는 전기밥솥 중주국인 일본에까지 국내 전기밥솥이 진출한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다.

정부도 부품·소재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1980년대는 ‘기계류-부품·소재 국산화’를, 1990년대는 ‘자본재산업 육성’ 등의 지속적인 육성시책을 추진하였다. 2001년에는 「부품·소재특별법」을 제정하여 적

극적인 기술개발과 함께 신뢰성 향상, 부품·소재 전문 기업 지원 등 시장친화적인 제도를 적극 도입함으로써 최근 수출과 무역수지를 통해 나타난 성과를 이루게 된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추진을 통해 국내 부품·소재 산업은 이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었으나, 각종 대내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아직 미흡하다고 평가되며 여러 구조적인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우선 국내 부품·소재의 기술수준은 현재 선진국 대비 80%에 불과하여 원천기술이 포함된 첨단 부품·소재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국내 부품·소재 기업의 대부분은 규모의 영세성으로 원천기술 확보에 필요한 대규모 R&D 투자여력이 부족하다. 또한 아직 국내 부품·소재의 신뢰성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여 수요대기업은 구매를 기피하고 있으며 수요기업과 부품·소재 기업 간 종속적 계열화 관계로 안정적인 성장기반도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10대 전략 부품·소재 집중 육성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앞에서 언급한 대내외 여건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월 17일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품·소재 산업 발전전략’을 수립, 보다 적극적인 육성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발전전략은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국내 부품·소재 산업의 역량을 진단하고 일본에서 주로 수입되는 부품에 대한 분석 등에 기반하여 수립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요대기업과 중소 부품·소재 기업으로 양극화되어 있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부품

업체와 협력을 통해 모듈단위의 부품 생산이 가능하고 수요기업과 대등한 관계형성이 가능한 부품·소재 중핵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핵기업에 대해 각종 정부 지원을 집중하고 중핵기업을 중심으로 관련 부품기업들 간의 협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벤처 부품기업에 대해서는 종합기술 지원과 신뢰성 향상 지원 등을 통해 혁신역량 확충에 주력하고, 수요대기업에 대해서는 기술 및 상품의 기획단계부터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이르는 R&D 전단계에 걸쳐 중소 부품·소재 기업

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제품개발과 동시에 수요대기업을 통한 납품을 유도할 계획이다.

둘째, 급변하는 대내외 세계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도 세계시장 선점이 가능한 미래형 중장기 대형과제에 집중하여 향후 5년간 민·관 합동으로 5천억원을 투입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부품·소재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부품의 경우 수요기업과 부품·소재 중핵기업, 그리고 중소 협력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모듈단위의 대규모 중장기 기술개발 과제에 주력하여 원천기술의 확

〈표〉 10대 전략 부품·소재 리스트

	선정 품목	단위 부품소재	
전기 전자	LC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픽셀 Dimming 구동 Unit 면광원 • Touch Screen Panel • 기능성/Module용 커넥터 • 광확산필름 & 플레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은 free 방전 Lamp 및 발광 구동 분배기 • 러빙 포 • 휘도향상 필름 & 플레이트 • 렌티큘라필름 & 플레이트
	투명 CNT 복합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명 전자파 차폐기능 외장재 • 정전분산(ESD) 플라스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강도 경량 외장재
	RF embedded 기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mbedded passive device용 high Dk재료 • Embedded passive device 적용 차세대 기판 • RF embedding test bed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mprint 적용 기관개발
	근거리 무선통신 복합모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리 무선통신 복합 모듈용 안테나 • 근거리 무선통신 Multi-FE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PAN용 Multi-MAC
	OL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LED용 Soluble 인관재료 및 Ink • 감광성 유기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etter
자동차	초저배출가스 대응 기술된 차량용 동력계 제어시스템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엔진/변속기 제어기 • Linear O2 Senso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젝터 • ETC
	기능통합 일체형 샤시모듈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티어링 기어 프레임 • 너클 & 휠허브 유니트 • 복합 ABS 센서 • 너클현가 베어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ot Forming 프레임 • 외륜너클 • 고밀폐 저토크 톨휠실
	VISS(Vision-based Intelligent Steering Syste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ctive Steering 장치 • 제어로직(반자동 주차, 차선이탈 방지, 차선변경 보조) • 내장형 Inertia 센서 모듈, 절대 조향각 센서, 초음파 센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방, 측방, 후방 영상 인식 장치
기계	다계통 복합기계용 자율제어장치 모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계통 복합 STEP e-CNC 개발 • 고속 고정도 공작기계용 이송축과 터렛 드라이브 & 모터 개발 	
	e-Collaborative Integrated Power Train 모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lf-Calibrated Transmission • 역회전 방지형 스윙 모터 • 전자제어형 수평 유압 펌프 • 전자제어형 인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uto Adjusting Planetary Reduction Axle • 비례제어형 Travel 모터 • 관능제어형 컨트론펠브

'부품·소재 산업 발전전략'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현재 전체 수출의 40% 내외에 불과한 부품·소재 산업의 비중은 2010년에 50%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수출은 2,500억달러, 무역수지는 500억달러까지 확대되어 발전전략의 궁극적인 목표인 '부품·소재의 글로벌 공급기지화'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를 지원하고, 투자회임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특성이 있는 소재는 대학·연구소의 선행연구와 민간기업의 응용개발연구를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시장수요에 적기 대응이 중요하여 조속한 기술개발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특히 한·일 FTA에 따른 수입증가 예상품목을 중심으로 민간 투자기관의 투자와 연계하여 단품형 기술개발을 추진할 것이다.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하고 자체 개발역량이 취약한 부품·소재에 대해서는 투자유치와 기술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Japan Desk'(일본의 첨단 부품·소재 기업의 투자 유치를 전담하기 위해 일본의 노무라총합연구소와 우리나라의 한국무역협회의 한일투자전문가 7명으로 구성되어 2004년 2월 25일 출범)를 적극 활용하고, EU·미주·아시아 등 주요 권역별로 해외 로드쇼를 개최할 계획이다.

넷째, 국내 개발에 성공한 부품·소재에 대해서는 민간 금융기관과 연계한 원활한 자금공급과 함께 수요기업의 협력약정을 바탕으로 하는 '수급기업투자펀드'를 조성함으로써 대규모 설비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그리고 개발된 부품·소재에 대한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고 우수 부품·소재에 대한 전시회 개최, 수요대기업에 대한 포상 확대 등을 통해 국내 부품·소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공공기관의 부품·소재 구매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와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발전전략의 첫 번째 후속 조치로 정부는 지난 2월 18일 향후 미래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10대 전략 부품·소재를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선정하였으며(〈표〉 참조), 향후 이 품목을 중심으로 민·관 공동으로 1조5천억원을 집중 투입하는 등

R&D에서 사업화, 설비투자에 이르는 민간의 대규모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다섯째, 각 산업단지 및 지역 특화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부품·소재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성공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부품·소재 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반월·시화 산업단지를 우선 부품·소재 혁신클러스터로 시범 육성하고 향후 전지역으로의 확산을 검토할 계획이다.

'부품·소재 산업 발전전략'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현재 전체 수출의 40% 내외에 불과한 부품·소재 산업의 비중은 2010년에 50%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부품·소재 산업의 수출도 2010년에는 2,500억달러, 무역수지는 500억달러까지 확대되어 발전전략의 궁극적인 목표인 '부품·소재의 글로벌 공급기지화'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원천기술 확보에 성공하고 선진국에 비해 뒤처지지 않는 기술경쟁력을 보유할 경우 현재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핵심 부품·소재를 자급할 수 있는 산업 전반에 걸친 고부가가치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부품·소재 산업이 우리 경제의 튼튼한 허리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면 우리 경제의 성장과 고용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도 그리 멀지는 않을 것이다. ■

지자체 가용재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력화 대책' 추진



안세경
행정자치부 지역경제과장

지난해 우리 경제는 수출증가율이 30%대 중반을 상회하는 등 외형적인 성장에는 큰 문제가 없었으나 내수부진과 국제유가의 급등, 미국의 금리인상, 그리고 중국정부의 경기진정조치 등 대외적인 경제여건이 악화되면서 서민들의 체감경기가 지속적으로 침체되었다.

최근 우리 경제의 가장 큰 특징은 IT산업 위주의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인한 수출과 내수의 괴리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부품 및 장비의 높은 수입의존도로 고용창출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IT관련 제품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수출 증가가 내수 회복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최근 할인점과 백화점의 매출이 약간 증가 추세를 나타냈지만 이것을 본격적인 내수 회복으로 진단하기에는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최근 지역의 생산동향과 소비동향, 그리고 지역 건설투자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지역경제의 어려운 현실은 국가경제의 적신호라고 생각된다. 특히

최근 지방의 어음부도율은 0.14~0.20% 수준으로 서울지역의 0.04~0.06%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으로, 지역경제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대표적으로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5%의 경제성장과 4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종합투자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새로운 민자유치제도인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을 도입하여 민간참여자에게 정부 채권 수익률 이상의 일정한 수익을 안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민자유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노력들은 궁극적인 사업주체인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그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지자체 차원의 '지역경제 활력화 대책' 수립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는 지자체 차원의 지역경제 활력화 대책을 수립하여 '3개 분야 10대 역점추진 과제'를 선정, 올 한해 동안 전국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지방재정의 상반기 조기집행 유도

올해 약 90조원에 달하는 지방재정 중 조기집행이 가능한 재정규모는 약 14조원에 달하며, 이의 조기집행은 경제활력 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정부는 지자체가 재정을 최대한 조기집행할

정부는 지자체 차원의 '지역경제 활력화 대책'을 수립하여 '3개 분야 10대 역점추진 과제'를 선정, 올 한해 동안 전국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지역경제 활력화 지원상황실'을 운영하고 지역별 순회 설명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개선하고 집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으로 3월말까지는 전체 공사의 약 89%(건수 단위)를 차지하고 있는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 중심으로 집중발주를 유도하고, 1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절차 이행을 독려하여 4월부터 최대한 조기 발주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계약 상대방의 선금보증서가 확보되는 한 최대한 선금을 지급토록 유도함으로써 최종수요자를 기준으로 하여 집행실적을 제고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은 특히 지방 중소기업의 자금압박과 경쟁력 저하에 기인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회계·계약 제도를 개선하여 계약상대자 등 최종수요자의 입장에서 자금 집행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원도급자가 발주자(지자체)와 하도급대금에 대하여 직불(직접 현금지급)을 합의하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차기입찰에서 부여 가능한 최고의 입찰점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도급자에 대한 직불을 유도하고, 관급계약 이행시 대금지급기한을 현행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를 5일 이내로 대폭 단축함으로써 대금 조기집행을 유도함은 물론, 선금지급도 계약금액의 70%까지 확대하여 최대한 선금지급을 유도하고 있다.

이울러 공사진행에 따른 기성금(既成金)도 30일

간격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하도급자를 보호·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2월부터는 지역제한경쟁입찰 한도액을 일반공사의 경우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전문공사의 경우 5억원에서 6억원으로, 그리고 기술용역의 경우 1억5천만원에서 2억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있으며, 각종 공사 낙찰시 수도권업체가 지방업체를 20% 이상 공동 참여시키는 경우에는 입찰점수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수도권업체가 자발적으로 지방업체를 참여시키도록 유도하고 있다.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신활력사업 추진

'신활력사업'이란, 인구감소율·인구밀도·재정력지수·소득세할주민세를 기준으로 선정된 70개 시·군에 대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정부가 올해부터 매년 약 2천억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이다. 특히 신활력사업은 참여정부의 핵심 지역개발 정책으로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기존의 하드웨어적 사업을 탈피하여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 중심적 사업을 말한다.

정부는 이러한 신활력사업의 특성에 맞도록 지자체가 사업을 선정·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340여명에 달하는 전문가 인재 풀(pool)을 구성하여 사업계획 단계부터 민간 전문가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고, 출향인사·지역특성 등을 감안한 소규모 '지역별 전문가 그룹'을 편성하여 지자체로 하여금 수시로 컨설팅 등을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재원배분에 있어서도 '선심성 나눠먹기식' 방식을 지양하고 '선택과 집중' 원리에 의하여 투자성과가 극



▲ 지난 1월 27일 전남 담양에서 개최된 '호남권 신활력지역 설명회'

대화될 수 있도록 평가시스템을 마련·운영할 계획이며, 전문가그룹 평가를 통해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추가 인센티브제를 도입함으로써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지역단위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선정된 신활력사업에 대해서는 3월까지 70개 시·군의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4월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여 승수효과를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지방자금을 활용한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

지방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BTL 사업에 지자체의 적극 참여를 지원하고 지방공기업 및 새마을금고 자금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력화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BTL 제도란 정부가 올해부터 도입한 새로운 민자유치방식으로, 기존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한하던 민자유치 대상 분야를 도서관·박물관·문예시설·노인

의료시설 등의 생활기반시설까지 확대함으로써 민자유치를 촉진하고 주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올해 초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으로 새로이 도입된 BTL 방식의 민자유치 제도에 대해 지자체는 물론 민간기업도 아직 이해가 부족한 측면이 많다. 따라서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2월 중에는 지역별 순회설명회를 개최하여 BTL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지자체가 사업에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방공기업 및 새마을금고 자금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하여 현재 약 5천억원 규모에 달하는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여 체육시설업 분야와 관광사업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해 나가고 있으며, 새마을금고(1,650여개)의 지역개발사업 지원금을 활용하여 영·유아 보육사업, 노인복지사업, 농촌체험마을사업 등 지역투자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지방재정의 상반기 조기집행 유도,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신활력사업 추진, 지방자금을 활용한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 지역 서민생활 안정대책 추진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적극 도모할 것이다.

지역 서민생활 안정대책 병행 추진

경제가 어렵다고 하여 지나치게 경제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서민생활이 불안해지고 물가불안으로 인해 저소득 또는 무소득자의 상대적 박탈감이 조성될 우려가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역 내 복지기관, 종교·시민 단체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및 의료·복지 지원 시스템을 갖추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공근로사업 확대 등을 통하여 실업자의 일자리를 확대함으로써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 1,600억원에 달하는 공공근로사업비가 가능한 한 상반기 중에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추가 수요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신규재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경제활성화 과정의 지나친 물가인상으로 인해 서민경제에 주름살이 가지 않도록 소비자 물가 중심으로 물가상승률 3% 초반을 목표로 하여 물가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별·품목별 물가관리 소관부서 지정 및 책임관리제 시행을 통해 지역단위 물가관리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지자체·경찰·세무·위생 등이 참여한 ‘물가합동 지도·점검반’을 지자체별로 편성·운영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물가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물가관리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 등 행·재정적인 인센티브도 부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방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지방공공요금의 결정과정에서 심의위원회의 민간 참여비율을 확대하고 경영합리화 등을 통해 공공요금 인상을 최

대한 억제하는 등 민간 주도의 자율적인 물가통제기능도 병행 추진키로 하였다.

올 한해는 ‘지역경제 살리기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정부와 250개 지자체는 앞서 기술한 지역경제 활력화 대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올해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력화 지원상황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국민·기업의 입장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역별 순회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경제 살리기 분위기를 전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미 지난 1월 중에 ‘지방공기업 CEO 경영혁신대회’와 ‘권역별 신활력지역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등과 합동으로 ‘BTL사업 및 지역경제 활력화 대책’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현지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들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현재 IT 분야 중심으로 서서히 회복기에 접어들고 있는 경제가 올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경기회복의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 개통



심성근
산업자원부 전략물자관리과장

정부는 올해 2월 17일 종합상사, 전략물자 생산 및 수출업체 등 2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을 개통하였다.

전략물자의 국제수출통제체제 강화되는 추세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이 개통되기까지 그동안의 경과를 살펴보면, 정부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강화 추세에 따라 2003년 5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신규사업으로 2004년 예산에 10억원을 확보하는 한편, 우리 무역업계의 현실을 감안한 인터넷 기반 시스템 구축의 법적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2003년 「대외무역법」 제21조의2와 동법 시행령을 신설하였고, 10월부터 12월까지 기계산업진흥회 등 14개 단체와 무역협회의 참여를 통하여 HSK(무역상품분류)와 통제리스트 해당번호 연계표를 작성하였다. 2004년 1월부터 4월까지 시스템 개발에 참여할 전문가 350명을 발굴하여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이 가운데 약 40여 명이 참여하여 파라메타시트 시제품 작성,

평가 및 보완을 거쳐 12월말 국제통제제품목인지 판정할 수 있는 800여 페이지 분량의 파라메타시트를 개발하게 되었다.

한편으로, 외국에 참고할 만한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기업의 이행부담 최소화 방침에 따라 우리 실정에 맞게 창의적으로 시스템을 설계하고 8월에 이를 구현할 업체를 선정하여 2005년 1월말에 완료함으로써 정책을 입안한 지 20개월 만에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이 시스템은 산업자원부가 그동안 개발한 각종 정보, HS(국제무역 상품분류) 연계표, 전략물자인지 판정할 수 있는 도구(파라메타시트), 온라인상 판정과 허가 처리, 민원인이 자기가 신청한 민원의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환경 등을 제공한다. 국제 비확산 수출통제 규범과 법규, 부적격거래자, 각종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접속하여 이용하게 됨으로써 제도를 이행할 수 있고, 전략물자 관련 모든 행정기록을 시스템이 자동으로 관리해주므로 기업이 자사의 서류창고로 이용할 수도 있다. 10~20분이면 전략물자인지 판정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됨으로써 우리 기업이 불가능하게 느꼈던 국제무역규범의 이행이 우리에게 가능한 현실로 다가왔다.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 개통

정부는 2003년 7월 무역업계 간담회에 참석한 80여 업체로부터 당시 우리 기업의 인식을 파악할 수 있었다. 전략물자제도에 대하여 들어 본 사실이 있는 업

정부는 올해 2월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을 개통하였다. 시스템을 이용해 10~20분이면 전략물자인지를 판정할 수 있게 되어 우리 기업들의 전략물자 수출입제도의 이행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체는 불과 서너 업체에 그쳤고, 나머지 참석자는 그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이었다. 또한 “전략물자란 □□탱크 등 무기나 방산품이 아니냐”며 우리 회사와 무관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지배적이어서, 전략물자제도가 우리나라에 이미 14년 전에 도입된 제도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수출품이 전략물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관련 규정을 지킬 수 있을 것인데 그동안 준비도 안된 상황에서 시행되어 온 셈이었다. 500페이지 내외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통제리스트를 관보에 게재했으니 국민들은 모두 알 것이고 정부로서는 할 일을 다했다고 판단할 수 있었겠지만, 그대로 지켜질 것으로 본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되었다.

기업은 그런 규정이 언제 관보에 실렸는지 관심이 없는 게 대다수이고 또 관보를 보았을 때 법을 지킬 사람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한번 읽어선 어렵도 없고 완전히 이해하고 숙지하지 못하면 전략물자인지 판단을 할 수 없었다.

어떤 정책을 시행하려는 행정기관은 고객의 현실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법과 제도가 추구하는 규범을 이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현실과 연결시키는 교량을 만들어야 한다. 개통된 전략물자시스템은 국제규범을 지킬 수 있게 기업 현실과 연결한 교량역할의 종합대책의 실현이며, 불법·전과자를 양산하는 비현실적 정책을 현실적으로 전환한 것이다.

최근 1년 반 동안은 전략물자 불법수출 사례가 밀려오는 것을 기업들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청화소다의 대북한 불법수출,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리비아 사찰단에 의한 우리 기업의 빨린성머신 수출사실 적발, 이라크 후세인 정권에 주요 물자를 지원한 사실

을 조사하여 공개한 미국 CIA의 듀얼퍼보고서에 우리 기업 5개사가 연루되었고,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3개 화학물질을 불법 수출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기업이 법 절차를 밟지 않고 국제통제대상 제품을 수출해 왔는지, 그로 인해 어떤 업체가 국제무역제재에 노출되어 있는지 현황 파악이 시급하였다.

이에 정부는 HSK 연계표에 의해 1종 전략물자인 가능성이 있는 HS에 속하는 물품의 제조·수출 업체를 대상으로 전략물자인지 판정하는 사업을 2004년 5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하였다. 1만2천개 업체 중 1,277개 업체가 5천여 품목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해 주어서 기계산업진흥회 등 18개 단체가 판정을 하였다. 그 결과 1월에 1종 전략물자 200여 품목과 이들 품목을 생산·수출하고 있는 70여 업체를 파악했다.

정부는 해당업체들에게 1종 전략물자인 판정결과와 그동안 전략물자제도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한 사실을 통보하고 향후 전략물자 수출입제도의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부분의 기업들은 그동안 전략물자인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밝히고 앞으로 전략물자 수출입제도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과거 불이행에 대해서는 관용조치해 줄 것을 청원해 왔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하여 행정기관은 규정되어 있는 법대로 고발 또는 처벌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200여 품목의 경우, 정부의 판정사업에 자진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위법사실을 알게 되었고, 당시 전략물자제도를 몰랐다는 게 사실일 가능성이 높으며, 자사의 생산품이나 수출품이 전략물자인지 몰랐다는 주장도 우리 기업 현실에서 거의 사실일 것으

로 수궁되는 바였다. 그렇기 때문에 고발한다 해도 검찰이나 법원에서 범의(犯意)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 더욱이 향후 이행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는 것은 적극적인 준법의지를 보인 것으로 참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수많은 기업을 고발할 때 해당기업들의 브랜드 이미지의 실추로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도 자명하였다.

그러나 위법행위에 대한 관용조치가 간단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4개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가입국으로, 국제규범을 위반한 기업을 관용조치함으로써 이행의지가 없는 국가로 이미지나 신뢰가 추락하는 것이 우려되었다. 그렇다고 숨겨서도 안된다. 국제적으로 문제를 키우게 되기 때문이다. 기다리며 시간을 끌 수도 없었다. HSK 연계표로 국감에서 손쉽게 불법수출 가능성을 지적했듯이 시스템이 개통되면 허가·판정 기록과 관세청 통관기록을 대조하면 손쉽게 위반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스템을 이용하게 될 회사의 과거 수출입기록을 조회하면 과거의 불법사실까지 총체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러면 기업활동 위축과 시스템 이용 기피로 악순환하게 될 수 있다.

시스템 개통을 앞두고 과거 불법수출 처리는 진퇴양난의 딜레마였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 정부는 과거 위법사실에 대해 청산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우리의 현실에 대해 국제적으로 이해를 구하면서 획기적으로 개선된 모습으로 새로운 신뢰를 구축하는 방안을 택하게 되었다. 법과 제도를 제대로 안 지켰던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이행환경에 적극 참여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대승적으로 국제수출통제체제의 비확산 목표에도 부합한다. 또한 이행환경이 제공된다면 우리 기업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오히려 이행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였다.

제도 이행수준 획기적으로 개선될 듯


2004년까지 전략물자로서 허가절차를 밟고 수출한 품목은 25개, 업체수로는 46개에 불과하였다. 그

런데 시스템 개통에 이어 그동안 제도를 잘 지켜온 업체까지 270여 기업인이 참석하여 앞으로 전략물자 수출입제도를 이행하는 체제를 기업 내에 구축하고 법과 제도를 잘 지키겠다는 이행결의대회가 있었다.

이행결의대회에서 정부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거 불법수출에 대하여 불문에 부치고, 과거 불법수출에 대하여 올해 상반기를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해 추가적인 과거청산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은 2005년 2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이고, 신고대상은 과거 5년간 1종 전략물자를 허가 없이 수출한 자이다. 수출 품목의 HS가 1종 전략물자일 가능성이 있는 HSK라면 꼭 시스템에 접속하여 자가판정을 해봐야 하고, 그 결과 1종 전략물자라면 이행계획서를 붙여 신고해야 한다.

이미 파악된 70여개 업체 외에도 판정 조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만여 기업을 비롯하여 그동안 전략물자를 불법수출한 기업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업체에게 TV 방송, 언론 보도, 시스템 웹사이트 외에도 기업들에게 이메일 등으로 알릴 계획이다. 그 후로는 법규나 제도에 대한 무지나 전략물자였는지 몰랐다는 주장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우수제품을 생산·수출해 온 기업들은 1종 전략물자였는지 점검하고 허가 없이 전략물자를 수출한 사실이 있다면 자진신고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만약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피하다. 자진신고 기회를 추가적으로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준법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거 불법사실까지 법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할 수밖에 없다.

모든 무역업체는 이제 전략물자제도에 관심을 갖고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의 웹사이트(www.sec.go.kr)에 접속하여 이용하기 바란다. 그리고 1종 전략물자로 판정되면 과거의 불법을 청산하고 제도가행으로 화답해 주기를 바란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나라가 통상대국으로 지속적 발전을 이뤄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다. 

‘2005 유엔 아·태 환경과 개발 장관회의’ 서울 개최



이민호

환경부 2005 유엔 아·태 환경과 개발 장관회의 기획단장

최 근 중국과 동남아에서부터 일기 시작한 한국 대 중문화 열풍은 ‘한류’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키면서 국제적으로 한국문화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대중문화에서 시작된 한류를 이제는 다른 영역에도 파급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서 오는 3월 24일부터 29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는 ‘2005 유엔 아·태 환경과 개발 장관회의(MCED 2005 : The fifth Ministerial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in Asia and the Pacific, 2005)’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환경 한류’를 창출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태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비전 논의

MCED 2005는 아·태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비전과 실천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UN경제사회이사회 산하 5개 지역위원회 중 하나인 유엔 아·태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 UN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62개 회원국

의 환경과 개발 분야의 장관 및 고위급 대표가 참가하는 공식적 유엔회의이다. 1985년 창설 이래 5년마다 회의를 개최해 왔으며 이번 회의는 다섯 번째 회의로서 우리나라 환경부와 UNESCAP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주제로 서울에서 개최하게 된다.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전세계 육지면적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나 세계인구의 약 60%가 거주하고 있으며, 역내 개도국 공업생산량이 지난 6년간 30%가 증가하여 세계평균치(20%)를 훨씬 넘어서는 비약적인 고도성장을 시현하고 있어 환경과 자원에 대한 부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빈곤상태에 머무르고 있어 경제성장에 대한 요구와 이에 따른 환경부하량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많은 개도국이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경제성장과 다음 세대를 위한 환경보전을 동시에 성취해야 하는 딜레마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MCED 2005는 이러한 딜레마의 해법으로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녹색성장)을 주제로 한다. 이번 회의는 역내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도전들을 다루면서, 개최국인 우리나라가 경험한 고도성장과 이에 수반된 환경오염 및 복원경험을 전파함으로써 아·태 지역의 경제·사회·문화·자연적

3월 24일~29일간 서울에서 개최되는 '2005 유엔 아·태 환경과 개발 장관회의(MCED 2005)'에서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주제로 환경과 경제의 상생 가능 방안,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의 실천 방안, 환경과 자원의 지속가능성 증진 방안, 역내 환경파트너십 제고 방안 등이 논의된다.

특성이 고려된 한 단계 진일보한 녹색성장의 방안을 논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회의는 62개 UNESCAP 회원국의 장관급 정부대표단과 UN ESCAP,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대학(UNU), 아시아개발은행(ADB), OECD 등 국제기구 사무총장, NGO 대표자, 관련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가하게 되며 같은 시기에 개최되는 시민사회포럼, 저평과학자포럼 등 부대행사의 참가자를 포함하면 1천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 회의이다.

'녹색성장을 위한 서울이니셔티브' 제안

MCED 2005 회의는 아·태 지역의 환경지속성을 향상시키고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서 환경을 활용하는 방안에 관한 장관선언과 구체적인 지역이행계획(Regional Implementation Plan)을 채택하게 된다. 또한 역내의 환경상태를 평가하고, 2002년 9월 전세계 정상들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모여 채택한 지속가능한 발전 달성을 위한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JPOI)'에 대한 아·태 각국의 실천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회의에 참가하는 아·태 지역은 우리나라가 속한 동북아시아 외에 동남아시아·중앙아시아·남아시아 그리고 태평양국가 등 다섯 개의 소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소지역별로 시급한 환경문제가 조금씩 상이하다. 일례로 동북아시아는 황사, 중앙아시아는 토양 황폐화, 태평양지역은 해양생태계 파괴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각 소지역별 현안에 대한 진단과 대응방안이 별도로 논의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회의의 핵심적 논의는 참가대상에 환경장관들뿐만 아니라 개발부처의 장관들이 포함된 것에서 드러나듯이 환경문제를 최소화하면서도 아·태

지역의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경제성장, 즉 녹색성장을 지속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개최국인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 40년간 급속한 고도성장의 과정에서 경험했던 환경오염 복원의 경험을 살려 아·태 지역의 녹색성장 방향을 제시하고 개도국의 녹색성장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가칭 '녹색성장을 위한 서울이니셔티브'를 제안하고 후속 이행사업을 주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논의사항을 내용별로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과 경제의 상생(相生)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회복이 불가능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한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정책이 이에 포함된다. 그중에서도 단기적 성장전략이 아닌 중장기 경제성장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환경 목표와 평가를 수립·시행하는 정책은 개발도상국에서 흔히 나타나는 자원의 남용 문제와 생태계 파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대형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최근 도입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이 좋은 사례라 하겠다.

둘째,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실천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지속가능한 생산이 환경오염에 따른 외부비용을 생산과정에 반영하고 청정생산과 생태효율성을 제고하여 환경부하량을 줄이는 것이라면, 지속가능한 소비는 자연자원의 사용과 폐기물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면서 생활에 필요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소비라고 규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환경표지제도는 친환경적으



▲ 지난 2000년 일본에서 개최된 제4차 '유엔 아·태 환경과 개발 장관회의'(MCED 2000) 개최식

환경선도국으로의 위상 제고 기대

대규모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투입되는 비용과 노력이 만만치 않은 반면, 개최에 따른 효과도 크게 나타나는 법이다. 환경부는 2004년 3월 제주도에서 유엔환경계획(UNEP) 제8차 특별총회를 개최하여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을 널리 홍보하고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믿을 수 있는 구매와 친환경적 생산을 동시에 촉진시키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셋째, 환경과 자원의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키는 방안이 다뤄진다. 이는 지속가능 발전의 수용용량(carrying capacity)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으로, 수요관리와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형 사회의 구축, 환경질 개선을 위한 총량적 모니터링 및 평가체제 확보, 그리고 이에 따른 규제 수준의 설정과 단계적 강화 등이 구체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역내 환경파트너십 제고를 위한 방안이다. 각국 간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과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정부-민간 사이의 협력을 위한 정책협의시스템을 확보하여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역내에 정착시키는 것이다.

국제사회에 과시한 바 있다. MCED 2005의 성공적 개최는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환경선도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62개국의 장관급이 모이는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녹색성장'을 주제로 선정함으로써 유럽·미국식 성장모형보다 역사적·지리적 유사성을 갖는 아시아 지역의 성장모형을 선호하는 아·태 개도국들에게 우리나라의 앞선 정책경험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회의는 환경산업의 해외진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환경시장은 환경규제의 강화 등으로 지속적인 성장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2000년 세계 환경산업 시장규모는 5,180억달러로, 연간 5%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 시장의 성장률은 15% 이상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와 같이 환경산업은 정보산업(IT), 문화산업(CT), 생명산업(BT) 등과 더불어 미래 우리 경제를 주도할 산업으로서 막대한 시장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환경산업은 중기업 중심으로 중국에 집중 진출하고 있는 구조를 보이고 있고, 여타

〈표〉 세계 환경시장 현황

	(단위: 억달러, %)			
	세계시장	아시아	중국	한국
규모	5,180(2000)	780(2005)	850(2001~2005)	77(2001)
성장률	5.0~5.8	15	19.8	12

자료: Environmental Business International(1998, 2003); 「2010 산업비전」, 산업자원부, 2001.

'MCED 2005'의 개최는 아·태 개도국에게 우리의 앞선 정책경험을 전파하는 것은 물론 환경산업의 해외진출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환경 선도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환경시장 진출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중국 진출은 대통령의 방중(2003년 7월)과 양국 간 환경장관회의(2003년 12월)에서 토대를 마련하였으나, 기타 지역의 경우 논의 자체가 부진한 실정이다. 지난 2003년 12월 14일 개최된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는 ①공동기술개발, ②한·중 환경산업센터 공동운영, ③환경기초시설 시범사업 시행, ④환경기술인력 연수 확대, ⑤환경산업 실무협의회 구성 등의 다섯 개 사항이 합의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회의를 통해 동남아 등 아·태 개도국에 한국형 녹색성장 방식을 채택한다면 우리나라의 환경산업체 진출기반을 강화하는 효과를 낼 것이다. 이를 위해 MCED 2005에서는 외교역량을 동남아 및 남아시아 국가와의 양자 및 다자회담에 집중할 계획이다. 더불어 같은 기간 내 환경기술포럼을 부대행사로 개최하여 우수한 국내환경기술을 세일즈하는 기회로 활용할 예정이다.

국내적으로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각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보다 적극적으로는 환경분야가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이라는 점이 부각되어 환경과 경제를 함께 살리는 국민적 노력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개최 취지를 확산하고 각계각층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국내외 시민단체와 언론계가 참여하는 시민사회포럼, 지속가능한 기업경영을 주제로 한 기업포럼, 아·태 저명인사포럼, 저명과학자심포지움 등이 별도의 부대행사로 개최될 예정이다.

덴마크 칼룬버그시는 기업 간 혹은 기업과 지역사회 간 순환연결을 통해 물질 및 에너지의 사용과 오염

물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생태산업단지 개념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다. 즉, 정유소, 발전소, 석고보드 제조사 등 30여년간 고도로 진화된 자발적인 제조업 네트워크 및 지역참여자 간의 폐기물·용수·에너지 등의 부산물 교환망(20개의 재순환 또는 교환 프로젝트로 구성)으로 구성된 산업단지로 공생체계를 통해 연간 180억원을 절감하고 있다. 이처럼 환경과 경제성장은 이제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유기체가 상호 이익을 극대화하여 공생(symbiosis)하는 것처럼 상호간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버렸다. 이는 이번 회의의 주요 참석인사이기도 한 독일의 前환경장관이자 현재 UNEP 사무총장인 클라우스 토퍼(Klaus Toepfer)가, 세계 환경산업의 11%를 차지하고 100만명이 넘는 인력이 종사하고 있는 독일의 환경산업을 두고 '환경보호는 고용감소가 아닌 고용창출의 원천'이라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를 통해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의 선순환과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녹색성장의 틀이 제시될 것이며, 이는 IT강국이자 문화강국인 대한민국을 아시아의 환경강국으로 부상(浮上)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정부 내 관련 부처와 국민들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를 기대해 본다. ■

창업,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이번 호 '기획기사'는 예비창업자들을 위해 창업의 개념에서부터 지원정책에 이르기까지 창업전반을 소개하였습니다. 여기에 담긴 내용은 중소기업청·국세청 등 유관기관들의 자료와 도움을 토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참고자료>의 정보를 활용하기 바랍니다. <편집자 주>

• 전문가 제언 : 사업 전문지식과 기업가적 능력을 동시에 확보해야 / 정헌배

• 창업절차와 지원정책들 / 편집실

사업 전문지식과 기업가적 능력을 동시에 확보해야

창업 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제 발전은 지구상 모든 나라, 모든 정부의 핵심적 경제정책 기저이자 개발전략이다. 그리고 창업은 기업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고용을 확대하고 자원생산성이라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선진국=창업강국'이라는 등식이 거의 예외 없이 그리고 자연스럽게 성립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실제로 모든 나라가 '창업강국' 이기를 갈망한다.

창업강국이 되기 위한 절대적 독립변수는 창업성공률이다. 그리고 창업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관건은 창업자 개개인의 시장적응력을 높여주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맞춤형 창업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그런데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창업수요에 대한 시장적응력을 몇 가지 창업정책으로 공통적으로 충족시킨다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정부의 맞춤형 창업정책 필요성 대두

창업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맞춤형 창업정책을 구현해보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정부 정책이 닿지 못하는 부분은 창업성공률을 높여줄 수 있는 사회적 기반구축을 통해 지원하고 창업인 스스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창업인 自足能力)을 제도적으로 배양해주는 전략으로 보완해야 한다.



정헌배
중앙대학교 창업경영대학원장
(hbjeong@cau.ac.kr)

특히 창업인 자족능력 배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왜냐하면 창업이란 과정이 개개인 여건에 따라 그리고 사업의 속성에 따라 아주 다른 문제 해결방안을 필요로 하며 이에 대한 문제는 사업현장에 있는 창업인이 가장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창업강국은 창업성공 규모와 빈도를 기반으로 하게 되며 창업성공률은 우수한 창업인을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보유하고 육성해 내는가로 귀결된다. 그리고 창업인은 제품이나 시장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사회 시스템 속에서 순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창업성공의 지름길임을 확고히 인식해야 한다. 한마디로 '사회 속에서 공생하는 기업가정신'이 필요하다.

기업가정신 함양이 중요

창업성공은 해당 사업 전문지식과 기업가적 능력을 동시에 확보해야 함은 물론이고 가급적 최대한의 사회적 지원을 동원하고 이에 주도면밀한 성공전략이 더해져야 하는 어려운 과제이다.

물론 아직 고유한 제품시장상황에 적응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초기단계 창업자에게 사회와 공생하는 기업가정신을 요구한다는 것이 시의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창업'은 치열한 시장경쟁을 극복하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하는 진취적 행동이다. 정형화되고 안정화되지 못한 현실 속에 창업자가 겪는 어려움을 사회에 잘 커뮤니케이션하면 오히려 다양한 사회적 지원을 확보할 수도 있다.

그리고 창업은 상도(商道)의 기본인 믿음(信)을 바탕으로 출발해야 성공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비 창업자에게 구체적인 사업 성공전략 교육에 앞서 기업인의 자세와 윤리관 교육을 통하여 '인간됨과 사회적 책임교육'을 선행해야 한다.

우수 창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대 국책 창업대학원에서는 실제로 대학원생들에게 '삼신(三信) 들린 사람이 되어 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스스로 신용(信用)있게 행동하며 타인으로부터 신뢰(信賴)를 얻고 국가 사회와 주변사람과의 신의(信義)를 지켜라'는 것이 3信이다.

자족형 경영시스템 지원 필요

고유한 사업아이디어를 토대로 창업하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은데 막상 창업에 성공한 사람들을 왜 이렇게 찾아보기 어려울까? 남들이 생각지도 못한 고유한 사업아이디어를 가지고도 창업초기 단계에서부터 좌절하고 사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다반사인 이유는 무엇일까? 엄청난 국가 예산이 다양한 형태로 창업지원 차원에서 투입되고 있는데 속 시원한 창업성공사례를 찾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에 쉽게 답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실제로 이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창업관련 연구자들이나 창업정책 입안자들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는 숙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해법의 설정방향은 의외로 단순하다고 본다. 앞서 언급한 맞춤형 창업지원정책의 내용으로 창업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족형 경영시스템 구축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창업자 역시 정부의 지원만을 중심으로 사업시스템을 구축하기보다 동종 업계 또는 같은 지역사회 업계·공공단체들과 연계하여 정보나 기술, 자원을 공동 활용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생계주도형 창업메커니즘 개혁 시급

정부의 창업 활성화 정책 목적이 '기업형 창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동 구조의 선진화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생계형 창업' 활성화를 통하여 가계의 생존 수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실업자나 사회불안 요소를 최소화하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경우에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업이나 어려운 경제현실을 극복하는 대책으로 창업활성화를 부르짖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재정·기술·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창업지원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창업정책은 창업자의 기업이 의식과 전략 개발능력 배양에 주안점을 두기보다 생계형 창업지원에 무게중심이 쏠린 것 같은 느낌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창업자의 외부인력 의존도를 높게 되었고 지금처럼 자금 외에 거의 모든 것을 지원해주는 생계형 체인사업 가맹점 창업이 우리나라 창업시장의 주류를 이루게 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현실은 수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어렵더라도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형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대학을 비롯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보다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

창업절차와 지원정책들

창업이란 무엇인가

창업은 개인이나 법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 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간 균형성장을 위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제정(1986. 5.),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금융·세제상 지원을 하고 있다. 유망한 사업아이디어를 가지고 인원, 기술 및 경영 노하우 등의 자원과 자본을 결합하여 기업활동을 시작하는 것 모두가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정부가 지원하는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창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창업자는 창업준비 단계에서 업종 및 규모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와 기업의 설립형태가 창업으로 보지 않는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단순히 조직을 변경함으로써 형식상의 창업절차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의 창설효과(0+1=1, 1+1=2)가 없는 경우에는 세제지원대상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종전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창설하지 아니하고 기존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설의 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창업지원 대상이 아닌 사례〉

- ① 합병·분할·현물출자 등으로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 ② 상속이나 양도에 의해 사업체를 취득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③ 폐업한 타인의 공장을 인수하여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④ 기존 공장을 임차하여 기존의 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⑤ 경매 등으로 기존 공장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

다만, 같은 업종을 계속하더라도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추가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한다.

창업의 절차

창업은 여러 기본요소를 사업운영이 가능한 형태로 결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창설자는 자기가 창업을 하기에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고, 만일 그렇다면 사업목적과 사업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자본을 투자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조직화하며, 실제 경영관리를 착수하기 위한 다양한 의사결정을 수립·실행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제조업종에서 자기사업을 시작하려는 경우 일반적으로 거치게 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예비분석

창업희망자는 먼저 자신의 창업자질 및 적성 등을 파악하여 창업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나아가 자신이 가진 자원이 창업하기에 충분한지, 창업

시기는 적당한지 등에 대해 미리 생각해 보아야 한다.

2. 사업목적의 정의

일단 자기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으면 창업의 기본적인 이유와 기본적인 운영방향에 대해 명확히 해 두어야 한다. 오늘날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사업의 목적은 단순히 이윤극대화에만 있지 않으며, 여러 목적이 동시에 추구되거나 이윤이 수단화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업목적은 창설자에게 있어서는 창업이념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업종 선택이나 기업활동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3. 사업 분야의 결정과 사업아이디어의 모색

창설된 자기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는가의 여부는 얼마나 유망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업종을 선택하였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나아가 사업아이디어가 얼마나 시장조건에 잘 들어맞는가 하는 점도 중요하다. 사업아이디어를 이끌어냄에 있어서는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판매할 것이며 그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가에 관한 고려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시장조사 특히, 소비자조사를 통하여 소비자수요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제품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를 발견해야 한다. 사업아이디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사업가는 다음의 기준 중 하나를 만족시키는 제품을 찾으려 해야 한다.

- 가. 현재 만족되지 않은 욕구를 만족시키는 제품
- 나. 공급의 부족을 만족시키는 제품
- 다. 유리한 조건 때문에 기존 상품과 성공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상품

4. 사업성분석

모든 사업은 시행하기 전에 어떤 형태로든지 사업을 통하여 발생될 손해와 이익에 관한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사업성분석은 흔히 수익성·시장성·기술성 분석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고려하고 있는 사업이 공

익과 관계되는 경우에는 사업성분석에서 이상의 세 가지뿐만 아니라 공익성분석을 추가하여 실시한다.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사업성분석을 위해서는 기존 사업사례를 참조하고 나아가 희망사업 분야의 총투자 및 비용, 예상입지 및 상권분석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다.

5. 인적·물적 자원의 조달과 구성

사업성분석에서 자신의 사업아이디어가 유망한 것으로 판단되면 이를 실행하기 위한 인적·물적 자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우선, 인적 자원의 조달은 창설팀을 만드는 데서 시작된다. 창설팀은 주로 활동 목표 및 범위를 결정하고 제품을 설계하여 사업규모와 입지 선정, 공정, 설비, 건물의 선정, 소요자금액 및 자금조달 계획 등과 같이 새로운 사업시작에 주요한 의사결정을 수립해야 한다. 다음으로 물적 자원의 조달이 필요한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요자금의 조달문제이다. 기업창설에 필요한 자금은 자기자본에 의하거나 타인자본에 의해 조달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서 작성과 조직구조 설정

인적·물적 자원의 조달이 이루어지면 구체적으로 수행하게 될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여기에는 제품계획, 시장성과 판매계획, 생산 및 설비 계획, 일정 계획 등이 구체적인 활동의 내역별로 포함되어야 한다. 나아가 기업의 주요 기능에 따라 업무·책임·권한 등을 체계적으로 구분하고 이를 담당할 인력을 선발·배치하여야 한다.

7. 사업개시

이 단계에 이르게 되면 토지를 구매하고 공장건축을 시작하게 됨은 물론 설비를 구매하고 이를 배치하여 생산에 착수하게 된다. 또한 생산품의 광고와 판매 촉진 활동을 전개하며 제품이 생산되면 재고를 관리하고 판매경로를 통해 판매를 한다.

사업 분야 선정시 고려사항

창업을 실행하려는 이는 기존에 다니던 직장 상 관없이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막연한 구상이나 충동에 의해서 행동할 수는 없으며 실패하지 않기 위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특히 사업 분야의 선정은 사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충분히 검토한 다음 빠른 시기에 결정할 필요가 있다.

1. 창업의 필연성 확인과 창업가적 자질여부 판단

창업희망자는 먼저 스스로의 성격적 특성 때문에, 현재 또는 장래 예측되는 신분상의 변화 때문에 창업을 반드시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에 해 오던 일의 연장선에서 다른 직장을 구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와 더불어 파악할 주요한 사항은 자신이 창업가적 자질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일이다.

창업가적 자질의 정도는 사업 분야의 선정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창업가에게 요구되는 개인적·행동적 특성이 강한 편이라면 보다 혁신적이고 새로운 변화를 반영하는 업종도 괜찮을 것이다. 그렇지 못한 경우, 비교적 안정적인 업종을 선택하는 편이 낫다.

2. 자신의 경험과 자격요건 활용여부 확인

경기가 불투명할 때는 자신이 몇 년 동안 경험해 온 업종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어떻게 생산을 할 것이며, 어디에서 매입해서 어떻게 팔면 좋은가라는 사업의 방법에 대해 어느 정도 기초지식을 갖고 있는 상태이고 개업을 위해 필요한 준비방법 등도 곧 조사를 할 수 있으므로 자금만 있다면 개업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전혀 경험이 없는 업종으로 개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업종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장사 요령을 연구하고 나서 행동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자신의 인생목표, 경영철학 및 취향과의 대조

대부분 사람들에게 있어 창업은 스스로의 삶에 있어 추구하고자 하는 꿈을 실현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자신의 인생목표나 가치관과 너무 동떨어진 분야에서는 개인이 가진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없고 창업성공을 이끌어내기도 어렵다. 흔히들 창업업종과 관련하여 유망 분야를 선호하지만 이는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4. 창업자의 자금조달 능력의 고려

통상 도·소매업이나 서비스업에 비해 제조업이 더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한다. 또한 도·소매업의 경우에도 취급상품이나 점포규모 등에 따라 사업 자금규모는 천차만별이다.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서비스업의 종류와 유형에 따라서 큰 자본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도·소매업에 비해서 훨씬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경우도 흔히 있다.

따라서 창업자의 자기 자본규모와 금융기관 차입을 위한 담보, 신용 및 인맥 등 자금조달 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되, 5억 이상의 자금조달이 가능한 경우는 제조업을, 1억원 내지 5억원 정도의 자금조달이 가능한 경우에는 소매점 또는 개인중심의 서비스업을 하는 식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

사업 분야별 고려사항

1. 제조업

제조업은 도·소매업에 비해서 풍부한 경험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다. 따라서 제조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창업예비자는 최소한 제조업체에 직접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간접적으로 깊은 관계가 있는 경우에 선택하여야 한다. 보다 사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동안 생산·관리·판매의 3대 분야 중 적어도 2개 이상의 분야에서 직접 근무한 경험을 쌓아서 창업한다면 그만큼 성공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도·소매업

도·소매업은 흔히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 비해 비전문가가 도전하기 쉬운 분야로 알려져 있다. 도·소매업은 대개 중간 내지 최종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분야이므로 어느 업종 못지않게 고도의 친밀성과 시장감각이 필요한 분야이다. 도·소매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업하기 어려운 분야와 쉬운 분야의 구별이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도·소매에서 주로 다루는 소비재는 취급하는 품목에 따라 편의품·선매품·전문품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편의품은 손님이 근처 가게에서 사는 식료품이나 일용잡화 등이고, 선매품은 손님이 여러 가게에서 상품을 둘러본 후에 사는 가구나 의류품 등이며, 전문품은 취미에 따라 기호도가 높은 고급의류나 귀금속 등이다.

이 중 편의품점은 대개 착수하기가 쉽고, 선매품점은 경험이나 상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보자인 사람에게서는 어렵다. 전문품점은 상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더군다나 자본금이 많이 들므로 신규 개업은 어렵다. 하지만 편의품이라도 정육이나 생선은 특수기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렵고, 선매품이라도 문구·꽃·스포츠용품 등은 취급하기 쉬운 편이다.

3. 서비스업

서비스업은 창업자의 능력 자체가 사업의 핵심요소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제조업과는 또 다른 적성과 자질을 필요로 한다.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창업자 자신이 모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이나 능력을 갖추는 것이지만 최소한 사업 분야의 전체 흐름에 대한 이해는 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서비스업 분야에서 새로 창업할 때 흔히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이를 고용하고 스스로는 관리자 내지 경리의 역할에만 한정하고 있는 경우

를 보는데, 이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왜냐하면 창업자 자신이 업무에 정통하여 전체 흐름을 주도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방향제시로 사업을 이끌어 가야만 성공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4. 기타 고려사항

그 외에도 업종 선택에 있어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기상품이라고 해서 쉽게 덩벼들었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번창하고 있는 업종에는 강력한 경쟁상태가 나타나는 것이 사업의 기본이다.

둘째, 신문이나 잡지광고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고수입이 확실한 아이디어 업종’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실제로 해보면 고수입을 올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대개 과장이나 심지어 사기일 경우가 많다.

셋째, 너무 새로운 업종이나 채 검증되지 않은 업종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창업자는 흔히 남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아이템이나 업종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넷째, 남의 성공아이디어를 참조하되 그대로 따라해서는 성공하기 힘들다. 창업에 성공한 이들은 나름의 비결이 있다. 하지만 밖에서 보아서는 그것을 제대로 알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미 시대의 흐름에 뒤쳐지는 경우가 많다.

사실상 창업업종 내지 사업아이템의 선정은 창업과정 중에서 가장 어렵고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는 자신이 고려하는 사업 업종·아이템에서의 성공가능성을 추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택업종에서의 성공가능성을 어느정도 추정할 수 있으면 선택에 도움이 될 것인데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창업컨설팅을 받아 보거나 각종 가상 창업업종 선택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실행한 결과를 참고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창업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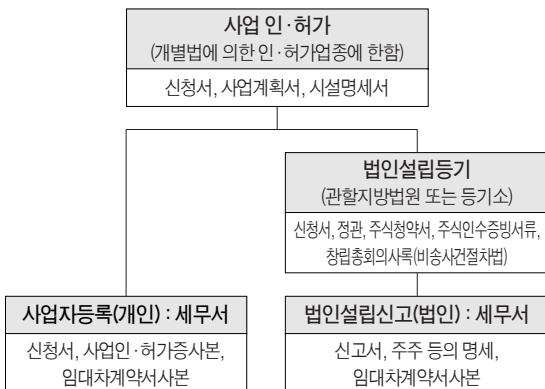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회사설립 절차 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창업하고자 하는 해당사업이 인·허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준비서류의 종류와 인·허가 승인 절차를 미리 숙지하여 관할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보통 사업 인·허가 신청인이 시·군·구청의 민원실에 비치된 인·허가 신청서양식에 내용을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관할관청은 인·허가 여부를 현장실사 또는 서류심사 등을 통해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준다.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2. 법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법인기업 중 대표적인 회사형태인 주식회사의 설립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면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는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규칙인 정관의 작성단계이며, 둘째는 주주확정, 자본모집, 회사기관구성 등 회사의 실체를 형성하는 절차이고, 셋째는 회사가 법인격을 부여받기 위한 설립등기절차로 나눌 수 있다.

〈절차 흐름도〉



창업지원 안내

정부는 중소기업이 창업하는데 필요한 창업절차의 간소화, 공장설립 지원, 자금 지원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1. 창업민원실 또는 창업상담회사 이용하면 편리

창업예비자들은 정보 및 경험 부족 등으로 본인이 계획하는 창업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 회사설립절차 등 창업관련 제반절차를 일관성 있게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창업 후에도 자금조달, 기술개발, 생산관리 및 판매전략 수립 등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이 같은 창업초기의 창업절차 및 사업성 검토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시·군·구에 창업민원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상담회사를 두어 창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같은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창업절차대행 등의 용역사업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용역지원금을 보조하고 있다.

2. 창업보육센터에서 창업하면 편리

창업보육센터란 기술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장소 및 시설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창업자 또는 창업예비자에게 개인 또는 공동작업장 등의 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함과 아울러, 경영·세무·기술지도 등의 지원을 통해 창업에 따른 위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성장을 유도함으로써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성공률을 높이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 입주대상 : 벤처 및 기술집약형 업종의 창업자(창업일로부터 1년 이내) 및 예비창업자. 다만,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대기업 또는 외국기업이 50% 이상 출자한 회사, 공해다발업종 영위자는 입주대상에서 제외된다.

○ 입주기간 : 6월 이상 2년 내(보육센터 운영자와 입주자 간의 협의하에 기간연장 가능)

- 입주비용 : 보육센터 운영자와 입주자 간의 계약에 의해 정한다.
- 지원내용 : 작업장, 범용제조시설, 실험기기, 자료실, 사무설비 등 창업에 필요한 제반시설을 지원하며 경영기술 및 세무에 관한 상담과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 창업사업계획 승인제도를 이용하면 공장설립 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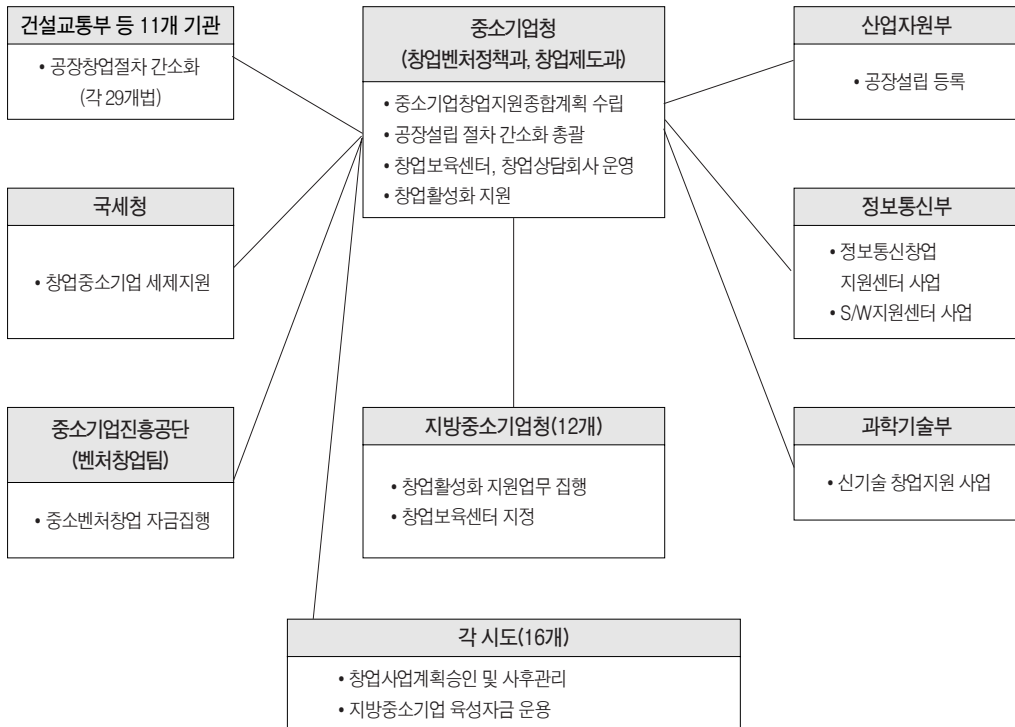
창업자가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은 공장건설을 위해 조성된 계획입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세분된 개별적인 용도지역 중 공장설립이 허용되는 자유입지에 한정되어 있다. 계획입지의 경우 공장설립에 별 어려움이 없으나, 창업자가 개별 자유입지에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 산림, 환경, 토지이용관련법 등 법률에 의해 개별적으로 인·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와 어려움이 있게 된다. 이렇듯 창업자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받아야 할 복잡한 인·허가사항을 일괄 처리토록 함으로써 공장설립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를 두고 있다.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창업일로부터 7년 이내인 사업자가 이미 자기명의로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제2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 타인의 공장을 임대하여 기존 공장이 영위하던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 비록 창업자라 하더라도 기존의 사업장을 승계하는 등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업자

<창업지원체계도>



창업자금 지원책들

정부는 국가의 예산으로 창업,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공장확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자금을 대출하고 있다. 이러한 자금은 보통 융자금리가 저리이고 기간이 비교적 장기이므로 업종별로 해당 요건을 잘 갖추어 활용하면 창업자금의 주요한 원천으로 활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창업자금 융자 지원

가. 지원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창업자금 지원 : 창업자의 사업성, 기술성 및 지원의 타당성 등을 평가하고 창업사업에 대한 담보대출 또는 보증부 대출(신용보증기관과의 부분보증제도)을 병행하여 자금을 지원한다.
- 기술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창업자금 지원 : 기술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이 기술력과 사업성이 있는 창업자를 적극 발굴하여 보증서를 발급하고 창업자는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창업자금 융자 추천을 받을 수 있다.

나. 지원대상

- 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다. 지원 조건 및 금액

- 지원한도 : 동일기업당 10억원 이내(단, 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 상환조건
 - 운전자금(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시설자금(8년 이내, 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금리 : 연 5.9% 내외(변동)
- 신청서 : 자금신청서 및 첨부서류(사업계획서 등)

2.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한 소상공인 창업자금 조달

가. 지원 대상 및 요건

- 소상공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 또는 영위하고 있는 자
 - 제조업·광업·건설업·운송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도·소매, 숙박·음식점, 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지원제외 대상

-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금융기관의 불량거래자(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자

나. 지원조건

- 대출한도 : 5천만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5.9%(변동)
- 상환기간 : 5년
- 상환방법 :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시에 일시 상환

3. 벤처캐피탈을 통한 창업자금 조달

벤처캐피탈(모험자본)이란, 고도의 기술력과 장래성은 있으나 자본과 경영능력이 취약한 벤처기업에 창업 초기단계에서부터 자본과 경영을 지원하여 기업을 육성한 후 투자자본을 회수하는 첨단 금융기관을 말한다.

기존 금융기관이 일정한 담보를 조건으로 융자형태의 자금을 지원하고 투자기업의 경영성과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리를 얻는 대신, 벤처캐피탈은 담보 없이 무담보 주식투자를 통해 투자기업의 경영성과에 따라 많게는 투자금의 수십 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실패하는 경우 투자금을 전혀 회수할 수 없는 투자리스크를 가지게 된다.

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지원대상

- 창업한 지 7년 이내의 중소기업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 지원대상 제외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창업투자회사와 동일한 기업집단의 소속계열회사
-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 제외)

나. 신기술사업금융회사

○ 지원대상

-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
 - 제품개발 및 공정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 연구개발의 성과를 기업화·제품화하는 사업
 - 기술도입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사업
 -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 기타 생산성 향상, 품질 향상, 제조원가 절감, 에너지 절약 등 현저한 경제적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 또는 응용하여 기업화·제품화 하는 사업

○ 지원방법

- 투자: 주식취득, 회사채,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 용자: 일반용자, 조건부용자
- 기타 리스 또는 팩토링 업무 지원

3. 중소기업 전용공단 및 아파트형공장에 입주시 분양대금 등을 저리로 용자

○ 지원대상

- 중소기업진흥공단 조성공단 및 건립 아파트형 공장 입주기업

○ 취급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 지원범위

- 전용공단: 입주자의 용지 매입비, 건축비 및 부대시설비

- 아파트형공장: 입주자의 분양대금

○ 용자조건

- 용자금리: 연 5.9%(변동)

○ 용자범위 및 용자기간

	전용공단 입주	아파트형공장 입주
용자한도	분양대금 80% 건축자금 70%	분양대금 80%
용자기간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4. 세 개 이상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공장 등을 설립하는 경우 시설자금을 저리로 용자

○ 지원대상

- 제조업, 정보처리업 또는 도소매업종 분야의 3개 이상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공장, 설비, 창고, 전시판매장 설립을 추진하는 경우
- 참가업체 요건
 - 독립채산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개인기업
 - 일정비율의 자금조달능력 보유
 - 창업기업 및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가동중인 법인 등

○ 취급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 지원범위: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 용자조건

- 용자금리: 연 5.9%(변동)
- 용자기간: 시설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포함),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용자비율: 공동 토지·건물 소요자금의 90% 이내, 개별 토지·건물 소요자금의 70% 이내, 기계설비 소요자금의 100% 이내, 1회전 운전자금 소요의 100% 이내

※ 개별업체 한도 40억원, 추진주체 한도 50억원

창업기업에 대한 세금혜택

〈창업에 대한 세금지원 내용 요약〉

	지 원 내 용
법인세 (소득세) 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창업 후 소득발생연도부터 4년간 매년 납부할 법인세(소득세)의 50% 감면
등록세 면제	- 창업 후 2년내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대한 등록세 면제 -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6월내 행하는 법인설립등기 포함)
취득세 면제	- 창업 후 2년내 취득한 사업용자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인지세 면제	- 창업 후 2년간 금융기관의 용자 관련문서에 대하여 인지세 면제
재산세, 종합토지세	- 창업 후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50% 감면
창업기업 투자 에 대한 소득공제 등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금액의 15% 소득공제 -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을 5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자료: 국세청

〈참고자료〉 창업 관련 유용한 정보들

1. 창업 및 세제 관련 주요 기관 및 연락처

- ☞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절차 및 지원에 관한 내용
 - 중소기업청 창업벤처정책과: (042) 481-3284
 - 중소기업청 벤처진흥과: (042) 481-3283
 - 중소기업청 창업제도과: (042) 481-3281

- ☞ 법인세 등 국세지원에 관한 내용
 - 국세청 상담센터: 1588-0060

2.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전 화 번 호
서 울	02) 769-6603
부 산	051) 630-7421
울 산	052) 277-3283
대구·경북	053) 601-5276
인 천	032) 450-0523
광주·전남	062) 600-3018
대전·충남	042) 866-0128
경 기	031) 259-7925
경기(북부)	031) 920-6724
충 북	043) 230-6813
전 북	063) 210-9913
경 남	055) 269-5820
강 원	033) 256-9611
강 령	033) 646-9967~8
계 주	064) 751-2055~7

3.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센터

	전 화 번 호	
서 울	서 울	02) 786-1071
	강 남	02) 567-6800
	중 부	02) 754-3591
	강 동	02) 3401-4025
경 기	031) 215-1560	
인 천	032) 438-9080	
대 전	042) 483-2993	
광 주	062) 361-0630	
대 구	053) 424-6970	
부 산	051) 466-4115	

4. 창업 관련 사이트

○ 포털사이트

	URL	주요 내용
창업넷	http://changupnet.go.kr	창업실무 AtoZ, 창업지원사업, 사이버컨설팅광장, 창업강좌, 창업자료실, 벤처마켓 등
창업e닷컴	http://changupe.com	창업 및 프랜차이즈, 체인 인큐베이팅, 창업교육 관련 정보 제공
산업정보망	http://www.iin.co.kr/	산업DB 구축, 응용서비스 개발,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IT컨설팅 등 다양한 정보화사업 수행
중소기업청	http://www.smba.go.kr/	중소기업 정책 수립, 자금·인력·수출 및 관료 등 중소기업의 성장지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지방중소기업 육성 방안 등 수록
이노넷	http://www.innonet.net/	기업경영활동 전반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가공·유통하고 기업의 애로를 해결하는 종합기업서비스정보망
소상공인지원센터	http://www.sbdc.or.kr/	창업경영지원 안내, 소상공인 창업경영자금, 신용보증지원제도, 업종별 창업가이드, SOHO 등에 관한 정보 수록

○ 창업 관련 협회

	URL	주요 내용
한국IT중소벤처기업연합회	http://www.picca.or.kr/	IT종합자료실, 해외마케팅 사업과 IT인력개발사업, 경영지원사업 등을 담당
한국컨설팅협회	http://www.mykca.org/	국내외 컨설팅산업 정보·동향, DB 구축, 출판 등의 On & Off Line 정보화 사업 실시
한국창업보육협회	http://www.kobia.or.kr/korea/	지역별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간의 협력체를 구축, 품질인증, 전자상거래 지원, 공동전시판매 정보 제공

○ 인력·설비 관련 사이트

	URL	주요 내용
중기청 인력정보망	http://mp.smba.go.kr/	중소기업과 국내실업자 취업 알선 및 외국 전문인력 도입 및 연수, 병역특례제도 안내서비스 제공
중기청 연구장비인력종합 검색시스템	http://trin.smba.go.kr/	전국 대학교·연구소가 보유한 전문인력과 연구장비에 대한 DB를 연계, 통합검색을 지원
중기청 유희설비정보센터	http://www.smba.go.kr/edi-bin/index/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중고 유희설비에 관한DB 구축·제공

○ 창업자금 지원 관련 사이트

	URL	주요 개요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http://www.icredit.or.kr/	신용보증의 종류, 지원절차 및 각종 금융, 세무·회계 관련 정보 제공
기업금융연구원 정책자금정보	http://www.fund.re.kr/	정책자금에 대한 뉴스 및 정보와 함께 정책자금 신청을 위한 각종 양식과 신청사례, 온라인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활용을 지원
한국수출입은행	http://www.koreaexim.go.kr/	우리 기업의 자본재 수출과 해외투자, 해외자원 개발, 주요 자원의 수입 등에 필요한 중장기 금융 및 대외경제협력기금, 남북협력기금을 지원
기술신용보증기금	http://www.kibo.co.kr/	담보능력이 미약한 신기술사업자 및 일반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원활한 자금유통을 지원
FIH	http://www.fih.or.kr/	한국기업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외국 투자자들을 위하여 투자자들의 요구에 맞춘 정부 후원프로그램 제공
한국비즈니스엔젤네트워크	http://www.kban.org/	기업평가, 투자 및 경영 상담, IR자료 작성 지원, 국내외 투자유치 지원, 엔젤클럽 및 투자조합 결성 지원 등의 업무 수행

○ 기타

관련 항목	사이트명	URL
창업교육	중기청 사이버 창업강좌	http://www.realseminar.co.kr/forwarding/smba/smba/
공장설립	한국산업단지공단	http://www.kicox.or.kr/
기술/평가	중기청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한국생산기술연구원	http://www.kitech.re.kr/
	한국산업기술평가원	http://www.itep.re.kr/
세무	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회계	한국공인회계사회	http://www.kicpa.or.kr/
등기, 공탁, 호적	대법원	http://www.scourt.go.kr/
특허	특허청	http://www.kipo.go.kr/

변액보험 (變額保險)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중 저축보험료를 따로 분리하여 별도의 분리계정을 통해 주식이나 국채·공채·사채 등 주로 수익성이 높은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그 투자수익을 보험계약자의 환급금(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에 반영하는 한편, 투자수익의 성과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액이 변동되는 보험을 말한다.

전통적인 보험상품은 미리 약정된 이율에 따라 만기환급금을 받지만 변액보험은 투자수익률에 따라 되돌려 받는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이 달라진다. 즉, 변액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최초 계약한 기본보험계약의 '기본보험금'과 투자실적(적립금-기본보험계약의 예정책임준비금=초과적립금)에 따라 증감하는 '변동보험금'으로 구성되며, 보험의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 변동보험금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망보험금은 기본보험금을 최저보장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성격으로 인해 보험사는 변액보험의 계정을 일반상품과는 별도로 설정하여 자산을 운용해야 한다. 변액보험상품으로는 양로보험·중신보험·연금보험 등 크게 3종류가 있어 가입자들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지만 가입자가 투자의 위험과 수익에 책임을 져야 한다.

변액보험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생명보험 급부의 실질가치 저하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안된 것으로, 네덜란드의 바르다유사가 자산운용 실적과 보험금을 연계하여 실질가치를 보전할 수 있는 변액보험을 최초로 판매하였다.

1976년 변액보험을 도입한 미국에서는 1990년대 미국 주식시장의 활황과 더불어 매년 20~30%의 신장률을 기록하였으며, 1999년에는 생명보험시장에서 33.2%의 점유율을 나타낼 정도로 판매가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1986년에 도입한 일본에서는 1990년부터 주식시장의 거품이 제거됨에 따라 판매량이 급감하고 부실판매로 인한 인식 악화로 점유율이 미미한 상황이다.

2001년 7월에 우리나라에서는 변액보험이 첫선을 보였으나, 주식시장의 침체로 투자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아 판매실적이 극히 부진했다. 그러나 2001년 하반기 이후 국내 주가가 급등하면서 판매실적이 급증하고 있다. 변액보험의 판매급증은 추가급등으로 변액보험의 누적수익률이 40%를 넘는 상품이 등장하는 등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변액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가 늘어나, 변액보험 시장을 둘러싼 보험사간의 판매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OECD의 지배구조 논의동향

1999년 5월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이 제정된 이후 각국은 지배구조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외환위기 이후 기업·금융·정부 부문의 개혁에 있어서 지배구조의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하였고, 이는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신인도를 되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택환
駐OECD대표부 공사참사관

우리나라도 외환위기 이후 외국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OECD 원칙을 바탕으로 주주권을 강화하고 이사회 제도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강력히 추진하였으며, 사외이사제도 및 감사위원회제도 도입, 소액주주권 강화, 기관투자자의 의견권 강화 등이 이루어졌다.

그 후 2001년 10월 미국의 엔론사태가 벌어지면서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새로운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됨에 따라 2002년 OECD 각료이사회에서 이들 이슈들을 반영하여 원칙을 조기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약 2년간의 토론 끝에 새로운 이슈로 부상한 CEO에 대한 과다보수 지급, 기관투자자의 주주기능 활성화, 회계법인과 신용평가사의 이해상충 문제 등에 대한 회원국의 합의를 담아 2004년 5월 OECD 각료이사회에서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지금 OECD에서는 기업의 지배구조뿐만 아니라 공기업과 타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기업연금 등 사적연기금(Pension Funds), 보험회사·투신 등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 개정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은 회원국에 준수 의무가 없는 비구속적 규범(non-binding rule)이지만, 각 회원국의 이행실태를 분석하여 5년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개정 보완하기로 하였으며 기업지배구조에 관해 인정된 유일한 국제 표준이다.

◇ 이 글은 필자의 개인의견이며, 駐OECD대표부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사 등의 지배구조도 심층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2004년 5월에 개정된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의 핵심내용을 살펴본다.

먼저, 주주권의 보호와 권한확대를 위해 이사와 종업원에 관한 보수 중 주주가치를 희석시킬 수 있는 부분(예: 스톡옵션)은 반드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촉진하기 위해 이들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정책과 절차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한편, 소액주주 및 외국인주주에 대한 평등대우를 강화하여 대주주의 권한남용으로부터 소액주주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추가하고,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권리구제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범세계적인 자본시장 개방 추세를 감안하여 외국인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제약을 철폐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종업원의 감시기능 강화를 위하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경영진의 비리를 이사회에 고발하도록 하고 이러한 사유로 본인에게 부당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기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상장기업의 필수 공시 대상에 최고경영자와 이사의 선임절차, 자격요건, 타 회사의 이사겸임 여부, 이들에 대한 회사의 보수 정책 등 세부사항을 포함하도록 권고하였다. 또한 외부감사가 궁극적으로 책임을 지는 대상은 주주이며 회사에 대해서는 전문가로서의 적절한 주의의무를 져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증권 브로커, 투자은행의 분석가, 신용평가회사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사회의 책임강화를 위해 회사의 지배구조를 자체 점검하고 최고경영자와 이사의 보수를 회사와 주주의 장기적 이익과 일치시키도록 노력할 것을 이사회회의 책임으로 명문화하였다. 또한 이사회 의장과 최고경영자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각국

OECD는 2004년 5월에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을 개정하였다. 또한 공기업과 타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기업연금 등 사적연기금, 보험사·투신 등 자산운용사의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의 제도가 상이하므로 양자를 분리하도록 강제하는 대신 모범사례의 하나로만 권고하였다.

공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 논의동향

1999년 5월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이 제정된 이후 불특정다수에 영향이 큰 공기업과 금융기관(보험·투신 등 자산운용사, 기업연금 등 사적연기금 포함)의 지배구조에 대한 심층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특히 OECD는 공기업지배구조원칙을 만들기 위해 조정위원회(Steering Committee)와 작업반을 통해 회원국 의견을 수렴해 왔다. 현재 논의 중인 공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은 기업지배구조원칙과 같이 회원국에 준수 의무를 강제하지 않는 비구속적인 성격이나, 향후 OECD 회원국의 공기업지배구조 변화에 모범사례 또는 벤치마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OECD는 2005년 3월경 마무리를 목표로 공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 제정작업을 추진 중이다. 공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 제정작업은 철저한 상업화로 경쟁을 도입한 핀란드·스웨덴·노르웨이 등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공기업개혁 성공사례가 많은 참고가 되었다.

논의 중인 공기업지배구조의 내용을 사무국안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목적은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을 증폭시키고 공기업의 특수성을 보완하는 것이며, 이를 대체하거나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前文에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와 공기업지배구조 개선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며, 공기업 체제하에서도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미시적으로는 개별기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보다 나은 성과를 지향하며 경쟁과 투명성을 촉진하여 민간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공기업 자산의 가치를 제고하고, 거시적으로는 경제성장과 고용창출, 재정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공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는 각국의 행정문화 등 전통과 경제의 개방화 정도, 공공부문의 개혁 여부, 정치권의 부당한 간섭 여부 등으로 나라마다 다르지만, 대략 주인의식의 약화와 책임소재의 불분명 등으로 효율성과 책임성이 저하되어 왔다.

이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은 주로 상업적 활동(수입의 대종이 판매와 수수료)을 영위하는 공기업이며, 경우에 따라 상장 여부나 정부가 지배주주나 의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기도 하며, 공기업이 출자한 산하기업도 포함될 수 있고 중앙정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나 순수 공공목적의 비상업적 공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다.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경쟁하는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기업 관련 법률과 규제가 개선되고 지배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 소유기능과 다른 기능(주로 규제 및 산업 정책기능)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하고, 공기업에게 공공서비스 제공 의무나 정상적 규범 이상의 책임을 수행하는 의무가 주어지는 경우 법률이나 규정에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하며 이 사실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소유자로서의 정부는 소유권 정책을 수립하고 그 종합적인 목표, 지배구조에 대한 정부의 역할, 소유권 정책의 집행방법 등을 발전시켜야 한다. 소유권의

집행은 정부 내에서 부처 간 명확히 정의되고 인식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중앙조정기구(coordinating entity)나 소유권 중앙집중기구 설치를 권고한다. 정부는 공기업의 일상적 경영에 간여해서는 안 되며, 공기업이 주어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경영의 자율성이 주어져야 한다. 국가는 공기업 이사회가 주어진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국가가 직접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 모든 주주에게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고, 회사정보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을 인정하며, 모든 주주에 대해 고도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이사 선출에 있어서 소수주주의 의사결정 참여제도(예 : 집중투표제)도 권고하고 있다.

이해관계자(stakeholders)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과 같이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투명성 제고와 정보공개 강화를 위하여 총체적인 연례보고서를 발행하고, 대형 공기업은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며, 공기업의 회계·재무제표 공개는 상장기업 수준이 바람직하다. 대형 공기업 또는 상장 공기업은 재무정보뿐 아니라 비재무정보도 공개한다. 명확한 기업목표를 제시하고, 중요한 위험요인은 적절히 공개하며, 정부보증 등 정부의 재정적 지원 약속은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이사회에 관해서는 먼저 이사회가 적절한 권위와 능력, 충분한 객관성을 가지고 전략적 지도와 경영진의 감시를 수행해야 하며, CEO를 추천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또한 공기업의 성과에 대한 최종적 책임은 이사회가 져야 하고, 이사회는 소유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이사 각자는 회사전체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며, 모든 주주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아울러 이사회는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충분한 수의 비상임, 사외 독립이사를 둔다. 정부를 대표하는 정부이사의 수는 제한되어야 하며, 모

든 이사회 멤버는 투명한 절차에 따라 추천돼야 한다. 이사회 의장은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인물이어야 하며 CEO와 별도 분리하는 것이 모범사례이다(의무사항은 아님). 또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감사·리스크·보수 등의 목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사회는 공기업 성과 평가를 위해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이사회 멤버에 대한 보수정책은 회사의 장기적 이익을 고려하여 유능한 인재를 유인할 수 있을 만큼 민간부문과 경쟁할 수 있는 충분한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공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 관련 논의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공기업 민영화를 촉진하는 것도 중요하나, 이와 동시에 공기업으로 남아 있는 기업도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은 경제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양자간의 관계를 규정한다.

소수주주의 의사결정과정 참여에 있어서 소수주주에게 별도의 특혜를 줄 필요는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국제표준과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에서 부여하는 소수주주 보호조항(예 : 집중투표제)은 최소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의견이었다.

정부를 대표하는 정부이사의 수 제한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이익이 지나치게 축소 대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정부의 권한행사가 과도한 부분을 시정하는 측면에서 취지는 살리는 방향으로 의견이 정리되었다. 그 배경에는 객관적이고 유능한 이사회를 공기업의 실질적인 주인으로 육성하려는 OECD 회원국의 공통적 취지가 담겼다.

이사회 의장과 CEO의 분리문제에 대해서는 과거 한국의 경험(1984~97년 이사회 의장과 CEO 분리 → 1997년 양자 통합)은 이해하지만 양자의 분리가 바람직하다는 것이 다수의견으로 정리되었다(의무사항은 아님).

지배구조는 시스템의 성과는 물론 성장과 효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변수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도 다른 나라의 모범사례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실정을 감안해 최선의 대안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연기금지배구조 논의동향

기업연금 등 사적연기금의 규모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OECD에서는 이를 운용하는 금융기관과 연기금(Private Pension Funds)의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를 1990년대 초부터 시작했다. 연기금(개인연금 등 개인저축 목적의 연기금은 제외 하며 주로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기업연금을 지칭)의 지배구조 논의는 OECD 회원국에 규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목적으로 OECD 보험위원회와 금융시장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그동안 열띤 논의의 결과, 2000년 11월 '기업연금의 규제를 위한 15개 원칙'을 제정하고, 2002년 7월에는 연기금지배구조의 가이드라인에 합의하였으며, 2004년 7월에는 기업연금의 규제에 관한 핵심원칙 6개항을 권고한 바 있다. 연기금 적립(funding) 및 수급권(benefit security)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연기금 자산운용 가이드라인은 현재까지 논의 중이다.

이러한 가이드라인들은 회원국들을 구속하기보다는 연금제도의 설계·감독 기관에 도움을 주자는 차원에서 제안되었다. 이와 같은 OECD에서의 다양한 논의는 기업연금제도를 2005년부터 도입하는 우리나라에 매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최근 기업연금의 적립 및 급부에 대해 논의되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기업연금의 적립 : 모든 기업연금은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으로 설계해야 하며 부과 방식(Pay As You Go)은 금지되어야 한다. ②확정급부형(Defined Benefit) 연금의 보증 : 확정급부형 연금은 독립된 연기금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적절한 보증계약을 통해 지급이 담보되고 더 나아가 우선변제권을 줄 수도 있다. ③확정급부형 연금의 부채 평가 : 확정급부형 연금의 급부가 개시되어 종료될 때까지의 연금부채의 누적가치를 적절한 방법에 기초하여 평가해야 한다. ④확정급부형 연금의 적립 : 확정급부형 연기금은 부채를 감안하여 충분한 규모의 적립이 이루어져야 하나 경기·금융시장의 상황변화에 따라 유연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⑤청산 : 청산시 연금 지급에 대한 적절한 법적 규정이 있어야 하며 기업파산시 연금수급자가 우선변제권을 가져야 한다.

서 시작하여 이제는 공기업·연기금·보험사·자산운용사 등 폭넓은 분야에 걸쳐 지배구조 문제가 논의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정부 및 공공행정 부문의 지배구조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제 지배구조는 단순한 제도상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성과는 물론 성장과 효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변수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각종 OECD 조사가 실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지배구조의 중요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의 모범사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문화와 실정을 감안하여 현실적인 최선의 대안을 찾는 노력을 부단히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결국 국제적인 모범사례와 접목시켜 시스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효율과 혁신을 제고하는 것이 지배구조 개선의 최종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시사점

OECD에서는 1990년대 말 기업지배구조 논의에

용 어 해 설

적대적 M&A

기업소유지분의 인수·합병 가운데 기존 대주주의 협의 없이 이루어지는 기업지배권 탈취를 말한다.

「증권거래법」 200조의 대량주식취득제한 조항에 의해 사실상 불가능하던 적대적 M&A가 동 조항의 폐지효력이 1997년 1월 1일부터 발생됨에 따라 증시의 가장 큰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적대적 M&A는 우호적 M&A에 비해서 대상기업의 범위가 넓고, 특히 인수가액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지 않아 인수가액이 낮아진다는 매력 때문에 성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대상으로는 대기업계열이 아니며 자본금 규모가 작고 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기업, 고정자산의 가치가 저평가돼 있고 자금조달능력이 뛰어나며 유동성이 높고 현금흐름이 우수한 기업, 사양산업에 속하는 기업 중 생산기지 해외이전 등으로 경쟁력의 회복이 뚜렷해 흑자 가능한 기업, 전환사채 등 장내주식을 다량 발행하며 향후 주식전환이 일어나서 제1대 주주의 소유비율이 현저하게 낮아질 수 있는 기업 등을 들 수 있다.

WTO 무역원활화 협상 논의동향

2004년 8월 1일, DDA 협상의 주요 분기점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7월 합의(July Package)’가 채택됨에 따라 DDA 각 협상 분야별 기본골격(framework)이 합의되었다. 4개 싱가포르 이슈 중 하나였던 무역원활화도 7월 합의의 부속서 D(Annex D)에 따라 협상의 기본원칙이 결정되었으며, 농업·서비스·비농산물시장접근·규범 등의 분야와 함께 DDA 협상의 일괄타결대상(Single Undertaking)으로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2003년 9월 개최된 칸쿤 각료회의 시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대립 속에 협상 결렬의 표면적인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싱가포르 이슈는 무역원활화 분야만이 DDA 협상 의제로서 포함되었으며, 투자·경쟁·정부조달투명성 등 여타 3개 이슈는 DDA 의제로는 제외되 WTO 의제로서는 존치되는 수준에서 마무리되었다.



장성길
駐제네바대표부 2등서기관

이 글에서는 무역원활화 협상과 관련하여 7월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및 현재까지의 협상동향을 점검함과 함께 무역원활화 주요 이슈를 분석함으로써, 무역원활화 협상의 향후 전개 방향을 전망하고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모색해 보기로 하겠다.

‘7월 합의’까지의 과정

칸쿤 각료회의 이후 싱가포르 이슈의 처리방향에 대한 다양한 입장이 표명되었으나, 무역원활화 협상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DDA 협상에 포함하는 데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미국·EC·일본·한국 등 협상 개시를 지지했던 국가들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이슈 전체의 협상 의제화를 반대했던 아프리카 국가들조차도 싱가포르 이슈의 처리방향에 대하여 ‘1+0 방식’(투자·경쟁·정부조달투명성은 WTO 의제에서 완전히 제외하고, 무역원활화는 농업 등 주요 분야에서 아프리카그룹의 요구 수용을 조건으로 협상을 개시)을 거론하면서, 무역원활화 협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유연한 입장

◇이 글은 필자의 개인 의견이며, 駐제네바대표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농업·서비스 등 여타 DDA
협상 분야와 달리 무역원활화 협상은
7월 합의 이후 DDA 협상에 포함되었으며,
무역원활화와 관련된 GATT 규정의
수정 및 보완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을 표명하였다. 이는 2004년 4월 아프리카그룹 통상장관회의의 결과물인 ‘키갈리 선언’(Kigali Declaration)에서도 재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바탕으로 2004년 4월부터 WTO 차원에서는 역사(Yerxa) 사무차장 주도로 무역원활화 이슈 논의를 위한 비공식회의가 개최되었으나, 구체적인 논의 성과가 도출되기보다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수준이었다. 구체적으로 칸쿤 각료회의시 작성된 데르베즈안(Derbez text)의 부속서 E(Annex E)를 논의의 기초로 삼자는 콜로라도그룹과, 무역원활화와 관련한 개도국 관심사항에 대한 명확화를 우선하자는 개도국 핵심그룹 간의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투자·경쟁·정보조달투명성 등 3개 이슈의 처리방향 또한 논의 진전의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참고로 콜로라도그룹은 무역원활화의 WTO 규범화를 지지하는 한국·미국·EU·일본·캐나다·호주·뉴질랜드·스위스·노르웨이·칠레·홍콩·싱가포르·코스타리카·모로코 등 14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도국 핵심그룹은 개도국 관심사항에 대한 우선적 고려를 주장하는 방글라데시·보츠와나·쿠바·이집트·인도·인도네시아·자메이카·케냐·말레이시아·모리셔스·나이지리아·필리핀·르완다·탄자니아·트리니다드 앤 토바고·우간다·베네수엘라·잠비아·짐바브웨 등 19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7월 합의 도출을 위한 논의가 2004년 6월부터 구체화된 가운데 우리나라를 포함한 콜로라도그룹 국가들은 협상세부원칙(Modalities) 초안 작성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는바, 데르베즈안의 부속서 E를 유지하되 개도국 요구사항을 추가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협상력을 모으기로 합의하였다. 2004년 7월 16일 배포된 7월 합의 초안에 대해 콜로라도그룹과 개도국 핵심그룹 간의 힘겨루기는 지속되었으며, 결국 2004년 8월 1일 발표된 합의문에는 개도국 특별대우 부분이 대폭 반영된 무역원활화 협상세부원칙이 결정되었다. 동 협상세부원칙의 특징은 개도국의 이행과 선진국의 재정적·기술적 지원 의무를 연계시킨 데 있다. 또한 협상의 최종 목표를 예단하지 않는다는 점과 분쟁해결절차 관련 조항을 언급하지 않기로 한 점은 선·후진국 간의 타협의 산물로 평가된다.

현재까지의 논의동향

농업·비농산물시장접근·서비스 등 여타 DDA 협상 분야와 달리 무역원활화 협상은 7월 합의 이후에야 DDA 협상의 일부로서 포함되었으며, 이에 따라 협상그룹 의장 선임, 작업계획 및 작업일정 작성 등 절차적 사항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었다. 절차적 이슈에 대해서도 콜로라도그룹과 개도국 핵심그룹 간의 이견이 계속되었으나, 개도국 핵심그룹을 대표하는 누어(Noor) 말레이시아 대사의 협상그룹 의장 선임은 개도국 핵심그룹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절차사항에 신속히 합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누어 의장이 제시한 부속서 D에 따른 작업계획 작성과 비농산물시장접근 협상 일정에 따른 2005년도 상반기 회의일정은 2004년 11월 개최된 무역원활화 협상그룹(NGTF) 공식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이를 기초로 2005년에 실질적인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2005년 2월 7일과 9일 양일간 개최된 무역원활

화 협상그룹 공식회의는 한국·EC·미국·일본·캐나다·대만 등이 제출한 제안서를 중심으로 기술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아프리카 국가 및 개도국 핵심그룹 국가들은 개도국에게 보다 구체화된 우대 조항 마련 및 기술지원과 능력배양 사업이 개별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제안서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의 표명하거나 명료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협상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올해 상반기 중 무역원활화 협상은 3월·5월·6월·7월 등 네 차례 예정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올해 12월 개최 예정인 홍콩 각료회의까지의 목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 하지만 홍콩 각료회의에서의 성과를 위하여 올해 상반기 중 그간의 논의의 결과에 대한 취합(stock-taking) 및 주요 이슈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콜로라도그룹을 중심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별로 무역원활화 관련 GATT 규정(5조·8조·10조)의 명확화 및 개선을 위한 제안서 제출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나라도 2004년 2월 회의시 GATT 10조(무역규정의 공표 및 시행)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한 데 이어, 차기 회의시 GATT 8조(수출입 절차 및 수수료), GATT 5조(통과의 자유)와 관련한 제안서 제출을 통하여 실질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주요 이슈 분석

무역원활화의 주요 이슈는 다음과 같다.

첫째, GATT 10조 관련 이슈이다.

GATT 10조와 관련한 주요 쟁점사항으로는 무역규정과 관련한 공표대상 정보의 범위, 공표 수단 및 방식, 정보제공창구(enquiry points)의 설치, 사전협의의 메커니즘의 도입, 상고 및 항소 절차의 도입 등이 있다. 현행 GATT 규정은 공표대상 정보로서

관련 법규, 일반적 적용이 가능한 행정결정, 양자조약 등을 규정하고 있다. 무역원활화 공식회의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다수 제안서 제출국들이 사전판정(advance ruling)을 공표대상 정보로서 추가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공표 수단 및 방식과 관련하여 현행 GATT 규정에 아무런 언급이 없음을 감안하여, 우리나라는 WTO 정부조달협정(GPA :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방식을 통한 무역관련 규정의 공표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정보전달창구 설치의 필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는바, 설치 형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단일정보전달창구(Single National Focal Point), EC의 문의처(inquiry point) 설치 등이 제시되고 있다. 무역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시 사전협의의 필요성은 예측가능성 차원에서 주요한 이슈인바, EC는 국내의 법령제정 절차와 유사한 형식으로 무역관련 규정의 제정시 국외 이해관계자와의 사전협의 절차를 진행할 것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상고 및 항소 절차의 도입을 통하여 수출입과 관련한 법적 안정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서 내용에 포함하고 있다. GATT 10조 관련 사항은 이행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분야로, 개도국들도 논의의 기본적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 추가적인 이행기간 이외의 개도국 우대조항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둘째, GATT 8조 관련 이슈이다.

GATT 8조 관련 주요 쟁점사항으로는 신속한 통관 및 수출입 절차의 적용방식, 위험관리기법의 도입, 수수료 및 과징금의 적용방식, 서류요건 절차의 간소화 및 표준화의 적용범위, 특송화물예의 적용 등이 있다. 콜로라도그룹을 중심으로 앞서 언급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투명성, 예측가능성 및 형평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GATT 8조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개도국들은 기본적인 취지에는 동감하면서도 개도국들의 제한된 물적·인적 자원

향후 우리 기업들의 애로·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제안서 제출과 함께, 무역원활화의 구속력 있는 협정 제정을 지지하는 콜로라도 그룹과의 공조를 통해 무역원활화 협상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을 고려하여 개도국의 사회간접자본시설 구축과 선진제도 도입을 위한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 사업이 협상 진행의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끝으로, GATT 5조 관련 이슈이다.

GATT 5조 관련 주요 쟁점사안으로는 무차별대우의 적용범위, 환적통과와 비환적통과의 구분, 수수료·과징금·담보의 적용방식 등이 있다. GATT 5조는 내륙국의 이해와 직결되는 사안으로서, 콜로라도그룹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및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내륙 개도국들 또한 적극적으로 협상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분야이다. 특히 개도국들은 통과가 세관절차와 관련된 매우 복합적인 문제임을 감안하여 통과절차상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연구와 함께, 내륙 개도국들의 인프라 구축 등 기술지원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일부 개도국들은 다자규범이 아닌 양자협상으로 통과 문제에 대한 해결을 주장하고 있으나, 환적통과와 비환적통과의 구분 등 현 시점에서 인프라 구축 없이 실행가능한 조치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경우 개도국들의 반발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협상전망 및 대응방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역원활화 협상은 관련 GATT 규정의 수정 및 보완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

가 진행되고 있다. 동일한 GATT 규정을 논의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콜로라도그룹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과 개도국 핵심그룹을 중심으로 한 개도국들의 향후 협상의 진행방향 및 목표는 상이하다.

콜로라도그룹은 GATT 5조·8조·10조가 원칙론적 수준으로서 1947년 제정 이후 수정 및 보완 작업이 전무하였음을 감안하여 무역원활화 관련 규정을 현실에 부합하게 투명성·예측가능성 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보완·발전시켜 원산지협정(Agreement on Rules of Origin), 관세평가협정(Agreement on Customs Valuation) 등과 같은 구속력 있는 협정을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해 개도국 핵심그룹은 별도의 협정 제정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협상의 과정 및 결과로서 선진국의 지원을 토대로 개도국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사업 전개와 함께 사회간접자본시설을 마련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고 있다.

2002년 세계은행 연구에 따르면 APEC 국가 간 무역원활화 관련 조치의 이행 및 각국 제도의 보완 시 APEC 국가들 간에 2,800억달러 규모의 이익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제조업 관세감축에 따르는 이익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무역국으로서 무역원활화 협상의 가장 큰 수혜국가 중의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특히 중소 수출업자들의 해외시장 접근을 강화시키는 주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감안하여 향후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 및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제안서 제출과 함께, 무역원활화의 구속력 있는 협정 제정을 지지하는 콜로라도그룹과의 공조를 통하여 무역원활화 협상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

세계 최대 시장 경기 호조세 보이는



김재효

KOTRA 북미지역 본부장
(kimjay@kotra.or.kr)

미국경제는 올 1월 20일 부시2기 행정부가 성공적으로 출범함으로써 지속적인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 집권 이후 누증되어 온 재정수지 적자가 2004년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4,130억달러에 이르고 무역수지 적자도 6,517억달러에 이르는 등 이른바 ‘쌍둥이 적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이와 연계된 달러화 가치의 급락세로 국제적인 환율환경의 불확실성 증가라는 문제도 떠안고 있다.

‘부시 2기’ 성공적 출범으로 경기 호조세 지속될 듯

이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미국경제는 여전히 질과 양적인 측면에서 세계 최고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GDP 규모는 10조 8,800억달러로 전세계의 30%를 점하고 있으며, 총수입액도 1조 3,031억달러로 전세계 수입시장의 17%를 차지하고 있고, 전세계 외국인직접투자(FDI)액의 25%에 달하는 1,519억달러를 미국 투자자들이 차지하고 있다.

‘9.11 테러’ 사태 이후 어려움을 겪어 왔던 미국경제는, 2003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지난해에는 GDP 성장률 4.4%를 기록,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낸 바 있다. 이는 저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큰 폭의 민간 소비 증가와 활발한 기업투자에 힘입은 바 크다.

계속되는 테러위협과 이라크 문제의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부시 행정부는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지속적인 감세 및 투자활성화 정책으로 경제성장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1월 이후 경기선행지수와 소비자신뢰지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해보다는 다소 낮지만 3.5%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경제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과 투자유치 환경도 전체적으로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흑자가 2004년에 무려 50.7% 증가한 198억달러에 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시의 재선에도 불구하고 농산물과 서비스·자동차·항공기 등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이 심화되고 섬유와 철강·석유화학 등 주요 수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중국이 위안화 평가절상시 이를 한국 등 주요 무역파트너국 통화절상 압력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달러화 약세 및 위안화 절상 가능성, 한·미 FTA 협정은 대미 수출에 큰 영향

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우리 기업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첫째, 달러화 약세와 위안화 절상 가능성이 있다. 최근 달러 대비 원화가 1,020원대까지 하락하는 등 달러화 약세는 2005년에도 지속되고 있다.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아시아 주요 흑자국에 대한 환율 문제가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일부에서는 1천원대 미만으로 떨어질 것을 전망하고 있기도 하다. 이로 인해 우리 기업은 환율로 인한 수출 부담을 안게 되었다.

둘째, 한·미 FTA 협정이다. 한·미 FTA 협정 협의가 시작되고 빠른 시일 내에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영화산업 보호를 위한 스크린쿼터 문제로 장기간 표류 중인 한·미투자협정(BIT)의 체결도 FTA 협정 진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양국간의 의견 차이에도 불구하고 FTA 협정 체결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만큼 한·미 FTA 협정은 2005년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협정 체결시 그동안 빈번히 제기되던 우리 상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 등 수입제한 조치들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관세·비관세 장벽이 제거되면 대미 수출에 유리한 면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자동차·통신·반도체 수요 지속적으로 증가

2004년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미국경기의 호조에 힘입어 미국 수입통계 기준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한 462억달러를 기록하였다. 2005년에도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10% 내외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미국의 6대 수입국으로 부상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참고로 6대 수입국인 영국은 전년 대비 8.4% 증가한 464억달러를 수출하였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대형TV 및 IT 제품관련



기업들이 호조를 보이고 섬유·철강 관련 기업들은 다소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대 대미 수출품목인 자동차의 경우, 2005년에는 8% 가량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최근 미국에서 각광받고 있는 SUV 중심의 트럭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마케팅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지속적인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중고차가격을 높이기 위한 브랜드 인지도 향상 및 품질 제고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대미 수출2위 품목인 무선통신기기의 경우에는 30% 이상의 높은 수출 증가율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휴대폰을 이용한 위성방송(DMB)이 보편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W-CDMA로 대표되는 제3세대 휴대폰 시장이 부상하고 있으므로, 동 시장의 선점을 통해 카메라폰의 열풍을 이어갈 새로운 모멘텀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최근 대형TV를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가전기기의 경우에도 수출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제품의 이미지가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같이 2005년에도 수출 주력품목의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대미 3대 수출품목, 즉 자동차·무선통신기기·반도체의 비중이 2002년 42%, 2003년 46%, 2004년 49%로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어 수출품목 편중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품목은 미국의 경기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수요가 변동되는 품목으로 이들의 호부진에 따라 우리의 대미 수출은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안정적인 수출기반 조성과 중장기적인 대미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품목의 다변화 및 틈새품목 발굴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제품이미지를 활용한 주력품목의 파생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이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 마케팅이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시장특성을 활용한 새로운 소재, 기능 및 아이디어 상품을 개발하여 중소기업형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

미국기업의 해외 아웃소싱 적극 활용해야

시장확대를 위해서는 시장의 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주요 수출확대 전략은 물류환경 변화에 부응한 공급자 서비스경쟁력 확보, 해외 아웃소싱 추세를 활용한 OEM 수출 확대, 정부조달시장·히스패닉시장 등 틈새시장에 대한 수출마케팅 강화, 확대되는 온라인시장 수출기반 구축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물류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공급자 서비스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미국 기업들의 해외 아웃소싱은 생산비 절감 또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 공급업체들의 적기 납품을 위한 미국 내 물류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들어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개발되고 운항 속도도 50% 이상 빨라지면서 파나마운하를 거쳐 뉴욕항으로 직송하는 화물이 급증하기 시작하여, 뉴욕항이 최대 소비처인 미 동부지역의 물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뉴욕항을 기반으로 하는 대형 물류센터들이 급속히 확충되고 있으며, KOTRA는 이 같은 환경변화에 맞춰 뉴욕시 인접지역에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물류센터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둘째, 해외 아웃소싱 추세를 대미 OEM 수출 확대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부품산업은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충분히 갖춘 분야로 경쟁국에 비해 시장진출이 용이하다. 수출상담회, 전문 시장개척단 참가 등을 통한 적

극적인 해외마케팅 노력이 필요한 분야이다.

셋째, 수출유망 틈새시장에 대한 수출마케팅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정부조달시장은 현재 테러위협 등에 따라 IT 및 보안 분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진출 초기로 직접납품의 애로점 등으로 인해 점유율이 미미한 실정이지만 1%만 점유한다 하더라도 50억달러의 수출효과가 있다. 특히 전체 조달시장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국방조달 분야에 대한 진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근 국방조달 '외국비교시험(FCT: Foreign Comparative Testing)' 프로그램 참가를 통한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최근 군사용 컴퓨터로 FCT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662만달러에 달하는 초기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지속적인 추가납품을 기대하고 있다.

미국 내 최대 소수계인 히스패닉시장을 놓고 미국 내 대기업들도 이들을 위한 사용설명서 및 차별화된 TV광고 등 치열한 마케팅 경쟁을 전개하고 있다. 정보통신·의료기기·식품·화장품·생활용품 등은 초기 진출시 유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등 일부 대기업형 품목을 중심으로 히스패닉시장에 대한 초기접근을 강화하고 있다. 중견기업도 시장 세분화 전략을 도입, 시장진출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온라인시장의 수출기반 구축도 중요하다. 온라인시장은 인터넷의 발달과 초고속 인터넷망의 보급으로 연간 60% 이상 성장세를 보이며 미래형 신시장으로 발전하고 있다. 2004년 3분기 미국의 전체 소매판매 중 온라인을 통한 판매는 176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2001년에 비해 전체 소매판매 규모는 17.3% 증가한 반면, 온라인 판매는 무려 112.4%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온라인시장 진출 방식은 각종 온라인매체에 대해 벤더(vendor)·셀러(seller) 등록을 통한 직접판매와 기존 파워셀러와의 계약에 의한 간접판매가 있다. 또한 안정적 시장확보를 위해서는 재고판매 거점확보, 신속배송, 교환·반품 등 A/S 시스템 완비 등 현지 직판을 위한 물류거점 마련이 선결과제이다. ■

주요 경제지표

	국내총생산 (GDP)	국민총소득 (GNI)	1인당 GNI	제조업 생산지수	제조업 가동률지수	도소매 판매액지수	총취업자	실업률	소비자 물가지수	광의통화 (M2) (평잔)
	10억원		달러	2000=100			1,000명	%	2000=100	10억원
1998	484,103	476,245	7,355	68.3	86.8	80.6	19,938	7.0	97.0	596,168.3
1999	529,500	523,355	9,438	85.4	97.7	91.1	20,291	6.3	97.8	676,674.7
2000	578,665	576,160	10,841	100.0	100.0	100.0	21,156	4.1	100.0	691,393.5
2001	622,123	621,028	10,162	100.2	95.9	106.6	21,572	3.8	104.1	739,337.0
2002	684,264	685,069	11,493	108.4	99.7	115.4	22,169	3.1	106.9	824,227.8
2003	721,346 p	722,356 p	12,646 p	114.0	99.7	114.2	22,139	3.4	110.7	888,988.6
2004	-	-	-	-	-	-	-	-	-	-
2002 12	188,591	189,528	-	113.9	99.5	122.5	22,052	3.1	108.3	875,405.5
2003. 1	-	-	-	108.0	96.9	119.1	21,562	3.5	109.0	880,250.7
2	-	-	-	102.0	91.9	105.4	21,498	3.7	109.6	883,643.0
3	165,057 p	165,406 p	-	115.8	102.9	116.3	21,837	3.6	110.9	892,494.8
4	-	-	-	113.5	103.0	113.2	22,156	3.3	110.7	890,351.6
5	-	-	-	111.6	99.7	115.8	22,370	3.2	110.5	886,410.8
6	176,098 p	174,913 p	-	112.6	99.9	112.1	22,383	3.3	110.2	886,769.4
7	-	-	-	108.0	94.0	110.2	22,456	3.4	110.1	886,242.9
8	-	-	-	107.9	93.7	109.0	22,126	3.3	110.6	886,880.8
9	179,618 p	180,298 p	-	112.6	97.3	113.9	22,301	3.2	111.6	891,154.2
10	-	-	-	126.7	109.2	117.6	22,452	3.3	111.7	885,171.7
11	-	-	-	122.3	103.0	116.1	22,425	3.4	111.5	896,674.7
12	200,574 p	201,739 p	-	126.9	104.9	121.0	22,096	3.6	112.0	901,818.6
2004. 1	-	-	-	113.6	94.7	116.1	21,936	3.7	112.7	901,048.5
2	-	-	-	119.9	100.5	107.9	22,005	3.9	113.2	906,803.8
3	178,742 p	179,037 p	-	129.7	108.0	117.2	22,371	3.8	114.3	916,675.5
4	-	-	-	126.7	105.4	113.2	22,673	3.4	114.3	918,104.4
5	-	-	-	127.3	104.8	113.1	22,738	3.3	114.2	921,047.9
6	192,332 p	191,062 p	-	126.9	104.7	113.9	22,822	3.2	114.2	925,909.9
7	-	-	-	122.3	100.0	110.1	22,750	3.5	114.9	927,447.0
8	-	-	-	119.4	96.6	106.8	22,382	3.5	115.9	930,254.5
9	196,317 p	197,057 p	-	123.8	98.8	113.1	22,809	3.2	115.9	938,988.9
10	-	-	-	134.3	107.0	114.7	22,901	3.3	115.9	937,308.7
11	-	-	-	134.9 p	107.7 p	114.3 p	22,802	3.3	115.2	940,819.9
12	-	-	-	132.8 p	104.4 p	121.0 p	22,495	3.7	115.4	946,438.9
2005. 1	-	-	-	-	-	-	-	-	116.2	-

〈자료 : 한국은행 주요경제지표(2005. 2. 15)〉

	골금리 (억일물)	회사채 수익률	경상수지			자본 수지	금 및 외환 보유액	수출	수입	대미 환율	
			상품	서비스	소득						
			100만달러								100만달러
%											
1998	15.1	15.1	40,371.2	41,665.0	1,024.1	-5,638.3	-3,196.7	52,040.8	132,313	93,282	1,207.8
1999	4.9	8.9	24,521.9	28,463.0	-651.0	-5,159.0	2,040.3	74,054.5	143,686	119,752	1,145.4
2000	5.1	9.4	12,250.8	16,953.6	-2,847.8	-2,421.3	12,110.0	96,198.1	172,268	160,481	1,259.7
2001	4.7	7.1	8,032.6	13,488.0	-3,872.1	-1,198.1	-3,390.8	102,821.4	150,439	141,098	1,326.1
2002	4.2	6.6	5,393.9	14,777.4	-8,197.5	432.3	6,251.5	121,412.5	162,471	152,126	1,200.4
2003	4.0	5.4	11,949.5	21,952.0	-7,424.2	326.3	13,909.4	155,352.4	193,817	178,827	1,197.8
2004	3.6	4.7	27,612.8 p	38,160.7 p	-8,768.8 p	724.9 p	8,319.1 p	199,066.1	253,908 r	224,436 r	1,043.8
2002 12	4.3	5.9	-732.3	432.1	-1,080.6	188.6	2,045.6	121,412.5	15,026	14,452	1,200.4
2003. 1	4.3	5.5	-467.8	760.1	-1,185.3	270.8	594.4	122,905.2	14,320	14,495	1,170.5
2	4.3	5.3	32.2	473.0	-687.8	448.3	452.5	123,988.2	13,337	13,858	1,186.8
3	4.3	5.4	-1,120.8	-33.8	-305.8	-564.4	321.0	123,824.5	15,379	15,870	1,252.9
4	4.2	5.4	-209.4	1,346.4	-269.3	-1,190.6	-1,032.7	123,619.3	15,721	14,759	1,213.1
5	4.1	5.3	1,184.1	1,626.6	-456.9	219.3	1,269.3	128,341.6	14,676	13,524	1,206.6
6	4.0	5.3	1,598.2	2,712.6	-760.1	-58.4	2,468.6	131,659.9	15,656	13,428	1,193.1
7	3.8	5.7	345.7	1,447.3	-1,010.1	186.0	-878.3	132,906.1	15,432	14,898	1,180.0
8	3.7	5.9	1,231.6	2,285.0	-967.4	202.6	3,956.8	136,189.3	15,375	13,541	1,179.9
9	3.7	5.2	2,092.4	3,060.7	-655.5	50.1	561.0	141,534.8	17,021	14,531	1,150.2
10	3.7	5.2	2,518.9	2,985.0	-246.8	15.7	533.9	143,319.5	18,930	16,537	1,177.3
11	3.8	5.5	2,858.3	2,846.3	-248.3	441.8	4,383.6	150,339.2	18,242	15,761	1,202.6
12	3.8	5.6	1,886.1	2,442.8	-630.9	305.1	1,279.3	155,352.4	19,729	17,625	1,197.8
2004. 1	3.8	5.7	2,338.4 p	2,985.5 p	-774.9 p	345.7 p	391.3 p	157,449.6	18,988 r	16,203 r	1,173.6
2	3.8	5.6	2,881.4 p	2,985.1 p	-449.7 p	587.8 p	2,473.4 p	163,007.1	19,138 r	17,466 r	1,174.5
3	3.8	5.4	910.7 p	2,669.5 p	-690.5 p	-726.0 p	593.1 p	163,556.9	21,176 r	19,116 r	1,153.6
4	3.8	5.3	1,142.5 p	3,256.4 p	-392.7 p	-1,448.3 p	979.4 p	163,635.3	21,484 r	18,823 r	1,167.7
5	3.8	5.1	3,708.4 p	3,793.3 p	-228.2 p	294.2 p	-1,671.7 p	166,542.6	20,835 r	17,893 r	1,165.7
6	3.8	4.9	2,179.5 p	3,402.6 p	-922.4 p	-24.4 p	-1,988.9 p	167,029.7	21,611 r	18,541 r	1,152.5
7	3.8	4.8	3,246.6 p	4,293.9 p	-893.6 p	8.6 p	-1,681.7 p	168,006.4	20,996 r	18,385 r	1,168.3
8	3.6	4.4	1,039.0 p	1,840.1 p	-1,094.3 p	285.0 p	810.9 p	170,492.0	19,791 r	18,111 r	1,153.8
9	3.5	4.1	2,812.8 p	3,732.6 p	-915.4 p	233.1 p	-985.5 p	174,448.1	20,828 r	18,188 r	1,147.9
10	3.5	4.0	2,418.6 p	2,839.6 p	-536.4 p	151.7 p	-660.9 p	178,388.3	22,664 r	20,356 r	1,126.0
11	3.3	3.9	2,939.7 p	3,536.9 p	-676.4 p	317.6 p	8,214.9 p	192,602.3	23,128 r	20,370 r	1,047.9
12	3.3	3.7	1,995.2 p	2,825.7 p	-1,194.3 p	699.9 p	1,844.8 p	199,066.1	23,268 p	20,983 p	1,043.8
2005. 1	3.3	4.1	(27,612.8)	(38,160.7)	(-8,768.8)	(724.9)	(8,319.1)	199,699.3	22,545 p	19,314 p	1,026.4

주 : * 괄호안은 2004년 1~12월 중 실적임.

** p는 잠정치, r은 수정치임.

공개시장조작 (Open Market Operation)

중앙은행이 단기금융시장이나 채권시장과 같은 공개 시장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공채 등 유가증권을 사고 팔아 금융기관과 민간의 자금사정을 변화시키고 이를 통해 유동성을 조절하는 정책수단이다.

공개시장조작정책은 지급준비율정책 및 재할인을정책과 더불어 중앙은행의 3대 간접통화관리수단의 하나로서 정책효과가 금융시장의 가격메커니즘을 통해 나타나고 중앙은행이 필요에 따라 조작 시기 및 규모를 신중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공개시장조작은 가장 전통적인 통화신용 조절수단으로서 오늘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주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공개시장조작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유동성과 안전성을 갖춘 대상증권(주로 국채)의 충분한 공급과 유통시장의 발달, 자유로운 시장금리의 형성 등 금융시장의 제반여건이 조성되어 있어야 한다.

공개시장조작 수행방식은 채권의 단순매매(outright sales and purchases)와 환매조건부매매(RP매매 : Repurchase Agreement) 두 가지가 있다. 단순매매는 시중유동성을 기초적으로 조절할 때 활용하는 수단으로서

중앙은행이 채권을 완전히 사거나 파는 것을 말하며, 환매조건부매매는 일시적인 시중유동성 조절수단으로서 중앙은행이 일정기간 후 다시 매입할 것을 조건으로 보유채권을 매각하거나 반대로 일정기간 후 다시 매각할 것을 조건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공개시장조작정책은 1961년 11월 통화안정증권이 발행되면서 시작하여 1969년 2월부터는 은행을 상대로 국공채매매조작이 가능해진 이래 1977년에는 매매대상기관의 범위를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한편, 매매방식도 단순매매와 환매조건부매매로 구분하였다.

1986년 이후 경상수지 흑자전환에 따른 해외부문의 통화증발을 흡수하기 위해 공개시장조작을 본격적으로 활용하였으며, 1990년대 들어서는 시장원리에 입각한 공개시장조작의 정착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활용도를 꾸준히 높여 왔다. 즉, 1993년 3월에는 환매조건부 국공채매매조작에 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하였고 1997년 8월에는 한국은행 금융결제망(BOK-wire)을 통한 전자입찰방식을 시행함으로써 시장메커니즘을 통한 공개시장조작정책 운용체계를 정착시켰다.

나라경제 정기구독 신청서

KDI 경제정보센터 나라경제 편집실 앞
FAX : (02) 3295-0744

아래 사항을 기입하신 후 팩스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독기간 : 2005년 ____월호부터 200__년 ____월호까지 (____년)

▶ 신청부수 : ____부

▶ 신청자 : 개인 기관

<개인> 성명 : 전 화 :

직장명 : 직 위 :

우송처(주소) :

e-메일 :

<기관> 기관명 : 전 화 :

주 소 :

우송처(부서) :

신청자 성명 :

정기구독회원이 되시면

- 원하시는 곳에서 편안히 책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구독료가 절약됩니다.
- 경제정책자료를 보내 드립니다.

정기구독료

- 1년 25,000원
- 2년 45,000원

구독 문의 : 전화 : (02)958-4656

(02)958-4318

e-메일 : nara@kdi.re.kr



경제정책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참고서가 여기 있습니다



2004년판 45,000원

.....

창간 이후 **나라경제**를
모두 영구보존판으로 묶었습니다.

나라경제 통합본은 경제사적 자료로서의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활동을 하시는 모든 분들께 중요한 지침서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KDI경제정보센터

130-012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7-41

전화 : (02)958-4318

팩스 : (02)3295-0744

경제정보의 세계로 오십시오

<http://epic.kdi.re.kr>



경제정책정보
경제부처 및 유관기관에서 발표되는 모든 경제정책자료를 신속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의 언론 경제보도
국내 언론의 주요 경제논단과 세계 주요 외신의 경제관련 기사를 요약·정리하여 제공합니다.

멀티미디어 자료
경제이슈에 대한 설명자료를 동영상으로 제공합니다.

국내의 기관자료(Infolink)
검색로봇이 매일 세계 주요 경제관련 웹사이트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분류합니다.

클릭 경제교육
중·고등학교 사회과 선생님들을 위한 경제관련 자료실입니다.

플러그 휴식 -

11%의 에너지가 돌아옵니다

무심코 꽂아둔 플러그를 통해 연간
5천억원의 전기가 새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집의 플러그를 쉬게 하면 전기요금의
11%가 줄어들고, 전기기구의 수명도 길어집니다.
가까이에 있는 에너지부터 쉬게 해주세요.
대한민국의 에너지 건강지수가 올라갑니다.

한 2,500원